

2021

정책연구 2021-22

#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진 조경옥 · 전아람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1-22

#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

연구 책임 조경옥 | 선임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3장(1절, 3절, 4절)  
4장(3절, 4절), 결론  
공동 연구 전아람 | 전문연구원 | 제2장, 3장 2절, 4장(1절, 2절)

---

자문위원 이해숙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이영환 | 전북대학교 교수  
홍달아기 | 원광대학교 교수

---

연구관리 코드 : 21JU1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내용 .....	3
2. 연구방법 및 절차 .....	8
제2장 전라북도 저출산 현황 .....	11
1. 인구변화 .....	13
2. 혼인 및 출산의 변화 .....	22
3. 저출산 영향요인 .....	29
제3장 저출산 정책 분석 .....	61
1. 중앙의 저출산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특성 .....	63
2.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성과 및 추진방향 분석 .....	67
3. 2021년도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분석 .....	78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92
제4장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 수요분석 .....	97
1.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평가 및 수요 : 전문가 의견조사 .....	99
2. 저출산 인식 및 정책욕구 : 심층면접조사 .....	118
3. 요약 및 시사점 .....	132
제5장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 .....	135
1. 정책 추진 방향 .....	137
2. 정책추진 체계 .....	141
3. 분야별 추진과제 .....	142
참고문헌 .....	173

## ■ 표목차 | Contents

〈표 2-1〉 시도별 인구 현황	13
〈표 2-2〉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현황	14
〈표 2-3〉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연령별 인구	15
〈표 2-4〉 전라북도 시군별 연령 3계층별 인구 구성비	17
〈표 2-5〉 시도별 인구 증감 추이(2010~2020)	18
〈표 2-6〉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0~2047)	19
〈표 2-7〉 주요 연령계층별 장래추계인구 구성비(2020~2047)	21
〈표 2-8〉 전국 및 전북 일반혼인율	23
〈표 2-9〉 전국 및 전북 신혼부부 현황	24
〈표 2-10〉 전국 및 전북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26
〈표 2-11〉 전라북도 시군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	28
〈표 2-12〉 전라북도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 연령 여성	29
〈표 2-13〉 전라북도 시군별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 연령 여성	30
〈표 2-14〉 전라북도 불임 치료 환자 수 추이	40
〈표 2-15〉 전국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41
〈표 2-16〉 전라북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42
〈표 2-17〉 전라북도 성별·연령별 고용률	43
〈표 2-18〉 전라북도 시군별·성별 고용률	44
〈표 2-19〉 전국 및 전북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45
〈표 2-20〉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46
〈표 2-21〉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48
〈표 2-22〉 모성보호제도 활용가능 여부(2019)	48
〈표 2-23〉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2019)	49
〈표 2-24〉 가사분담 실태	51
〈표 2-25〉 전국 주택 종류 및 주택 비율	52
〈표 2-26〉 전국 노후주택 비율	53

〈표 2-27〉 전국 빈집 비율 .....	54
〈표 2-28〉 주택 점유 형태 .....	55
〈표 2-29〉 전국 매매가격지수 추이 .....	56
〈표 2-30〉 전국 전세 가격지수 추이 .....	57
〈표 2-31〉 전국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	58
〈표 2-32〉 전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 .....	59
〈표 2-33〉 전국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	60
〈표 3-1〉 2021년 정책대상별 주요 과제 .....	66
〈표 3-2〉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개요 .....	67
〈표 3-3〉 생애주기별 전라북도 자체사업 .....	68
〈표 3-4〉 대상특성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	70
〈표 3-5〉 지원방식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	72
〈표 3-6〉 지원혜택별 전라북도 자체사업 .....	73
〈표 3-7〉 2021년 제4차 저출산 시행계획 영역별 사업 .....	75
〈표 3-8〉 2021년도 저출산 분야 역점시책 .....	80
〈표 3-9〉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고용 및 소득보장 시책 .....	83
〈표 3-10〉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양육 및 돌봄사업 시책 .....	83
〈표 3-11〉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의료 및 건강 시책 .....	86
〈표 3-12〉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주거 시책 .....	87
〈표 3-13〉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교육 시책 .....	88
〈표 3-14〉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안전 시책 .....	89
〈표 3-15〉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기반시스템 시책 .....	90
〈표 3-16〉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기타 시책 .....	91
〈표 4-1〉 전라북도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 평가 .....	100
〈표 4-2〉 전라북도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 필요성 .....	101
〈표 4-3〉 전라북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정책 평가 .....	102
〈표 4-4〉 전라북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정책 필요성 .....	103

〈표 4-5〉 전라북도 보육·돌봄지원 강화 정책 평가 .....	104
〈표 4-6〉 전라북도 보육·돌봄지원 강화 정책 필요성 .....	105
〈표 4-7〉 전라북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 평가 .....	106
〈표 4-8〉 전라북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 필요성 .....	107
〈표 4-9〉 전라북도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평가 .....	109
〈표 4-10〉 전라북도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필요성 .....	109
〈표 4-11〉 전라북도 출산친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 평가 .....	111
〈표 4-12〉 전라북도 출산친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 필요성 .....	111
〈표 4-13〉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효과 평가 .....	112
〈표 4-14〉 현재수준 대비 전라북도 저출산 시책의 대상 .....	113
〈표 4-15〉 현재수준 대비 전라북도 저출산 시책 목표 .....	113
〈표 4-16〉 현재 수준 대비 전라북도 저출산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	115
〈표 4-17〉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단기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정책 영역 .....	116
〈표 4-18〉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전라북도 개선사항 .....	117
〈표 4-19〉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19
〈표 4-20〉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 실태 및 수요, 정책욕구 요약 및 시사점 .....	132
〈표 5-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타 지자체 사례 .....	146
〈표 5-2〉 일·생활균형센터 운영 타 지자체 사례 .....	167

##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2-1〉 전라북도 성별·연령별 구성비 증감 추이 .....	16
〈그림 2-2〉 시도별 조혼인율 .....	22
〈그림 2-3〉 시군별 조혼인율 .....	23
〈그림 2-4〉 시도별 합계출산율 .....	25
〈그림 2-5〉 시군별 합계출산율 .....	26
〈그림 2-6〉 전국 및 전북 모의 연령별 출산율 .....	27
〈그림 2-7〉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연령 여성 인구의 시도별 역외유출 비교 .....	31
〈그림 2-8〉 전북 가임기 여성의 연령대별 역외유출 .....	32
〈그림 2-9〉 전북 지역별 가임기 여성 연령대별 인구역외유출 .....	32
〈그림 2-10〉 전국 및 전북 성별 초혼 연령추이 .....	33
〈그림 2-11〉 전라북도 시군별·성별 초혼연령 .....	34
〈그림 2-12〉 전국 및 전북 결혼에 대한 견해 .....	35
〈그림 2-13〉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 .....	36
〈그림 2-14〉 자녀의 필요성 .....	37
〈그림 2-15〉 미혼 남녀의 출산에 대한 인식 .....	38
〈그림 2-16〉 전국 및 전북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	39
〈그림 2-17〉 지역별 불임치료 환자 수 .....	40
〈그림 2-18〉 불임치료를 위해 내원한 건강보험 환자 수 및 요양급여비용총액 .....	40
〈그림 2-19〉 전라북도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47
〈그림 2-20〉 전국 및 전북 성별 가사노동시간 .....	50
〈그림 3-1〉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수 및 예산 비중 비교 .....	68
〈그림 3-2〉 생애주기별 전라북도 자체사업 수 및 예산 비중 비교 .....	69
〈그림 3-3〉 대상특성별 전라북도 자체사업 수 및 예산 비중 비교 .....	71
〈그림 3-4〉 지원방식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비중 .....	72
〈그림 3-5〉 지원혜택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및 예산 비중 .....	74

<그림 3-6> 2021년 제4차 저출산 시행계획 영역별 사업 비중 .....	75
<그림 3-7> 2021년 제4차 저출산 시행계획 영역별 사업비 비중 .....	75
<그림 3-8> 국비 제외 저출산 사업 수 및 예산 비중 비교 .....	76
<그림 3-9> 생애주기별 전라북도 국비제외 저출산 사업수 및 예산 비중 비교 .....	77
<그림 3-10>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개요 .....	79
<그림 4-1> 전라북도 향후 혼인율, 출생아수, 청년 인구유출 예상 .....	100
<그림 4-2>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102
<그림 4-3>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104
<그림 4-4> 보육·돌봄지원 강화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106
<그림 4-5>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108
<그림 4-6>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110
<그림 4-7> 출산친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112
<그림 4-8> 현재수준 대비 전라북도 저출산 시책 목표 .....	114
<그림 4-9> 전라북도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 .....	115
<그림 4-10>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 .....	116
<그림 5-1>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추진 체계 .....	141
<그림 5-2> 서울시 청년취업멘토링 사업 : 서울일자리플러스 센터 .....	144
<그림 5-3> 광주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	150
<그림 5-4> 전라북도 산후조리원 현황 및 분만취약지역 .....	157
<그림 5-5> 산(産) - 휴(休) 건강증진센터 설립안 .....	158
<그림 5-6> 어린이 전통놀이 융복합 체험관 사업내용 .....	163
<그림 5-7> 부산 AR·VR 융복합센터 .....	163
<그림 5-8>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도 .....	169

# 1

장

## 서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 필요성 및 내용
  2. 연구방법 및 절차



#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내용

###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은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의 국가이지만 저출산 심화현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평균 1.63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격차를 보임
  -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이 3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함
  -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2019년 30만 3천명)로 떨어진 것은 통계청 중위추계 전망보다 18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이와 같은 저출생 추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을 제정하고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대응을 하고 있음. 제3차 기본계획이 2020년 만료됨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발표함(2020.12.15.)
  - 제1차(2006~2010)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지원 확대, 제2차(2011~2015)에서는 임신·출산지원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 제3차(2016~2020)에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만혼·비혼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신혼 부부 주거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 함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통해 저출산 정책 방향과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저출산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함
  - 재구조화 된 저출산정책 로드맵에서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

었던 국가주도의 출산장려 대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 지속가능 사회'를 위해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 구현'을 목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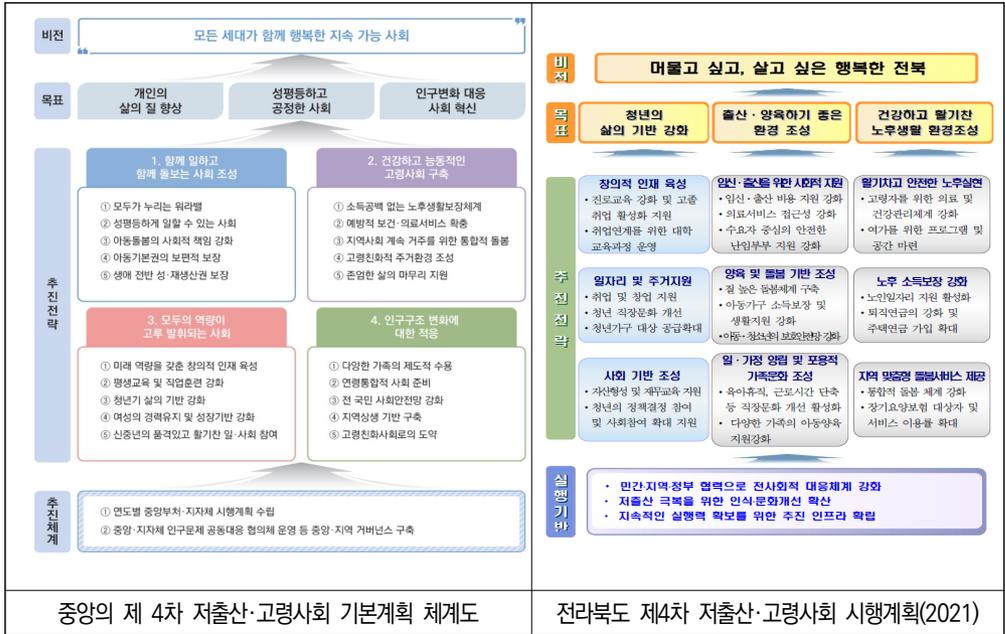
○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족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저출산은 사회·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구조적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 결혼·출산·가족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시대변화와 청년 가치관 변화의 반영, 삶의 질에 대한 젠더적 접근의 강화를 제기함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라는 두 측면의 접근을 균형 있게 병행할 필요성에 기반하여 4대 추진전략 하에 20개 대과제, 180여개의 중과제로 구성됨
- 저출산 대응 주요 핵심정책으로는 ①임신출산 전후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영아수당 신설 등으로 영아기 집중투자 ②아이와 함께하는 시간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 ③ 공보육 50% 확대와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내실화 ④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중앙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저출산 정책추진방향 및 관련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의 정책기조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저출산 대응정책의 추진전략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제시하고 있음

-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전라북도는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와 그 결과를 저출산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향후 5년간(2021~2025)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함. 특히 전북은 청년층의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강화와 관련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함
- 이외에도 모든 산모의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성 평

등한 육아와 돌봄 문화 조성 등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 이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4차 전북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간의 추진전략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필요하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과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함

-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서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성과평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음
- 전북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성 및 특성 관련 지표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감소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즉 전북은 혼인율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 가임기여성인구의 감소, 출생아 수 감소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전략과 대응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지역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구조 특성,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제반 시설의 실태, 제도추진 상의 장애요인, 결혼과 추가출산을 위한 정책대상의 욕구 등의 분석결과가 제 4차 저출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의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와 변화를 탐색하여 전북의 저출산 정책이 중앙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지역의 특성과 정책수요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임신 및 출산·양육, 일·가정양립, 주거실태, 가치관 등 각 영역에서 전북이 당면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정책요구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전북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추진방향, 정책목표,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특히 향후 5년간 전북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의 출산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북의 저출산 정책대응의 시사점을 찾아보고 생애이행단계별 정책수요를 분석하여 맞춤형 전북 저출산 정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나.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연구추진체계와 절차 등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전라북도 저출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를 토대로 전라북도 인구변화와 추이, 혼인 및 출산 현황,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제3장에서는 중앙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검토하고, 전라북도 제3차 저출산 정책 추진성과 및 제4차 추진방향에 대해 정책범주별(예산,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지원방식별, 지원혜택별, 시행계획영역별)로 2020년과 2021년의 특성을 비교분석함. 또

한 2021년도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내용과 특성에 대해 분석함

- 제4장에서는 전국단위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참고하여 전라북도 미혼자와 기혼자의 저출산 의식 및 태도, 욕구 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야별 정책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분석함. 또한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 어려움과 정책욕구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2장, 3장, 4장을 통해 도출된 특성과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제4차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 세부추진과제 등을 발굴하여 제안함

#### 다.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만료됨에 따라 제4차 전라북도 저출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2021~2025)수립에 있어 지역실정과 여건에 부합하는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방향 제시 및 관련 정책과제 발굴로 선제적 대응정책 마련
- 저출산 추진 정책의 성과분석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를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2. 연구방법 및 절차

### 가. 연구방법

#### 1)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결혼출산 동향 및 영향요인, 저출산 정책패러다임 전환 및 저출산 정책영역별 과제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타 지자체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등 사례검토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정부와 지자체 행정자료 검토

##### ○ 각종 통계자료의 분석

- 출산현황 관련 통계청 및 부처별 자료 분석: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통계, 주거실태조사, 사회조사 등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전북의 현황 및 특징 파악
-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최근 미혼 및 기혼자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의식과 태도, 양육에 관한 실태 및 특성 분석

#### 2) 전문가조사

##### ○ 조사목적 :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추진방향 및 정책발굴을 위한 전문가 조사

##### ○ 조사대상 : 저출산·인구정책 관련 교수 및 연구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시군 저출산 및 인구정책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 83명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면접조사 및 이메일 조사 병행

##### ○ 조사내용 : 전북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출산 및 양육환경에 대한 평가, 전북 청년층의 인구유출과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제4차 전북 저출산 정책방향 및 정책요구, 제4차 저출산 정책 중점과제 및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등

### 3) 심층면접조사

- 조사목적 : 생애이행단계별 출산정책 수요조사를 위한 초점집단 면접조사
- 조사대상 : 결혼 전(미혼), 결혼 후~첫째자녀 출산 전(신혼부부), 첫째자녀 출산 후(기혼부부)에 해당하는 미혼 및 기혼남녀 총 18명
- 조사방법 : 반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심층인터뷰
- 조사내용 :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형성, 일·가정양립 등에 대한 인식, 삶의 질과 가치기준에 대한 의견, 성평등 및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지역사회 출산 및 양육 환경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전북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요구, 결혼·출산·양육관련 애로사항 등

### 4)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향과 방법, 연구내용 구성, 정책발굴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전문가조사·심층면접조사의 문항구성 타당성, 적절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정책방향과 세부사업 발굴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수렴 등

## 나.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연구목표	연구방법	분석내용
저출산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분석	- 문헌검토 - 행정자료 분석	- 저출산 관련 분야별 선행연구 검토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과 주요특징 - 2021년도 중앙 및 지방 시행계획의 검토
전라북도 저출산 현황과 원인분석	- 통계자료 분석 - 행정자료 분석	- 인구구성 변화 및 추이 - 결혼 및 출산율의 변화 - 고용 및 일·가정양립 현황 - 주거환경: 주거실태, 주택유형, 주택가격 - 보육 및 교육 인프라 현황, 양육부담 실태 - 가치관 및 태도: 성평등 의식, 결혼관, 자녀관 등
저출산 정책 성과분석	- 행정자료 분석	- 제3차 전북 저출산 대응 정책추진 성과 분석 - 제4차 전북 저출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과 평가 - 정책합의 및 시사점
저출산 정책 수요조사	- 실태조사 자료분석 - 전문가조사 - 초점집단면접조사	- 전라북도 미혼·기혼자의 인식과 태도, 정책욕구 - 전라북도 출산정책 평가 및 정책 우선과제 평가 - 생애이행단계별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욕구
결론 및 정책과제 도출	- 전문가 의견수렴 - 연구결과 종합	- 제4차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

# 2

장

## 전라북도 저출산 현황

Jeonbuk Institute

- 
1. 인구변화
  2. 혼인 및 출산의 변화
  3. 저출산 영향요인



## 제 2 장 전라북도 저출산 현황

### 1. 인구변화

#### 가. 인구구조

-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829,023명이며 그 중 전라북도의 인구는 1,804,104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5%가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음
  - 전라북도는 남성인구가 896,874명, 여성인구가 907,230명으로 성별 인구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여성인구 비율이 50.3%로 남성보다 약간 더 많음
  - 여성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특별시로 여성인구 비율이 51.4%로 나타났으며 남성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광역시로 남성인구 비율이 51.4%로 나타남

〈표 2-1〉 시도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51,829,023	9,668,465	3,391,946	2,418,346	2,942,828	1,450,062	1,463,882	1,136,017	355,831
남성	25,841,029	4,701,723	1,661,000	1,193,109	1,473,943	717,348	730,699	583,708	177,568
여성	25,987,994	4,966,742	1,730,946	1,225,237	1,468,885	732,714	733,183	552,309	178,26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13,427,014	1,542,840	1,600,837	2,121,029	1,804,104	1,851,549	2,639,422	3,340,216	674,635
남성	6,754,469	776,505	811,591	1,082,634	896,874	930,615	1,329,211	1,681,423	338,609
여성	6,672,545	766,335	789,246	1,038,395	907,230	920,934	1,310,211	1,658,793	336,026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

- 2020년 기준 전라북도 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주시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36.4%에 해당하는 657,43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장수군으로 22,085명(전라북도 인구의 1.2%)이 등록되어 있음
  - 전라북도의 지역별 인구는 전주시(657,432명), 익산시(282,276명), 군산시(267,859명), 순으로 인구가 많으며 장수군(22,085명), 무주군(24,036명), 진안

군(25,394명) 순으로 인구가 적음

- 14개 시군 중 6개의 시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는 1,479,187명으로 전체 인구의 82.0%에 해당하며 8개의 군 지역 인구는 324,917명(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인구 구성비를 비교해 볼 때, 완주군과 임실군의 남성 비율이 각각 51.4%, 51.1%로 상대적으로 남성 인구가 많음. 반면 순창군의 경우 여성 비율이 5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의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체	1,804,104	657,432	267,859	282,276	108,508	80,662	82,450	
남성	896,874	323,542	135,332	140,573	53,791	39,560	40,844	
여성	907,230	333,890	132,527	141,703	54,717	41,102	41,606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체	91,609	25,394	24,036	22,085	27,314	27,810	54,529	52,140
남성	47,077	12,832	11,959	11,000	13,966	13,520	26,964	25,914
여성	44,532	12,562	12,077	11,085	13,348	14,290	27,565	26,226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

- 전라북도의 성별·연령별 인구를 확인한 결과, 2020년 기준 가장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는 남성(154,888명)과 여성(144,634명) 모두 50대로 나타남. 가장 인구수가 적은 연령대는 남성은 80세 이상(33,910명), 여성은 0~9세(62,690명)로 나타남
  - 19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비율은 전북의 경우 남성 17.5%, 여성 16.2%로 전국 비율인 남성 17.5%, 여성 16.3%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한편 주출산 연령대(25~34세)를 포함하고 있는 20~29세와 30~39세의 연령대 인구 비중은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출산연령대 인구의 감소로 인한 저출산 심화가 예상된다
  - 60세 이상 노인 비율은 전북(남성 26.3%, 여성 32.7%)이 전국(남성 21.8%, 여성 26.2%)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2-3〉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연령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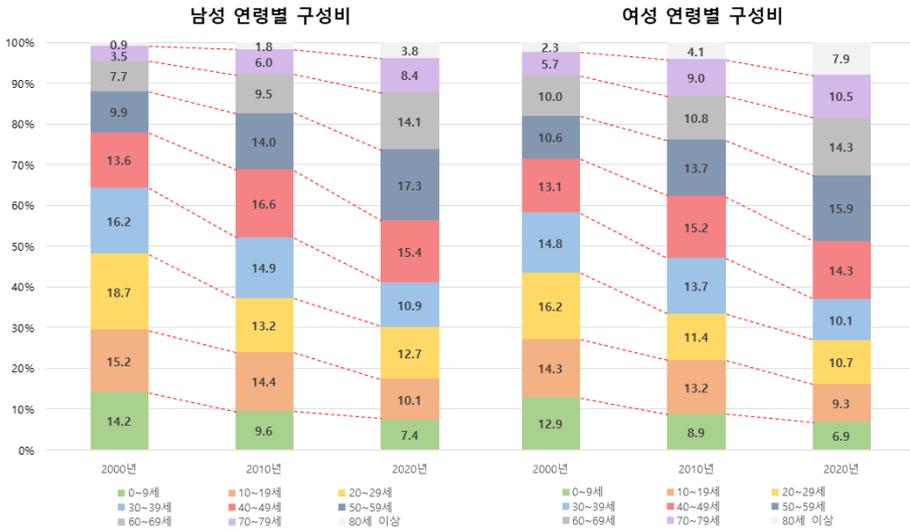
(단위 : 명, %)

	전국				전북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전체	25,841,029	100.0	25,987,994	100.0	896,874	100.0	907,230	100.0
0~9세	2,035,712	7.9	1,934,358	7.4	66,002	7.4	62,690	6.9
10~19세	2,478,773	9.6	2,314,563	8.9	90,603	10.1	84,360	9.3
20~29세	3,573,667	13.8	3,232,486	12.4	114,209	12.7	97,255	10.7
30~39세	3,541,548	13.7	3,331,569	12.8	97,465	10.9	91,547	10.1
40~49세	4,214,971	16.3	4,079,816	15.7	138,330	15.4	129,947	14.3
50~59세	4,362,544	16.9	4,282,470	16.5	154,888	17.3	144,634	15.9
60~69세	3,298,604	12.8	3,445,902	13.3	126,312	14.1	129,517	14.3
70~79세	1,664,340	6.4	2,033,906	7.8	75,155	8.4	95,185	10.5
80세 이상	670,870	2.6	1,332,924	5.1	33,910	3.8	72,095	7.9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

- 전라북도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는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 이하 인구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2000년 대비 2010년은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비 2020년은 감소하였고, 50대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 이하 인구 중 특히 20대의 구성비는 2000년 대비 2020년 남성이 6.0%p, 여성이 5.5%p 감소하여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구성비가 증가한 세대는 남성의 경우 50~60대 장년층 인구 구성비가 각각 7.4%p, 6.4%p 증가하였고 여성은 80세 이상 구성비가 5.6%p, 50대 구성비가 5.3%p 증가하여 여성은 80세 이상 고령층, 남성은 50~60세 장년층 인구 구성비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2-1〉 전라북도 성별·연령별 구성비 증감 추이

- 전라북도의 시군별 인구를 연소인구, 생산가능인구, 노령인구로(연령 3계층) 나누어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인구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임실군의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전라북도 남성 연소인구는 12.1%, 생산가능인구는 69.7%, 노령인구는 18.1%로 2000년 대비 연소인구는 8.8%p, 생산가능인구는 1.6%p가 감소한 반면 노령인구는 1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2020년 기준 연소인구 11.3%, 생산가능인구 64.0%, 노령인구 24.7%로 2000년 대비 연소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각각 7.8%p, 4.2%p 감소한 반면 노령인구는 12.0%p가 증가함
  -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주시로 2020년 기준 남성의 인구구성비는 연소인구 14.1%, 생산가능인구 72.8%, 노령인구 13.1%로 2000년 대비 연소인구는 9.8%p가 감소한 반면 생산가능인구와 노령인구는 각각 1.2%p, 8.6%p가 증가함. 여성의 경우 연소인구 12.9%(2000년 대비 -9.8%p), 생산가능인구 70.3%(2000년 대비 -0.3%p), 노령인구 13.1%(2000년 대비 +9.0%p)로 나타남
  - 반면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임실군의 경우 남성 인구 구성비가 연소인구 8.1%, 생산가능인구 62.2%, 노령인구 29.8%로 2000년 대비 -5.8%p,

-8.9%p, +14.9%p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연소인구 7.7%, 생산가능인구 48.9%, 노령인구 43.4%로 2000년 대비 -5.9%p, -15.1%p, +21.1%p의 증감이 나타남

〈표 2-4〉 전라북도 시군별 연령 3계층별 인구 구성비

(단위 : %)

		2000			2020		
		연소인구 (1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 (15~64세)	노령인구 (65세 이상)	연소인구 (1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 (15~64세)	노령인구 (65세 이상)
전라북도	남	20.9	71.3	7.8	12.1	69.7	18.1
	여	19.1	68.2	12.7	11.3	64.0	24.7
전주시	남	23.9	71.6	4.5	14.1	72.8	13.1
	여	21.6	70.6	7.8	12.9	70.3	16.8
군산시	남	21.2	73.0	5.8	12.9	70.9	16.3
	여	19.7	69.9	10.4	12.6	65.8	21.6
익산시	남	22.7	70.9	6.4	11.6	71.4	16.9
	여	20.9	68.4	10.7	11.1	66.1	22.8
정읍시	남	20.9	69.0	10.1	10.4	66.8	22.7
	여	18.5	65.3	16.2	9.5	57.6	33.0
남원시	남	19.4	69.6	10.9	11.2	65.6	23.3
	여	17.3	66.6	16.1	9.7	57.5	32.8
김제시	남	16.3	72.0	11.7	9.1	64.7	26.1
	여	15.3	65.9	18.7	8.4	54.0	37.6
완주군	남	16.7	73.2	10.1	12.1	68.0	19.9
	여	16.6	67.0	16.4	12.4	60.6	27.1
진안군	남	14.2	70.9	14.9	8.1	62.3	29.7
	여	13.3	65.2	21.5	8.2	51.3	40.5
무주군	남	16.6	69.1	14.3	9.2	63.1	27.6
	여	14.9	64.9	20.3	8.4	52.1	39.5
장수군	남	17.9	68.4	13.7	9.2	62.4	28.4
	여	16.1	64.0	19.9	8.7	51.4	40.0
임실군	남	13.9	71.1	14.9	8.1	62.2	29.8
	여	13.6	64.0	22.3	7.7	48.9	43.4
순창군	남	14.4	69.9	15.6	9.8	62.6	27.6
	여	13.4	64.0	22.5	8.8	51.1	40.1
고창군	남	16.2	71.1	12.7	9.0	63.2	27.8
	여	14.7	64.8	20.6	7.8	51.2	40.9

		2000			2020		
		연소인구 (1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 (15~64세)	노령인구 (65세 이상)	연소인구 (1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 (15~64세)	노령인구 (65세 이상)
부안군	남	16.4	71.7	11.9	8.4	64.1	27.5
	여	15.0	65.4	19.5	7.8	53.1	39.1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

## 나. 인구감소

- 전국 인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 처음으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짐. 반면 전북의 경우 2015년까지는 인구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2016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일어남
- 전국의 2010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은 2.6%로 약 131만 명의 인구가 증가 하였음.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의 인구 증가율이 18.1%로 가장 높았고, 경기 13.9%, 인천 6.7% 순으로 동기간 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10년 대비 2020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6.2%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부산(-4.9%)과 대구(-3.7%)도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전라북도의 경우 2010년 대비 2020년 인구가 약 7만 명 감소하여 해당 기간 인구 감소율이 -3.5%에 달해 전남과 함께 광역시를 제외한 9개의 도지역 중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표 2-5〉 시도별 인구 증감 추이(2010~2020)

(단위 : 만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전국	5,052	5,073	5,095	5,114	5,133	5,153	5,170	5,178	5,183	5,185	5,183	2.6
서울	1,031	1,025	1,020	1,014	1,010	1,002	993	986	977	973	967	-6.2
부산	357	355	354	353	352	351	350	347	344	341	339	-4.9
대구	251	251	251	250	249	249	248	248	246	244	242	-3.7
인천	276	280	284	288	290	293	294	295	295	296	294	6.7
광주	145	146	147	147	148	147	147	146	146	146	145	-0.3
대전	150	152	152	153	153	152	151	150	149	147	146	-2.6
울산	113	114	115	116	117	117	117	117	116	115	114	0.9
세종	-	-	11	12	16	21	24	28	31	34	36	214.6
경기	1,179	1,194	1,209	1,223	1,236	1,252	1,272	1,287	1,308	1,324	1,343	13.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강원	153	154	154	154	154	155	155	155	154	154	154	0.9
충북	155	156	157	157	158	158	159	159	160	160	160	3.3
충남	208	210	203	205	206	208	210	212	213	212	212	2.2
전북	187	187	187	187	187	187	186	185	184	182	180	-3.5
전남	192	191	191	191	191	191	190	190	188	187	185	-3.5
경북	269	270	270	270	270	270	270	269	268	267	264	-1.9
경남	329	331	332	333	335	336	337	338	337	336	334	1.5
제주	57	58	58	59	61	62	64	66	67	67	67	18.1

주 : 증감률은 2010년 대비 2020년 인구의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 2020년 이후 2047년까지의 장래인구를 추계한 결과, 전국 인구는 2020년 5,178만 명에서 2047년 4,891만 명으로 약 287만 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역시 동기간 약 21만 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전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 2030년대에 들어서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2047년 인구 감소율은 -5.5%로 약 287만 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17개 시도 중 2020년 대비 2047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세종(70.5%), 제주(17.0%), 충남(5.1%), 경기(4.3%), 충북(5.1%)으로 나타났으며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0년 대비 2047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부산으로 19.8%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광주(-15.1%)와 서울(-13.4%) 등이 뒤를 이었음. 전라북도의 경우 2020년 대비 2047년 인구가 약 21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기간 인구 감소율이 -11.7%로 나타나 광역시를 제외한 9개의 도지역 중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됨

〈표 2-6〉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0~2047)

(단위 : 만 명, %)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증감률
전국	5,178	2,191	5,193	5,163	5,086	4,957	4,891	-5.5
서울	960	935	916	895	873	845	832	-13.4
부산	334	321	311	301	289	274	268	-19.8
대구	242	235	228	222	214	204	200	-17.3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증감률
인천	295	299	303	305	303	298	295	-0.1
광주	149	145	142	138	134	129	126	-15.1
대전	150	146	144	142	139	134	133	-11.7
울산	114	112	110	107	103	99	97	-15.1
세종	35	42	48	53	56	59	59	70.5
경기	1,341	1,396	1,429	1,445	1,439	1,414	1,399	4.3
강원	152	151	152	152	151	149	147	-2.8
충북	163	165	167	168	168	165	163	0.2
충남	220	227	232	235	236	234	232	5.1
전북	179	175	172	169	165	161	158	-11.7
전남	176	173	172	170	167	163	161	-8.7
경북	266	262	259	256	250	242	238	-10.3
경남	335	334	332	328	320	309	304	-9.3
제주	67	72	75	78	79	79	78	17.0

주 : 증감률은 2020년 대비 2047년 인구의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

○ 장래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에 대한 추계를 확인한 결과, 노년을 제외한 모든 주요 연령계층별 집단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전국보다 전북이 노년 구성비는 더 높고, 유소년, 학령기, 생산가능, 청년 계층의 구성비는 낮을 것으로 추계됨

- 유소년 계층의 구성비는 전국의 경우 2020년 12.2%에서 2047년 9.2%로 약 3.0%p 감소하였으며, 전북은 동기간 11.8%에서 8.6%로 3.2%p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령기 연령계층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는 전북(15.8%)이 전국(15.1%)보다 구성비가 높지만 전북의 감소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 2047년에는 전북(10.4%)보다 전국(10.7%)의 학령기 계층 구성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전국이 2020년 72.1%에서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7년에는 52.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 역시 2020년 67.6%에서 2047년 47.5%로 약 20%p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청년 인구의 경우 전국 구성비는 2020년 27.4%에서 2047년 15.6%로 11.8%p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북 구성비 역시 2020년 23.5%에서 2047년 13.1%로 10.4%p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반면 65세 이상 노년 계층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국의 경우 2020년 15.7%에 불과하던 노년 계층 구성비가 2047년에는 38.4%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전북 역시 동기간 20.6%에서 42.5%로 노년 계층의 구성비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7〉 주요 연령계층별 장래추계인구 구성비(2020~2047)

(단위 : 만 명, %)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유소년 (0~14세)	전국	12.2	10.7	9.6	9.6	9.8	9.4	9.2
	전북	11.8	10.4	9.2	9.1	9.2	8.8	8.6
학령기 (6~21세)	전국	15.1	13.3	11.7	10.6	10.2	10.7	10.7
	전북	15.8	13.5	11.8	10.5	10.1	10.4	10.4
생산가능 (15~64세)	전국	72.1	69.1	65.4	60.9	56.3	53.6	52.4
	전북	67.6	64.4	60.8	56.2	51.4	48.7	47.5
청년 (20~39세)	전국	27.4	24.9	22.9	20.4	17.5	15.8	15.6
	전북	23.5	21.2	19.5	17.5	14.8	13.3	13.1
노년 (65세 이상)	전국	15.7	20.3	25.0	29.5	33.9	37.0	38.4
	전북	20.6	25.2	30.0	34.7	39.4	42.5	43.9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

## 2. 혼인 및 출산의 변화

### 가. 혼인율의 변화

- 전라북도의 2020년 조혼인율 추정치는 3.4건으로 전국 평균인 4.2건에 미치지 못하며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더불어 조혼인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조혼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 4.7건, 제주특별자치도 4.5건, 경기도 4.4건 순으로 조혼인율이 높게 나타남
  - 조혼인율이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3.4건으로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대구광역시 3.5건,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가 각각 3.6건으로 나타남

(단위 : ‰)



주 : 2020년 조혼인율 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0

〈그림 2-2〉 시도별 조혼인율

- 전라북도 시군별 조혼인율을 확인한 결과, 2020년 조혼인율 추정치는 군산시가 3.8건으로 가장 높고, 진안·장수·순창군의 조혼인율이 2.4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혼인율이 높은 지역은 군산시 3.8건, 전주시 3.7건, 김제시 3.5건, 완주군 3.4건으로 주로 시지역과 전주시에 인접한 군지역에서 혼인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10개 지역은 전라북도 평균 조혼인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혼인율이 낮은 지역은 진안·장수·순창군이 각각 2.4건으로 가장 낮았으며 남원시 2.6건, 고창군 2.7건 순으로 조혼인율이 낮게 나타남



주 : 2020년 조혼인율 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0

〈그림 2-3〉 시군별 조혼인율

- 전국과 전라북도의 일반혼인율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반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보다 전북이, 남성보다 여성의 혼인율 감소가 높음
  - 전북의 경우 2000년 남편의 일반혼인율은 14.4%, 아내의 일반혼인율은 15.2%로 남성보다 여성의 일반혼인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005년 이후로는 남성의 일반혼인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2020년 기준 전북의 일반혼인율은 남편 7.7%, 아내 7.3%로 2000년 대비 남편은 46.5%, 아내는 49.3% 감소하였음
  - 같은 기간 전국의 일반혼인율 증감률은 남편 46.1%, 아내 46.3%로 나타나 전국보다 전북의 일반혼인율 감소 정도가 높으며, 특히 아내의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3.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8〉 전국 및 전북 일반혼인율

(단위 : %, %)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증감률
전국	남편	17.8	16.1	15.7	13.9	11.6	10.8	9.6	-46.1%
	아내	17.5	15.8	15.5	13.7	11.5	10.6	9.4	-46.3%
전북	남편	14.4	13.4	13.7	11.4	9.1	8.9	7.7	-46.5%
	아내	15.2	12.7	12.6	10.7	8.5	8.2	7.3	-49.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전국의 신혼부부는 2015년 기준 1,471,647쌍에서 2019년 기준 1,260,117쌍으로 14.4% 감소하였으며 전북의 신혼부부는 2015년 44,983쌍에서 2019년 36,082쌍으로 19.8%가 감소하여 전국 평균보다 전북의 신혼부부 감소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부부는 2015년 대비 2019년 전국은 2.2%가 감소하였고, 전북은 5.8%가 감소하여 전체 신혼부부가 감소하는 정도보다는 전국과 전북 모두 감소폭이 적은 편으로 나타남.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 비율은 2015년 기준 전국은 40.5%, 전북은 37.2%이나 2019년 기준으로는 전국 46.3%, 전북 43.6%로 증가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의 증가폭은 전국(14.3%)보다 전북(17.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전국의 경우 2015년 기준 0.93명에서 2019년 0.8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북의 신혼부부 평균 출생아 수는 2015년 1.09명에서 2019년 1.00명으로 감소함

〈표 2-9〉 전국 및 전북 신혼부부 현황

(단위 : 쌍, 명, %)

	연도	신혼부부 수		맞벌이 부부 수		맞벌이 비율		평균 출생아수	
		'15년 대비 증감률							
전국	2015	1,471,647		595,850		40.5		0.93	
	2016	1,436,948		603,281		42.0		0.92	
	2017	1,379,766		585,957		42.5		0.78	
	2018	1,322,406		594,409		44.9		0.87	
	2019	1,260,117	-14.4	582,985	-2.2	46.3	14.3	0.84	-9.7
전북	2015	44,982		16,720		37.2		1.09	
	2016	43,026		16,762		39.0		1.08	
	2017	40,699		16,025		39.4		0.90	
	2018	38,328		16,191		42.2		1.04	
	2019	36,082	-19.8	15,742	-5.8	43.6	17.2	1.00	-8.3

자료 :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각년도

## 나. 출산율의 변화

- 2020년 전국의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0.840명으로 2018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전북의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2020년 0.910명으로 2019년부터 1.0명 이하로 진입한 이후 계속 감소 경향을 보임
  - 전북의 합계출산율(0.910명)은 전국 평균(0.840명)보다는 높으나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국에서 10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특히 경기도를 제외하면 9개의 광역 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0

〈그림 2-4〉 시도별 합계출산율

- 10년간 전국과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됨
  - 2010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1.226명, 전북 1.374명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의 등락을 확인할 수 있으나, 2016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은 2018년, 전북은 2019년에 처음으로 0명대 합계출산율이 나타남
  - 2000년 대비 2020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이 0.386명, 전북이 0.464명 감소하여 전국 평균보다 전북의 감소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출생아 수는 2010년에 전국 470,171명, 전북 16,10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전국 272,400명, 전북 8,200명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2020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42.1%, 전북 49.1%로 전북이 7.0%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전북의 출생아수 감소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10〉 전국 및 전북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출산율	전국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1.172	1.052	0.977	0.918	0.840
	전북	1.374	1.405	1.440	1.320	1.329	1.352	1.251	1.151	1.044	0.971	0.910
출생아 수	전국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400
	전북	16,100	16,175	16,238	14,555	14,231	14,087	12,698	11,348	10,001	8,971	8,200

주 : 2020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2020년 전라북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진안군의 합계출산율이 1.68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주시가 0.883명으로 가장 적음

-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진안군 1.685명, 순창군 1.639명, 임실군 1.416명 등으로 전라북도 평균(0.971명)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군지역이 7곳, 시 지역 2곳으로 시 지역보다는 군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전주시 0.883명, 무주군 0.888명, 익산시 0.908명, 김제시 0.923명 순으로 대부분 시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전북 평균에 미치지 못함

(단위 : 명)



주 : 2020년 합계출산율 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0

〈그림 2-5〉 시군별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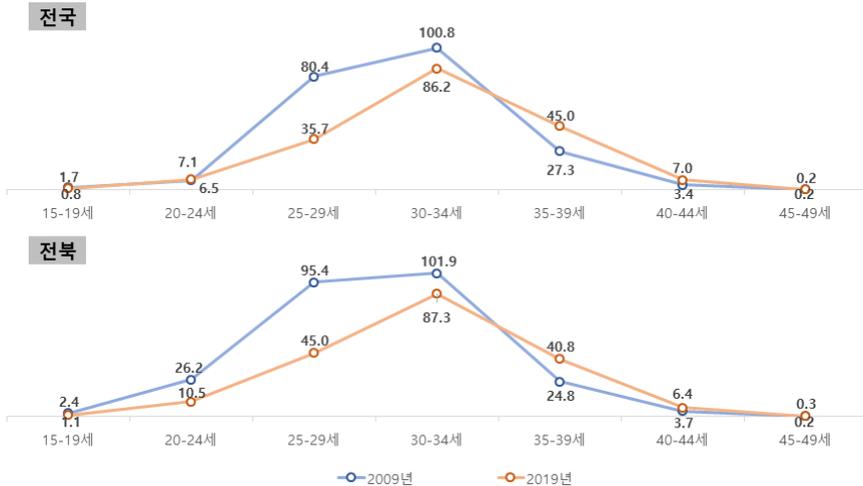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87.3%로 가장 높고, 25~29세 45.0%, 35~39세 40.8% 순으로 나타남

- 2009년과 비교하면 30~34세 101.9%, 25~29세 95.4%이던 모의 연령별 출산율이 저출산의 심화로 인하여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5~29세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9년 모의 연령별 출산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연령대의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2009년 보다 2019년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5~39세 연령대의 경우 2009년 24.8%에서 2019년 40.8%로 1.5배 이상 증가하였음

- 전국도 수치는 전라북도보다 낮지만, 전반적인 추이는 전라북도와 비슷하게 나타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2-6> 전국 및 전북 모의 연령별 출산율

○ 전라북도 지역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본 결과, 14개 시군 중 진안군에서 각 연령별 모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주, 군산, 익산 지역의 연령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진안군의 경우 모의 연령별 출산율이 15~19세 6.6%, 20~24세 21.9%, 25~29세 93.8%, 30~34세 127.1%, 35~39세 72.0%, 40~44세 11.9% 등으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전주, 군산, 익산 등 전라북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에서 모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전주시는 15~19세 0.5%, 20~24세 7.5%, 25~29세 37.0%, 30~34세 84.2%, 35~39세 39.0%, 40~44세 5.8%, 45~49세 0.1%로 모든 연령대의 출산율이 전라북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전라북도 시군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라북도	1.1	10.5	45.0	87.3	40.8	6.4	0.2
전주시	0.5	7.5	37.0	84.2	39.0	5.8	0.1
군산시	1.4	9.9	51.8	85.9	34.9	6.7	0.0
익산시	1.0	10.1	42.3	79.1	40.8	5.0	0.1
정읍시	2.5	11.9	57.8	90.0	38.4	7.9	0.3
남원시	0.9	12.3	71.5	108.5	58.6	7.1	0.3
김제시	2.3	22.5	42.4	73.4	35.9	5.5	0.0
완주군	1.0	19.3	46.2	89.0	43.1	5.2	0.6
진안군	6.6	21.9	93.8	127.1	72.0	11.9	0.0
무주군	0.0	17.5	39.2	70.7	34.9	10.3	0.0
장수군	4.4	6.4	56.9	109.0	50.5	12.1	0.0
임실군	4.0	17.4	81.7	119.1	53.5	5.4	0.0
순창군	0.0	14.0	69.0	154.9	79.8	7.8	0.0
고창군	2.5	13.4	61.2	99.5	51.2	13.6	1.2
부안군	1.8	19.1	51.1	106.2	50.3	9.3	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9

### 3. 저출산 영향요인

#### 가. 가임기 및 주출산 연령의 여성인구 감소

- 2020년 기준 전라북도의 가임기 여성은 362,869명, 주출산 연령 여성은 85,160명으로 가임기 및 주출산 연령의 여성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가임기 여성인구는 2000년 525,505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2000년 대비 30.9%가 감소하였으며, 주출산 연령 여성인구는 2000년 153,942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절반 수준인 85,160명으로 2000년 대비 4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임기 여성인구는 2020년 11,824,861명으로 2000년 대비 14.0% 감소한 수준이었고, 주출산 연령 여성인구는 2020년 3,187,169명으로 2000년 대비 2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가임기 및 주출산 연령 여성인구의 감소폭이 전국보다 1.5~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전북의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 연령 여성인구의 감소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 타 지역보다 빠르게 저출산 심화 및 인구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표 2-12〉 전라북도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 연령 여성

(단위 : 명, %)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증감률
전국	가임기 여성 (15~49세)	13,747,805	13,628,886	13,401,552	12,831,407	12,294,729	12,065,205	11,824,861	-14.0
	주출산 연령 (25~34세)	4,368,376	4,058,971	3,746,356	3,319,269	3,156,138	3,169,233	3,187,169	-27.0
전북	가임기 여성 (15~49세)	525,505	469,322	441,552	417,021	387,994	375,347	362,869	-30.9
	주출산 연령 (25~34세)	153,942	131,110	113,758	96,553	87,797	86,411	85,160	-44.7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 전라북도의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 연령의 여성은 2000년 대비 2020년의 감소세가 시지역보다 군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주출산 연령 여성의 경우 정읍시가 64.2%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음. 가임기 여성의 경우는 임실군과 부안군이 각각 56.3%, 56.2%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세를 보임
  - 25~34세에 해당하는 주출산 연령 여성의 경우 정읍시가 2000년 10,748명에서

2020년 3,847명으로 64.2%가 감소하여 약 20년 동안 감소세가 가장 컸으며 남원시 60.2%, 부안군 59.2%, 장수군 59.1%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주시의 경우 동기간 감소율이 29.9%로 감소율이 높은 지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완주군 36.8%, 순창군 46.1% 순으로 감소율이 적게 나타남

- 15~49세에 해당하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주출산 연령과 동일하게 전주시로 해당 기간 1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완주군이 15.9%, 군산시 27.6%, 익산시가 37.1%로 뒤를 이었으며 동기간 가임기 여성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56.3%), 부안군(56.2%), 장수군(54.4%), 김제시(53.9%) 순으로 나타남

〈표 2-13〉 전라북도 시군별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 연령 여성

(단위 : 명, %)

	주출산 연령 여성(25~34세)			가임기 여성(15~49세)		
	2000	2020	증감률	2000	2020	증감률
전라북도	153,942	85,160	-44.7	525,505	362,869	-30.9
전주시	55,740	39,094	-29.9	182,735	157,518	-13.8
군산시	23,036	12,216	-47.0	76,449	55,331	-27.6
익산시	28,508	13,382	-53.1	92,054	57,870	-37.1
정읍시	10,748	3,847	-64.2	37,082	18,394	-50.4
남원시	7,209	2,868	-60.2	25,186	13,651	-45.8
김제시	6,976	2,872	-58.8	26,616	12,262	-53.9
완주군	6,041	3,815	-36.8	19,577	16,464	-15.9
진안군	1,565	749	-52.1	6,425	3,246	-49.5
무주군	1,595	729	-54.3	6,152	3,285	-46.6
장수군	1,625	664	-59.1	6,579	3,002	-54.4
임실군	1,868	836	-55.2	7,409	3,240	-56.3
순창군	1,637	882	-46.1	6,838	3,969	-42.0
고창군	3,539	1,635	-53.8	15,714	7,320	-53.4
부안군	3,855	1,571	-59.2	16,689	7,317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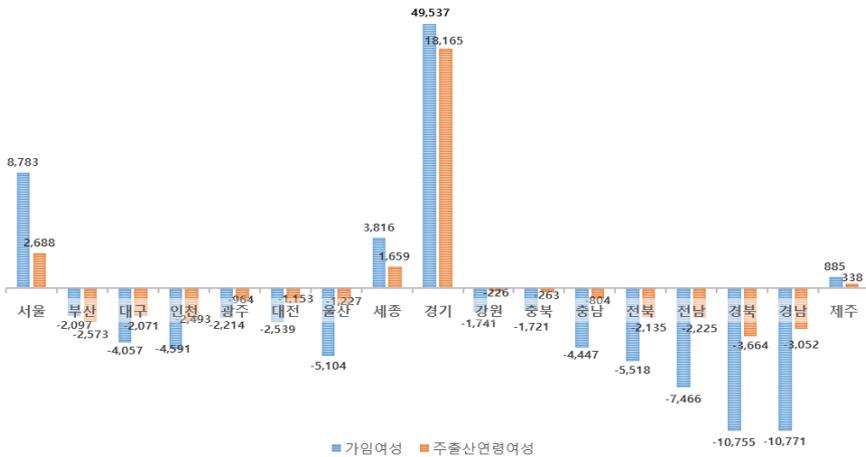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

- 가임기 및 주출산 연령 여성인구의 시도별 역외 유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기준 가임기 및 주출산 연령 여성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 제주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해당 인구의 역외유출이 일

## 어남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전라북도는 가임기 여성인구 5,518명, 주출산 연령 여성인구 2,135명이 역외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북, 경남,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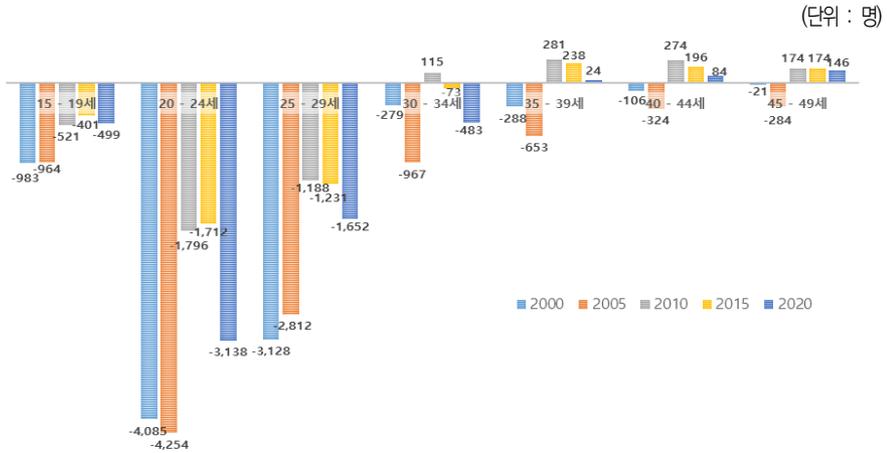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

<그림 2-7> 가임기 여성 및 주출산연령 여성 인구의 시도별 역외유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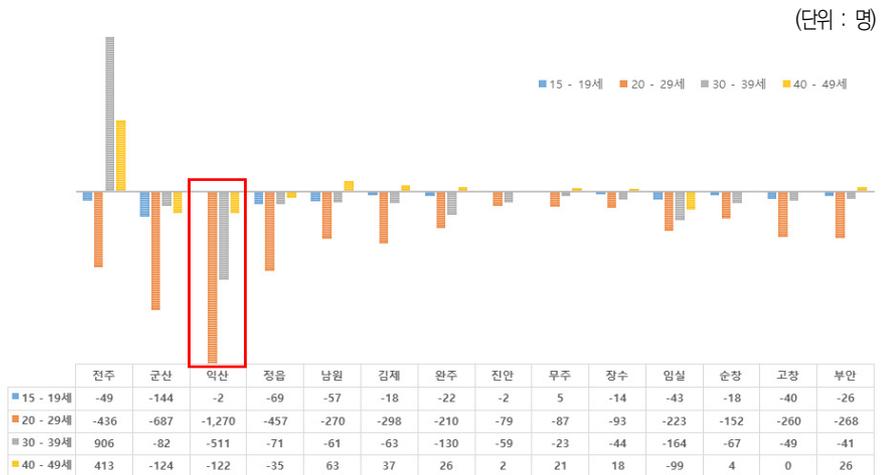
- 전라북도 가임기 여성의 연령대별 역외유출을 확인한 결과, 2020년 기준으로 20~24세의 유출이 가장 많았고, 25~29세, 15~19세, 30~34세 순으로 인구의 역외유출이 많이 일어남
  - 전라북도의 가임기 여성 인구의 역외유출은 2000년과 2005년에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2010년과 2015년에는 상대적으로 역외유출 정도가 낮았으나 2020년 다시 유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20~24세는 3,138명이 역외로 유출되었으며, 25~29세는 1,652명, 15~19세 499명, 30~34세 483명이 유출됨. 반면 35세 이후 연령대는 아주 적은 수준이기는 하나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34세 미만 연령대의 여성인구 유출 원인은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해당 연령층의 일자리와 주택마련 지원 등 지역정착 및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

〈그림 2-8〉 전북 가임기 여성의 연령대별 역외유출

- 전라북도의 지역별 가임기 여성 연령대별 역외유출을 확인한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익산시의 인구 유출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20대의 유출이 1,270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임기 여성의 전 연령대의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전주시의 경우에만 30대와 40대의 유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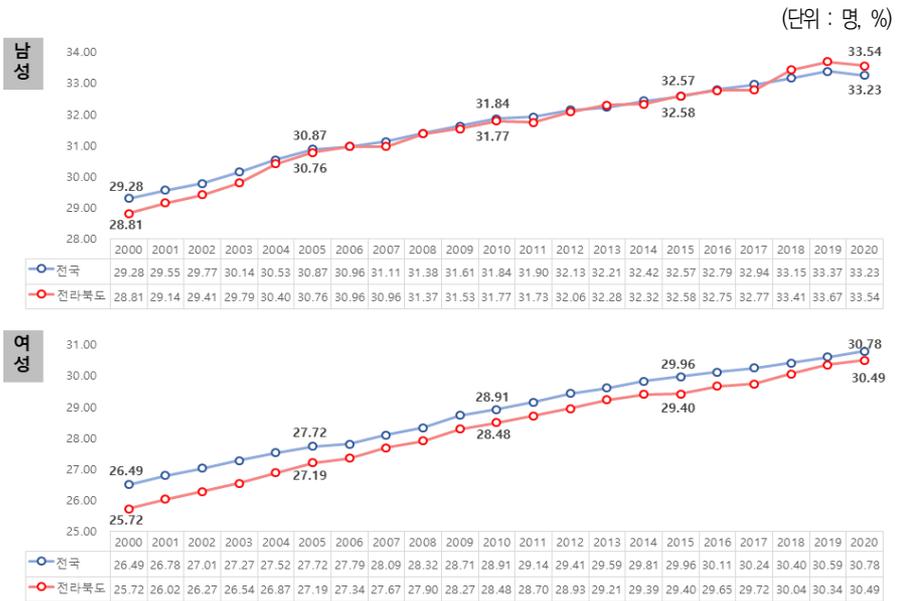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

〈그림 2-9〉 전북 지역별 가임기 여성 연령대별 인구역외유출

## 나. 만혼화

- 전라북도와 전국 모두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 기준 전북 남성의 초혼연령은 33.54세, 여성의 초혼연령은 30.49세로 남성은 전국 평균보다 초혼연령이 높고, 여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기준 전라북도 남성의 초혼연령은 28.81세, 여성의 초혼연령은 25.72세였으나 약 20년 동안 남성의 초혼연령은 약 4.73세, 여성의 초혼연령은 약 4.77세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전국 평균으로 남성의 초혼연령이 3.95세, 여성의 초혼연령이 4.29세 증가한 것으로 보았을 때, 전라북도의 초혼연령 증가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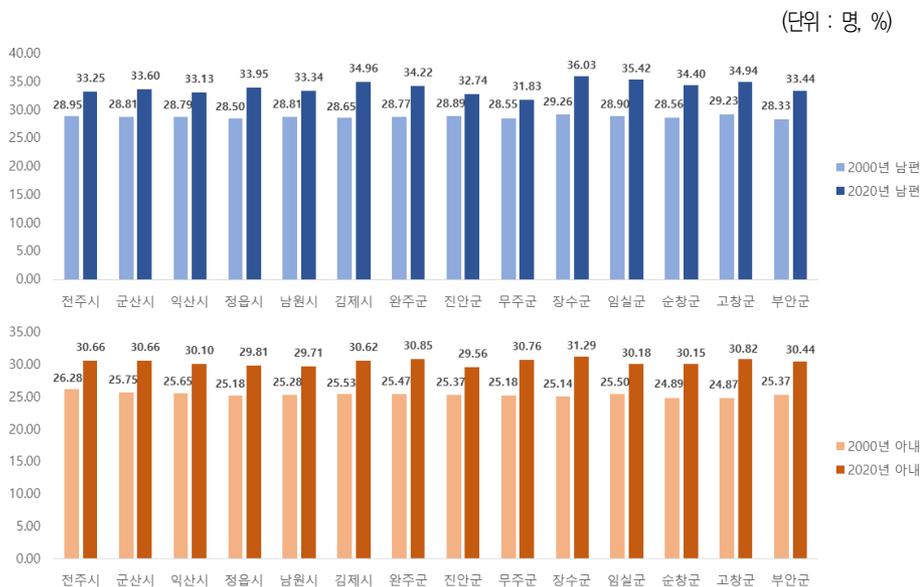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2-10〉 전국 및 전북 성별 초혼 연령추이

- 2020년 기준 전라북도의 초혼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장수군으로 남성 초혼연령은 36.03세, 여성 초혼연령은 31.29세로 나타남. 반면 초혼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성의 경우 무주군(31.83세), 여성의 경우 진안군(29.56세)으로 나타남

- 2000년 대비 2020년 초혼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장수군으로 남성은 6.77세, 여성은 6.15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동기간 초혼연령이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남성의 경우 무주군으로 장수군 증가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3.28세가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진안군의 초혼연령이 4.19세 증가하여 가장 적은 증가 정도를 보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2-11〉 전라북도 시군별·성별 초혼연령

## 다. 결혼선호 가치관의 감소

- 2020년 사회조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의 결혼에 대한 견해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남성은 59.2%, 여성은 52.5%로 나타났으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률은 여성이 39.4%로 남성(32.3%)보다 높게 나타남
  - 전국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가 있는 응답자가 남성 58.2%, 여성 44.3%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여성이 47.3%로 남성(35.4%)보다 높았음
  -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은 중립적인 입장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또한 전국과 전라북도의 응답률을 비교한 결과,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의 응답자들이 결혼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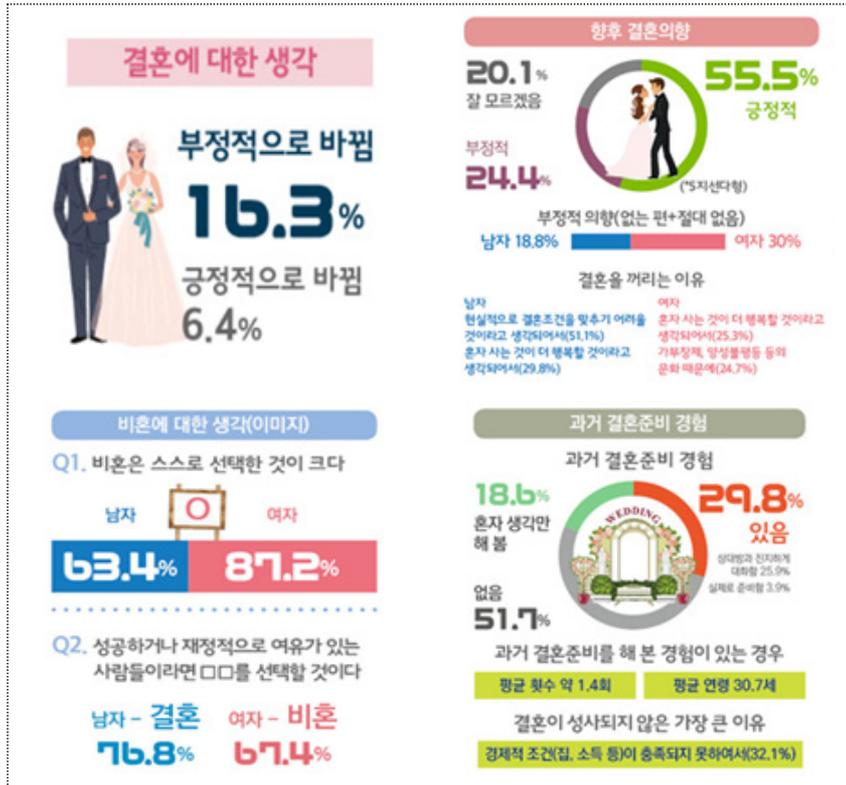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20

〈그림 2-12〉 전국 및 전북 결혼에 대한 견해

○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제7차 저출산 인식조사의 결과 코로나 이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률은 16.3%에 달하였으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률은 6.4%에 불과함

-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이 55.5%로 가장 높고, 부정적 24.4%, 잘 모르겠음 20.1% 순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의향을 성별로 확인해보면, 남성은 18.8%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여성은 30.0%가 결혼 생각이 절대 없거나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비혼에 대한 이미지는 미혼 남녀의 성별에 따라 응답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혼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크다는 것에 여성은 87.2%가 동의한 반면 남성은 63.4%만이 동의하여 응답률이 차이가 23%p 이상 높게 나타남. 성공하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과 비혼 중 무엇을 선택했을 것이냐는 문항에는 남성의 76.8%가 결혼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67.4%는 비혼이라고 응답하여 남성보다 여성이 비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혼 남녀의 과거 결혼준비 경험은 29.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51.7%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결혼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0.7세였으며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자료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7차 저출산 인식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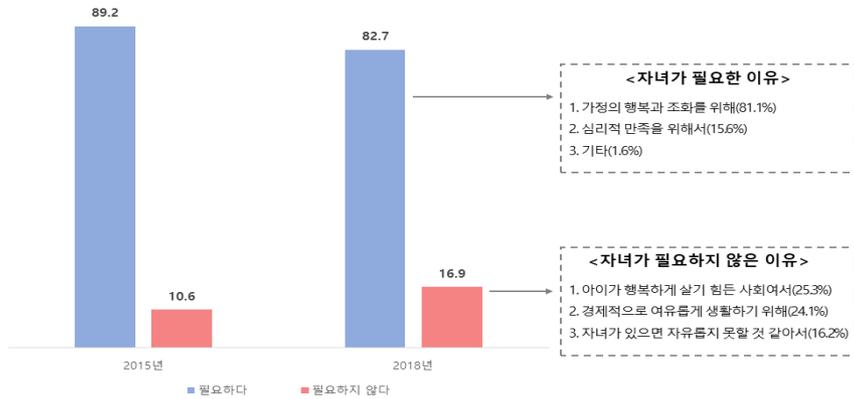
<그림 2-13>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

## 라. 자녀선호 가치관의 감소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전국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015년 89.2%에서 2018년에는 82.7%로 다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자녀가 필요한 이유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81.1%,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 15.6%, 기타 1.6% 순으로 나타남
-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25.3%,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 24.1%,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16.2%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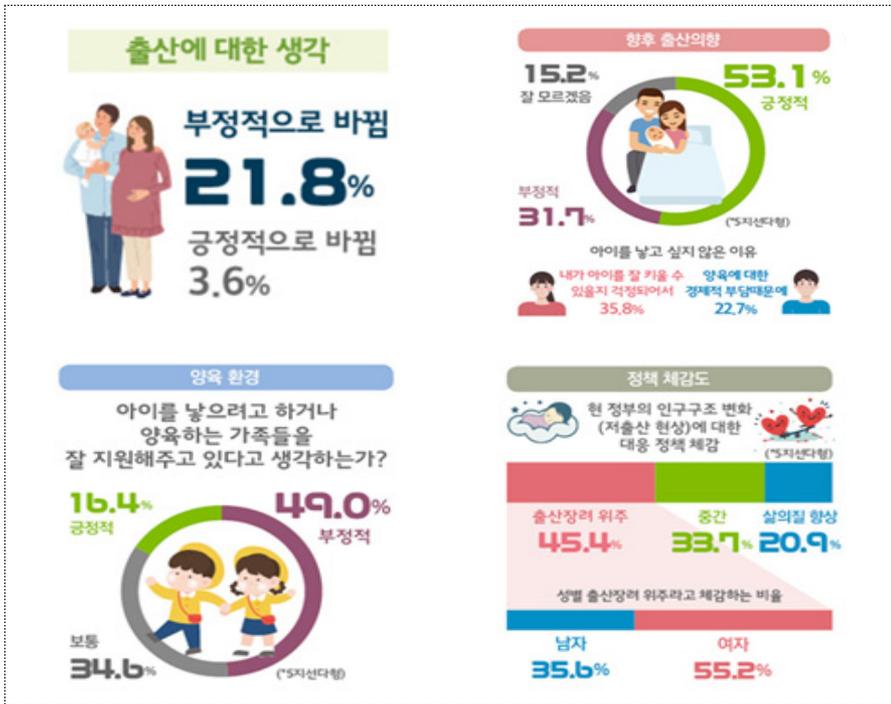
주 : 기혼여성 대상 응답임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2-14〉 자녀의 필요성

-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이후 출산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률이 21.8%인데 반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률이 3.6%로 나타나 결혼보다 출산에서 부정적 인식 변화가 높게 나타남
- 향후 출산의향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3.1%였으며,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1.7%,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자는 15.2%로 나타났으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성은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되어서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출산 및 양육 환경의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49.0%로 절반에 가까웠고, 보통이 34.6%, 긍정적이 16.4%로 미혼 남녀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환경에 제대로 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현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서 출산장려 위주로 체감된다는 응답률이 45.4%로 가장 높았고, 중간이라는 응답률이 33.7%, 삶의 질 향상으로 체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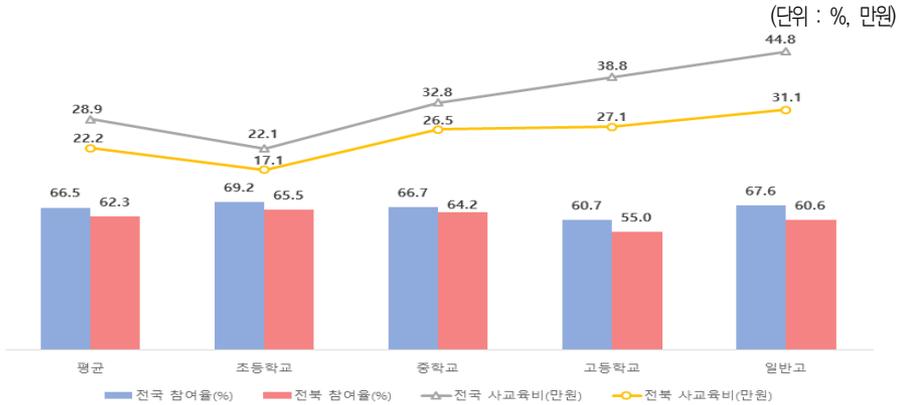
는 응답률이 20.9%로 나타남. 저출산 정책을 출산장려 위주라고 체감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자료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7차 저출산 인식조사, 2020

〈그림 2-15〉 미혼 남녀의 출산에 대한 인식

- 자녀선호 가치관이 감소한 데에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사교육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전라북도의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65.5%, 중학교 64.2%, 고등학교 55.0%, 일반고 60.6%, 평균 52.3%로 나타남. 전국의 경우 초등학교 69.2%, 중학교 66.7%, 고등학교 60.7%, 일반고 60.6%, 평균 66.5%로 나타나 전라북도 사교육 참여율보다 적게는 2%, 많게는 7%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 역시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차이가 적은 초등학교의 사교육비는 평균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 고등학교의 전라북도의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경우 약 13.7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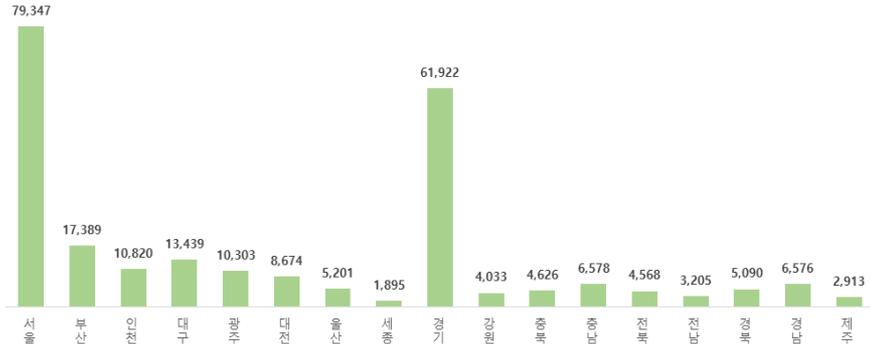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20

〈그림 2-16〉 전국 및 전북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 마. 난임의 증가

- 2020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질병소분류 통계에 따르면 질병코드 N46(남성 불임), N96(습관성 유산자) N97(여성 불임)에 해당하는 불임치료 환자 수는 232,856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의 불임치료 환자수가 79,34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61,922명으로 뒤를 이었음. 전라북도의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는 4,568명으로 나타남
  - 불임치료를 위해 내원한 연령대별 환자 수 및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확인한 결과, 2010년에는 30대가 128,511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43,889명으로 뒤를 이었으나, 2020년에는 30대가 166,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5,676명으로 뒤를 이었음. 2020년 불임환자는 2010년보다 47,35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불임 진료비 역시 크게 늘어 2020년 30대의 진료비는 117,606,967천원으로 2010년보다 약 8.5배 이상 높았으며 40대의 진료비는 45,443,010천원으로 2010년(1,793,445천원)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불임 치료 환자 수 추이는 2020년 기준 4,568명으로 2010년(5,158명)에 비해서는 불임치료 환자수가 줄어들었으나 남성 불임 환자는 2010년 810명에서 2020년 1,321명으로 63.1% 증가하였으며, 여성 불임 환자는 2010년 기준 4,136명에서 2020년 3,035명으로 약 26.6%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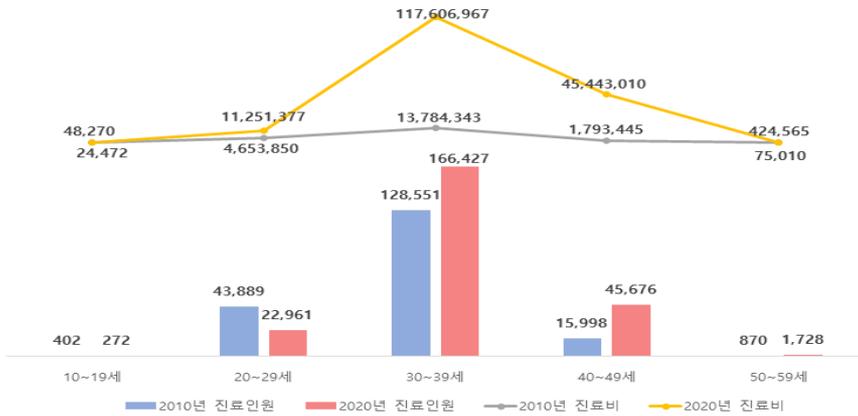
(단위 : 명)



주 : 질병 소분류 통계 중 질병코드 N46(남성 불임), N96(습관적 유산자), N97(여성 불임) 분류임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https://opendata.hira.or.kr/home.do>)

<그림 2-17> 지역별 불임치료 환자 수

(단위 : 명, 천원)



주 : 질병 소분류 통계 중 질병코드 N46,N96,N97의 성별/연령10세 구간별 통계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https://opendata.hira.or.kr/home.do>)

<그림 2-18> 불임치료를 위해 내원한 건강보험 환자 수 및 요양급여비용총액

<표 2-14> 전라북도 불임 치료 환자 수 추이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5,158	5,173	4,830	4,706	4,839	4,852	4,600	4,514	4,715	4,591	4,568
남성 불임	810	824	851	905	831	855	800	884	1,208	1,182	1,321
습관적 유산자	57	36	61	62	54	58	119	287	370	322	212
여성 불임	4,291	4,313	3,918	3,739	3,954	3,939	3,681	3,343	3,137	3,087	3,035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https://opendata.hira.or.kr/home.do>)

## 바. 양육인프라 취약

- 2020년 기준 전라북도의 어린이집은 1,195개소로 전국 35,352개소의 3.4%가 전라북도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의 경우 507개소로 전체 유치원(8,705개소)의 5.8%가 전라북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454개소로 가장 많고, 민간어린이집 391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32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103개소,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83개소, 직장어린이집 31개소, 협동 어린이집 1개소 순으로 나타남
  -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전라북도 전체 어린이집의 8.6%에 불과하여 전년(6.4%) 대비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전국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14.0%에 달하는 것에 반해 전라북도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대전광역시(6.2%), 광주광역시(8.2%), 충청남도(8.3%), 제주특별자치도(8.4%)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음

〈표 2-15〉 전국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단위 : 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전국	35,352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8,705
서울특별시	5,370	1,749	27	92	1,326	1,857	31	288	795
부산광역시	1,778	261	78	31	648	692	11	57	403
대구광역시	1,268	183	111	20	518	393	5	38	346
인천광역시	1,943	230	11	12	684	925	5	76	404
광주광역시	1,072	88	105	22	346	478	4	29	298
대전광역시	1,185	73	40	12	310	684	7	59	256
울산광역시	790	89	13	4	363	280	5	36	198
세종특별자치시	350	75	9	4	92	155	0	15	61
경기도	10,761	1,086	64	112	3,431	5,717	67	284	2,206
강원도	999	129	105	39	321	356	4	45	366
충청북도	1,082	106	104	28	403	402	3	36	326
충청남도	1,717	143	114	45	549	811	2	53	499
전라북도	1,195	103	132	83	391	454	1	31	507

	어린이집								유치원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전라남도	1,084	168	156	47	334	343	2	34	530
경상북도	1,725	174	79	37	691	687	1	56	701
경상남도	2,544	260	95	44	892	1,189	4	60	686
제주특별자치도	489	41	73	39	211	106	0	19	123

자료 :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통계, 2020.12.31.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2020

○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이며 전라북도 동북부 지역인 장수, 무주, 진안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매우 적어 보육 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각 509개소, 114개소)이며 익산시(각 188개소, 77개소)와 군산시(각 191개소, 67개소)가 뒤를 이었음. 반면 장수군의 경우 어린이집 7개소, 유치원 8개소로 아동 돌봄 시설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무주군(각 8개소, 9개소), 진안군(각 6개소, 12개소)이 뒤를 이음
- 전라북도의 경우 6개 시지역에 어린이집의 87.3%, 유치원의 72.0%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 집중도가 매우 높음. 더불어 8개 군지역 중 전주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같은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완주군을 제외하고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군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6.9%, 20.7%로 나타나 군지역의 아동 보육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6〉 전라북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단위 : 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전라북도	1,195	103	132	83	391	454	1	31	507
전주시	509	26	37	15	185	233	1	12	114
군산시	191	19	20	12	67	67	0	6	67
익산시	188	14	21	12	55	80	0	6	77
정읍시	60	7	12	3	14	23	0	1	39
남원시	55	4	9	8	19	15	0	0	28
김제시	40	4	8	6	11	10	0	1	40

	어린이집								유치원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완주군	70	8	13	6	23	18	0	2	37
진안군	6	2	0	4	0	0	0	0	12
무주군	8	4	0	2	2	0	0	0	9
장수군	7	2	4	0	0	1	0	0	8
임실군	9	0	2	6	0	0	0	1	14
순창군	10	6	1	2	0	1	0	0	15
고창군	22	4	5	5	4	3	0	1	22
부안군	20	3	0	2	11	3	0	1	25

자료 :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통계, 2020.12.31.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2020

## 사. 고용불안 및 일·가정양립 어려움

- 2020년 상반기 기준 전라북도 고용률은 남성 68.0%, 여성 49.7%로 남성이 여성보다 18.3%p 높음. 전국 고용률 평균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남성이 69.3%, 여성이 49.8%로 남성이 여성보다 19.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성의 경우 15~19세는 2.8%, 20대 41.8%, 30대 86.4%, 40대 88.0%, 50대 86.7%, 60대 이상 61.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은 15~19세 1.3%, 20대 37.8%, 30대 59.0%, 40대 66.4%, 50대 66.5%, 60대 이상 42.4%로 나타남
  -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전국의 경우 10대와 20대는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다소 높으나 전북은 남성의 고용률이 여전히 높으며, 30대까지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높으나, 40대 이후부터는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 여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남

〈표 2-17〉 전라북도 성별·연령별 고용률

(단위 : %, %p)

	전국				전북			
	계	남성	여성	차이	계	남성	여성	차이
계	59.4	69.3	49.8	19.5	58.7	68.0	49.7	18.3
15~19세	5.2	4.6	5.9	-1.3	2.1	2.8	1.3	1.5

	전국				전북			
	계	남성	여성	차이	계	남성	여성	차이
20~29세	54.6	54.4	54.8	-0.4	39.9	41.8	37.8	4.0
30~39세	74.9	87.7	61.0	26.7	73.3	86.4	59.0	27.4
40~49세	76.5	89.5	63.1	26.4	77.4	88.0	66.4	21.6
50~59세	73.6	84.8	62.4	22.4	76.8	86.7	66.5	20.2
60세 이상	41.8	52.3	33.2	19.1	50.7	61.5	42.4	19.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0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DB(<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 전라북도 시군의 성별 고용률을 확인한 결과, 2010년 대비 2020년의 고용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순창과 고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2020년 전체 고용률의 감소 정도가 가장 큰 지역은 장수군으로 2010년 79.6%에서 2020년 69.3%로 10.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실군 -7.3%p, 전주시 -6.4%p, 무주군 -6.1%p 순으로 감소율이 높게 나타남. 반면 군산시(0.6%p), 순창군(0.4%p), 고창군(0.4%p)은 2010년 대비 2020년의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14개 시군 중 순창군과 고창군(각3.9%p, 3.8%p 증가)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여성 고용률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장수군은 동기간 고용률이 13.6%p 감소하였고, 전주시는 10.4%p 감소하여 다른 지역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음
- 성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시지역보다 군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편인데, 이는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표 2-18〉 전라북도 시군별·성별 고용률

(단위 : %)

	2010			2020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라북도	59.1	69.2	49.7	58.7	68.0	49.7
전주시	57.0	65.0	49.6	50.6	63.4	39.2
군산시	53.0	63.2	42.7	53.6	67.8	39.6
익산시	55.7	64.4	47.2	54.3	64.1	45.2
정읍시	60.6	69.2	52.2	58.0	69.8	47.3

	2010			2020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남원시	62.8	70.4	55.9	62.8	74.3	52.6
김제시	62.0	69.8	54.6	60.3	70.7	50.8
완주군	62.0	70.8	52.8	58.5	69.7	47.5
진안군	70.9	78.8	63.2	68.3	77.6	60.0
무주군	73.6	80.7	67.0	67.5	75.7	60.2
장수군	79.6	83.8	75.7	69.3	77.2	62.1
임실군	70.9	78.4	63.6	63.6	72.3	55.9
순창군	65.4	78.0	54.1	65.8	74.9	58.0
고창군	65.0	74.8	55.9	65.4	71.8	59.7
부안군	68.3	74.9	62.0	66.8	75.1	59.4

주 : 2020년은 1/2반기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DB(<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2015년 240,126명에서 2020년 178,148명으로 약 25.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감소 추세는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에서 더 높으며 같은 기간 전국의 비정규직 감소율은 17.4%이나 전북은 25.8%였으며 특히 여성의 감소율이 36.5%로 나타나 전북 남성(15.3%)과 전국 여성(17.0%)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남
  - 다만 이 수치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표 2-19〉 전국 및 전북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단위 :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전체	6,678,349	6,591,525	6,544,537	6,365,807	6,300,377	5,517,752
	남성	3,628,731	3,639,026	3,595,329	3,504,613	3,451,079	2,987,848
	여성	3,049,617	2,952,499	2,949,207	2,861,195	2,849,298	2,529,904
전북	전체	240,126	223,652	212,574	219,882	227,414	178,148
	남성	121,412	119,118	116,316	118,634	124,962	102,790
	여성	118,714	104,534	96,259	101,248	102,452	75,35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DB(<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 전라북도의 2020년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41천명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여 17개 시도 중 제주도(6.7%) 다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14.9%로 전국 평균(17.6%)과 비교하여 볼 때도 높은 편은 아니나,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대비 감소한데 반해, 전라북도는 대구광역시(1.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1.2%)을 보임

- 15~54세 비취업 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40.5%로 전국 평균인 44.0% 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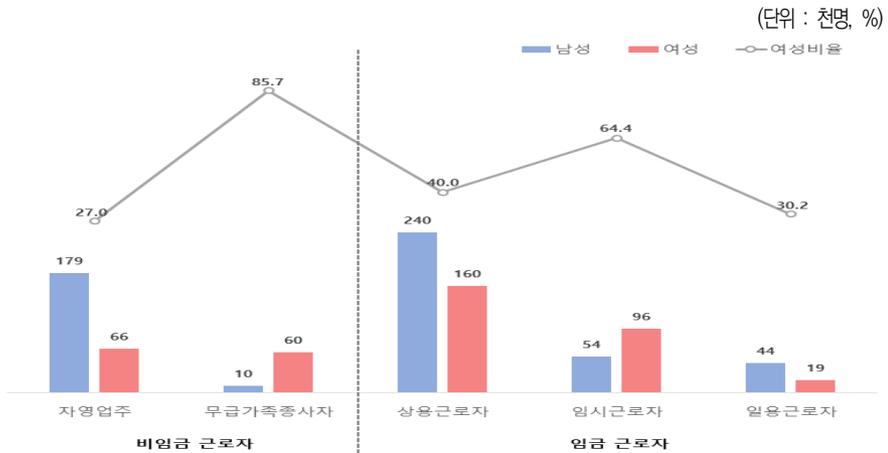
〈표 2-20〉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

	15-54세 기혼여성		비취업 여성		경력단절여성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15-54세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명	전년대비 증감률	명	전년대비 증감률	명	전년대비 증감률	%	전년대비 증감률	%	전년대비 증감률	%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	8,578	-3.0	3,420	1.6	1,506	-11.4	39.9	1.8	17.6	-1.6	44.0	-6.5
서울	1,497	-4.5	573	-6.3	231	-22.7	38.3	-0.7	15.4	-3.6	40.2	-8.6
부산	503	-5.5	202	-4.6	90	-8.0	40.1	0.4	17.9	-0.4	44.6	-1.6
대구	405	-4.6	183	11.0	90	2.3	45.3	6.4	22.2	1.5	49.0	-4.1
인천	507	-2.5	201	4.4	89	-9.3	39.6	2.6	17.5	-1.3	44.2	-6.6
광주	258	-3.6	100	0.7	49	-8.6	38.8	1.6	19.0	-1.1	49.0	-5.0
대전	252	-3.6	93	-4.4	40	-18.5	37.1	-0.3	15.8	-2.9	42.6	-7.3
울산	205	-2.8	101	7.4	43	-9.2	49.5	4.7	20.8	-1.5	42.1	-7.6
세종	71	3.8	28	6.1	15	-10.0	39.0	0.9	21.5	-3.3	55.2	-9.9
경기	2,394	-1.7	1,014	3.8	446	-14.1	42.4	2.3	18.6	-2.7	44.0	-9.1
강원	233	-3.7	86	5.8	38	-9.2	36.9	3.3	16.4	-1.0	44.5	-7.3
충북	261	-1.3	96	8.2	48	4.5	36.7	3.2	18.5	1.0	50.4	-1.8
충남	364	-0.3	132	-1.3	64	-6.9	36.2	-0.4	17.7	-1.2	48.7	-3.0
전북	274	-4.1	101	5.8	41	4.6	36.9	3.5	14.9	1.2	40.5	-0.4
전남	265	-4.8	93	-1.9	44	-14.1	35.2	1.0	16.7	-1.8	47.4	-6.8
경북	416	-2.5	160	5.5	71	-4.1	38.4	2.9	17.0	-0.3	44.2	-4.4
경남	561	-3.1	223	3.6	93	-3.3	39.7	2.5	16.6	0.0	41.7	-3.0
제주	113	-1.5	34	10.8	14	6.7	30.1	3.4	12.7	1.0	42.2	-1.6

자료 : 통계청,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 보도자료, 2020.11.24.

- 전라북도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는 남성의 경우 상용근로자, 자영업주,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많으며, 여성의 경우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 순으로 나타남
  - 각 종사상 지위별 여성의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전체 무급가족종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근로자 역시 여성의 비율이 64.4%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 반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40.0%로 나타나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용근로자의 여성비율은 30.2%, 자영업주의 여성비율은 27.0% 순으로 나타나 해당 지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DB(<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그림 2-19> 전라북도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전국과 전라북도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전국적으로는 2010년 65,439명에서 2020년 237,592명으로 약 3.6배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2010년 1,171명에서 2020년 4,750명으로 약 4.1배 증가하였음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속적이고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전국적으로 1.6%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0년 기준 19.4%로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 역시 2010년에는 1.4%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2020년에는 17.6%로 증가함

〈표 2-21〉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단위 : %)

	전국				전북			
	계	남성	여성	남성 비율	계	남성	여성	남성 비율
2010	65,439	1,069	64,370	1.6	1,171	16	1,155	1.4
2011	88,519	1,898	86,621	2.1	1,651	26	1,625	1.6
2012	116,328	2,894	113,434	2.5	2,109	42	2,067	2.0
2013	131,197	3,707	127,490	2.8	2,314	52	2,262	2.2
2014	153,704	5,573	148,131	3.6	2,622	91	2,531	3.5
2015	172,514	7,904	164,610	4.6	3,337	140	3,197	4.2
2016	185,842	11,872	173,970	6.4	3,549	215	3,334	6.1
2017	190,900	18,260	172,640	9.6	3,557	307	3,250	8.6
2018	204,673	27,338	177,335	13.4	3,870	386	3,484	10.0
2019	220,858	36,396	184,462	16.5	4,359	576	3,783	13.2
2020	237,592	46,096	191,496	19.4	4,750	834	3,916	17.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https://eis.work.go.kr/index.do>)

○ 각각의 모성보호제도 활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 전북의 활용가능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으로는 출산휴가 61.6%, 배우자 출산휴가 57.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51.2%, 육아휴직 4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9.3%가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북은 출산휴가 73.5%, 배우자 출산휴가 72.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0.2%, 육아휴직 5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6.8%가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전국 평균보다 전북에서 모성보호제도를 활용 가능한 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2〉 모성보호제도 활용가능 여부(2019)

(단위 : %)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국	61.6	57.9	51.2	45.4	49.3
전북	73.5	72.1	60.2	55.4	56.8

자료 : 통계청,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9

○ 유연근로제도 활용의 경우, 시간선택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는 전국 평균보

다 전북의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차 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는 전북의 도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전국 평균으로는 시간선택제 13.2%, 시차 출퇴근제 16.5%, 선택근무제 8.6%, 재량근무제 7.0%, 원격근무제 4.4%, 재택근무제 6.3%의 기업에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는 시간선택제 16.2%, 시차 출퇴근제 12.7%, 선택근무제 9.0%, 재량근무제 5.3%,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각각 5.0%의 기업에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3〉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201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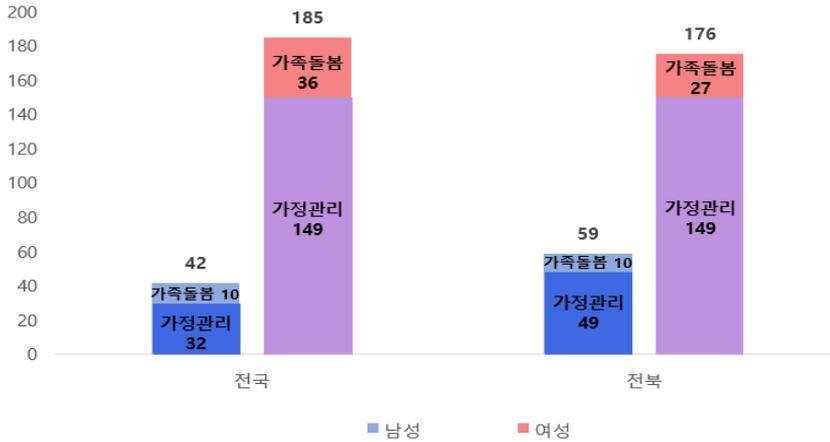
	시간선택제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전국	13.2	16.5	8.6	7.0	4.4	6.3
전북	16.2	12.7	9.0	5.3	5.0	5.0

자료 : 통계청,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9

○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3배 이상 길었으며, 전라북도의 성별 격차보다 전국 평균의 성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전라북도 여성은 하루 평균 176분의 가사노동을 하는데 반해, 남성은 59분에 그쳐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의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적으로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85분으로 전라북도보다 더 길지만 남성의 가사노동 42분으로 더 짧아 성별 가사노동시간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 176분 중 가정관리가 149분, 가족돌봄이 27분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가사노동시간 59분 중 가정관리 49분, 가족돌봄 10분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적으로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185분 중 가정관리 시간은 전라북도 여성과 동일하게 149분이었으나 가족돌봄시간이 36분으로 더 길었고, 남성의 경우는 42분 중 가정관리 시간이 32분으로 전북 남성보다 더 짧았고 가족돌봄시간은 10분으로 전북 남성과 동일함

(단위 : %)



주 : 가사노동시간은 가정관리시간과 가족돌봄 시간으로 나뉘짐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9

〈그림 2-20〉 전국 및 전북 성별 가사노동시간

-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본 가사분담 실태는 전국과 전북의 남편과 아내 모두 가사분담이 부인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2010년 대비 2020년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부인 위주라는 응답률이 낮아지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짐
  - 2020년 기준 가사분담이 부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국의 경우 남편이 75.7%, 아내가 76.8% 응답하였고, 전라북도도 남편이 78.3%, 아내가 78.4% 응답하여 전국 평균보다는 전라북도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가사분담이 아내 위주로 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했을 때, 부인 위주로 가사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응답률은 전국과 전북 모두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률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4〉 가사분담 실태

(단위 : %)

		부인 위주			공평하게 분담	남편 위주			
		부인이 전적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분담	남편이 주로 부인이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2010	전국	남편	87.4	31.2	56.2	10.0	2.9	2.0	0.9
		아내	87.7	34.7	53.0	10.3	2.1	1.7	0.4
	전북	남편	91.6	32.2	59.4	6.6	1.8	1.4	0.4
		아내	88.9	35.7	53.2	9.5	1.6	1.4	0.2
2020	전국	남편	75.7	21.1	54.6	20.7	3.7	2.7	1.0
		아내	76.8	25.1	51.7	20.2	2.9	2.5	0.4
	전북	남편	78.3	25.2	53.1	18.7	3.1	2.6	0.5
		아내	78.4	29.5	48.9	19.7	1.9	1.5	0.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아. 주택마련의 어려움

- 2019년 기준 전국의 주택은 총 18,126,954호이며 그 중 전라북도의 주택은 전국 주택의 약 4% 수준인 724,524호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주택 종류는 아파트가 401,005호(55.3%)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281,271호(38.8%), 연립주택 16,556호(2.3%), 다세대 주택 14,999호(2.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0,693호(1.5%) 순으로 많이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보다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21.6%)보다 약 17.2%p가 높으며 아파트 비중은 전국(62.3%)보다 약 7.0%p, 다세대 주택 비중은 전국(12.1%)보다 약 10.0%p 낮게 나타남
- 전국의 전체 가구 대비 주택의 비율은 86.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는 그보다 높은 96.7%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주택의 수가 전체 가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이 전체 가구보다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였으며 가구 대비 주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73.0%)로 나타남

〈표 2-25〉 전국 주택 종류 및 주택 비율

(단위 : 호, %)

	주택 종류						가구 대비 주택 비율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8,126,954	3,917,683	11,287,048	514,337	2,194,943	212,943	86.8
서울특별시	2,953,964	315,566	1,720,691	110,968	777,205	29,534	73.0
부산광역시	1,249,757	202,101	831,294	31,073	171,485	13,804	89.8
대구광역시	800,340	147,565	579,777	9,438	52,880	10,680	81.7
인천광역시	1,019,365	97,302	648,403	26,309	238,301	9,050	88.6
광주광역시	526,161	82,695	419,567	9,383	8,649	5,867	88.3
대전광역시	492,797	80,106	362,190	10,470	34,727	5,304	80.0
울산광역시	391,596	66,107	286,234	7,900	24,809	6,546	87.9
세종특별자치시	132,257	16,168	112,722	1,113	1,547	707	100.4
경기도	4,354,776	504,227	3,021,258	128,890	665,613	34,788	85.4
강원도	627,376	236,397	346,389	20,977	12,336	11,277	97.9
충청북도	625,957	209,753	369,668	16,203	20,539	9,794	93.3
충청남도	850,525	307,197	467,790	23,186	41,242	11,110	95.3
전라북도	724,524	281,271	401,005	16,556	14,999	10,693	96.7
전라남도	787,816	401,717	346,990	15,651	10,787	12,671	104.8
경상북도	1,081,216	456,513	529,133	30,223	47,074	18,273	96.3
경상남도	1,266,739	418,312	767,442	26,476	37,378	17,131	94.0
제주특별자치도	241,788	94,686	76,495	29,521	35,372	5,714	92.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

- 전국의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8.0%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주택은 5,413,626호(29.9%), 30년 이상 된 주택은 3,291,159(18.2%)호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60.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라남도(62.6%)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전체 주택 대비 노후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 전라북도의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은 33.9%, 30년 이상 된 주택은 26.5%로 모두 전국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2-26〉 전국 노후주택 비율

(단위 : 호, %)

	전체 주택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		30년 이상 된 주택		노후주택 비율
			비율		비율	
전국	18,126,954	5,413,626	29.9	3,291,159	18.2	48.0
서울특별시	2,953,964	791,237	26.8	551,001	18.7	45.4
부산광역시	1,249,757	372,406	29.8	297,963	23.8	53.6
대구광역시	800,340	276,581	34.6	145,226	18.1	52.7
인천광역시	1,019,365	341,285	33.5	157,139	15.4	48.9
광주광역시	526,161	183,166	34.8	86,177	16.4	51.2
대전광역시	492,797	193,396	39.2	83,533	17.0	56.2
울산광역시	391,596	143,406	36.6	49,143	12.5	49.2
세종특별자치시	132,257	10,652	8.1	8,150	6.2	14.2
경기도	4,354,776	1,233,677	28.3	393,542	9.0	37.4
강원도	627,376	194,739	31.0	147,405	23.5	54.5
충청북도	625,957	201,889	32.3	130,240	20.8	53.1
충청남도	850,525	242,665	28.5	169,395	19.9	48.4
전라북도	724,524	245,625	33.9	191,915	26.5	60.4
전라남도	787,816	224,497	28.5	268,829	34.1	62.6
경상북도	1,081,216	333,943	30.9	292,390	27.0	57.9
경상남도	1,266,739	371,977	29.4	269,413	21.3	50.6
제주특별자치도	241,788	52,485	21.7	49,698	20.6	42.3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9

○ 전라북도의 빈집은 총 91,138호로 전라북도의 전체 주택인 724,524호의 약 12.6%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국 평균 빈집 비율인 8.4%보다 약 4.2%p 높은 수치이며 전라북도의 빈집 비율은 전남(15.5%), 제주(15.1%), 강원(13.4%), 경북(13.3%), 충남(12.7%)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임
- 빈집 비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3.2%), 대구(5.1%), 대전(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빈집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도단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빈집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전라북도의 빈집 유형은 아파트가 51.2%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37.3%, 다세대 주택 5.2%, 연립주택 4.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9% 순으로 나타남

〈표 2-27〉 전국 빈집 비율

(단위 : 호, %)

	전체 주택		빈집					
			비율	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8,126,954	1,517,815	8.4	22.0	55.0	5.0	16.4	1.6
서울특별시	2,953,964	93,402	3.2	4.0	46.7	6.3	41.5	1.6
부산광역시	1,249,757	109,651	8.8	13.0	52.2	3.5	29.8	1.5
대구광역시	800,340	40,721	5.1	17.6	69.8	2.3	7.9	2.3
인천광역시	1,019,365	66,695	6.5	10.0	43.8	4.1	40.7	1.5
광주광역시	526,161	39,625	7.5	15.0	75.1	2.9	5.3	1.7
대전광역시	492,797	29,640	6.0	11.9	67.2	4.6	14.6	1.8
울산광역시	391,596	33,114	8.5	9.6	68.2	5.2	14.8	2.1
세종특별자치시	132,257	16,437	12.4	6.6	87.6	2.1	3.3	0.5
경기도	4,354,776	278,815	6.4	5.2	57.9	5.7	30.0	1.2
강원도	627,376	84,382	13.4	25.4	62.2	6.5	4.0	1.8
충청북도	625,957	77,520	12.4	25.0	63.1	4.2	6.0	1.7
충청남도	850,525	107,609	12.7	23.1	59.5	5.8	10.2	1.4
전라북도	724,524	91,138	12.6	37.3	51.2	4.4	5.2	1.9
전라남도	787,816	121,767	15.5	49.4	43.9	2.9	2.3	1.5
경상북도	1,081,216	143,560	13.3	37.8	49.2	4.5	6.8	1.8
경상남도	1,266,739	147,173	11.6	34.8	55.7	3.4	4.6	1.5
제주특별자치도	241,788	36,566	15.1	24.2	29.7	20.8	23.5	1.9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9

- 시도별 주택 점유 형태를 확인한 결과 2019년 기준 전라북도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70.0%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있는 월세가 16.0%로 뒤를 이었으며 전세 7.2%, 무상 3.7%, 보증금 없는 월세 3.1% 순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자가 비율은 전국 평균(58.0%)보다 약 12%p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남(74.5%)과 경북(71.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세 비율은 7.2%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전국(19.7%)보다 약 3.7%p 낮았음

〈표 2-28〉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

	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전국	100.0	58.0	15.1	19.7	3.3	3.9
서울특별시	100.0	42.7	26.0	24.8	3.3	3.2
부산광역시	100.0	62.2	11.0	22.2	2.0	2.7
대구광역시	100.0	59.8	12.2	20.7	4.1	3.2
인천광역시	100.0	60.2	15.6	17.4	3.2	3.7
광주광역시	100.0	63.1	9.4	20.8	4.1	2.6
대전광역시	100.0	53.8	15.5	24.0	3.1	3.6
울산광역시	100.0	64.1	8.8	21.0	2.1	4.0
세종특별자치시	100.0	53.3	16.5	19.0	6.5	4.7
경기도	100.0	53.5	19.2	20.6	2.6	4.1
강원도	100.0	64.6	8.4	15.6	4.7	6.8
충청북도	100.0	66.1	9.8	16.1	3.7	4.4
충청남도	100.0	67.6	9.0	13.7	4.5	5.1
전라북도	100.0	70.0	7.2	16.0	3.1	3.7
전라남도	100.0	74.5	7.4	10.2	3.1	4.8
경상북도	100.0	71.7	5.5	13.8	4.5	4.4
경상남도	100.0	68.6	7.6	17.9	2.0	3.9
제주특별자치도	100.0	58.1	3.4	15.2	14.0	9.3

주 : 2019년 기준 사글세는 모든 지역에서 0.05% 미만으로 제외  
 자료 : 통계청, 주거실태조사, 2019

- 전국의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7년 11월 매매가격을 100.0으로 잡았을 때 2010년도는 88.4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97.8 수준으로 5년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11월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05.3 수준으로 2017년 대비 주택 매매 가격이 약 5% 상승함
  -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2010년(89.0) 대비 2015년(98.1)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약 10% 수준의 상승을 보였으나 2020년 기준 지수는 100.3으로 2017년과 비교할 때 전국 평균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것과 다르게 전라북도의 주택 매매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2020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2020년

11월 기준 매매가격지수가 137.6으로 2017년 대비 약 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동기간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경상남도(93.1)로 나타남

〈표 2-29〉 전국 매매가격지수 추이

(단위 : 2017.11 = 100.0)

	2010.11	2015.11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0.11
전국	88.4	97.8	98.6	100.0	101.2	100.5	105.3
서울특별시	95.0	94.8	97.0	100.0	106.8	107.3	110.8
부산광역시	95.0	97.5	98.4	100.0	101.9	101.3	110.0
대구광역시	100.0	97.7	98.5	100.0	100.4	100.9	107.6
인천광역시	79.2	94.5	97.3	100.0	98.7	96.8	100.8
광주광역시	70.4	100.8	99.0	100.0	103.4	104.8	109.5
대전광역시	75.8	98.2	98.6	100.0	103.5	104.4	105.4
울산광역시	88.0	98.4	98.5	100.0	102.1	108.4	123.2
세종특별자치시	80.8	100.2	100.9	100.0	93.8	89.8	94.7
경기도	-	95.2	95.8	100.0	102.2	100.4	137.6
강원도	81.0	96.2	97.5	100.0	98.7	95.7	97.1
충청북도	81.8	101.0	100.3	100.0	97.7	94.4	97.2
충청남도	86.1	102.1	100.5	100.0	98.3	96.5	99.0
전라북도	89.0	98.1	98.1	100.0	100.1	98.7	100.3
전라남도	88.8	96.7	97.7	100.0	102.6	104.7	107.0
경상북도	82.6	102.5	100.9	100.0	98.2	95.9	96.5
경상남도	80.8	101.9	101.6	100.0	95.5	91.7	93.1
제주특별자치도	78.1	92.5	98.3	100.0	101.0	98.8	96.2

주 : 기준시점 = 2017년 11월

자료 : 통계청,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년도

- 전세가격지수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기준시기인 2017년 11월과 가장 최근인 2020년 11월의 전세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2010년도의 전세가격은 2017년과 비교할 때 약 75.7% 수준이었으나 5년 만에 약 29%가 증가하여 2015년에 현재 수준의 약 98%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2017년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다소 낮아졌다가 다시 2017년 수준의 가격을 회복함
  - 전라북도의 경우 2010년에는 전국(75.7)보다 전세가격지수가 87.0으로 10p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에는 전세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11월 기준 전북의 전세가격지수는 98.4로 기준시기를 2017년 11월보다 약 2% 떨어진 수준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2020년 주택전세가격의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로 나타남. 경기도의 2020년 11월 기준 전세가격지수는 140.6으로 동기간 매매가격지수보다 더욱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매매가격지수와 동일하게 2017년 대비 2020년 전세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경상남도(72.8)로 나타남

〈표 2-30〉 전국 전세 가격지수 추이

(단위 : %)

	2010.11	2015.11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0.11
전국	75.7	97.8	99.3	100.0	98.4	96.7	100.4
서울특별시	73.0	95.8	98.1	100.0	100.6	99.6	103.0
부산광역시	70.9	96.7	98.9	100.0	97.3	95.6	101.4
대구광역시	77.5	96.1	98.4	100.0	98.9	98.1	103.6
인천광역시	77.7	96.1	99.0	100.0	98.1	96.0	97.7
광주광역시	68.0	101.6	100.0	100.0	100.1	101.1	103.9
대전광역시	72.1	97.8	98.8	100.0	101.0	100.7	101.6
울산광역시	83.7	97.0	98.4	100.0	100.0	101.8	111.1
세종특별자치시	80.0	100.3	100.9	100.0	91.7	86.6	94.7
경기도	78.0	104.2	108.3	100.0	100.9	100.1	140.6
강원도	76.4	96.7	98.1	100.0	97.7	93.8	95.3
충청북도	79.8	97.1	98.9	100.0	97.7	94.1	96.6
충청남도	86.4	101.9	101.1	100.0	97.4	96.3	99.0
전라북도	87.0	97.7	98.5	100.0	99.6	98.0	98.4
전라남도	81.0	97.4	98.4	100.0	101.1	101.5	102.7
경상북도	78.6	102.2	101.2	100.0	97.3	94.9	95.2
경상남도	80.8	101.8	102.4	100.0	95.5	91.1	92.8
제주특별자치도		97.2	99.8	100.0	98.3	95.7	93.9

주 : 기준시점 = 2017년 11월

자료 : 통계청,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년도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전국 평균적으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기준으로는 전

세가격이 매매가격의 65.3% 수준임

- 전라북도 역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남. 2020년 11월 기준 전라북도의 전세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 대비 69.1% 수준으로 나타남
- 전국에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이며 2020년 11월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1.1% 수준임. 반면 가장 전세가격 비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6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1〉 전국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단위 : %)

	2015.11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0.11
전국	65.9	66.8	66.5	67.1	65.8	65.3
서울특별시	65.3	66.3	65.7	65.4	61.3	61.0
부산광역시	69.1	70.6	70.3	70.5	68.7	67.0
대구광역시	67.5	68.5	68.7	71.9	71.0	70.0
인천광역시	67.6	67.8	66.8	66.0	65.8	65.0
광주광역시	67.2	67.7	67.2	65.8	65.9	65.3
대전광역시	74.5	75.1	75.2	72.7	70.9	71.1
울산광역시	67.3	68.1	68.6	69.6	67.2	64.8
세종특별자치시	65.7	66.0	66.2	66.2	64.4	67.1
경기도	50.8	55.4	49.1	51.9	50.6	50.6
강원도	65.7	65.8	65.6	68.4	68.6	69.0
충청북도	59.7	61.6	63.2	67.4	67.3	67.7
충청남도	60.2	61.1	61.1	63.5	64.4	65.0
전라북도	66.4	67.2	67.1	69.1	69.4	69.1
전라남도	64.0	64.2	63.8	61.9	61.6	61.3
경상북도	59.4	59.9	60.1	62.5	63.0	63.3
경상남도	61.6	62.5	62.2	62.9	63.2	63.7
제주특별자치도	62.3	62.3	61.6	62.4	61.4	61.9

주 : 기준시점 = 2017년 11월

자료 : 통계청,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년도

- 전국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2021년 5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362.1만원/m<sup>2</sup>으로 나타남
  - 중위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021년 5월 기준 전국 평균보다 약 3배 높은 1,188.4만원/m<sup>2</sup>로 나타났으며 세종이 776.9만원/m<sup>2</sup>, 경기가 520.0만원/m<sup>2</sup>으로 뒤를 이음
  - 전북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93.5만원/m<sup>2</sup>로 17개 시도 중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198.0만원/m<sup>2</sup>)과 전남(203.3만원/m<sup>2</sup>)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남

〈표 2-32〉 전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

(단위 : 만원/m<sup>2</sup>)

	2015.05	2016.05	2017.05	2018.05	2019.05	2020.05	2021.05
전국	301.0	326.1	370.2	316.5	306.6	330.4	362.1
서울특별시	523.2	594.4	683.2	648.0	913.3	903.6	1,188.4
부산광역시	284.7	310.3	336.3	318.1	330.6	354.3	373.5
대구광역시	312.6	289.5	313.5	328.3	310.8	331.1	362.6
인천광역시	289.5	309.0	322.8	329.6	324.6	348.3	410.6
광주광역시	216.8	229.4	248.0	259.4	247.6	270.6	288.3
대전광역시	245.0	255.4	259.8	267.7	288.2	319.2	391.8
울산광역시	278.6	290.0	293.4	268.0	280.0	326.7	307.3
세종특별자치시	210.4	213.8	384.1	416.0	390.1	514.7	776.9
경기도	336.7	364.3	403.1	388.4	375.2	400.4	520.0
강원도	169.1	186.2	200.1	192.5	176.9	190.8	222.1
충청북도	209.3	192.0	196.5	183.8	176.5	253.9	208.8
충청남도	216.8	194.4	200.4	197.1	206.3	220.6	224.9
전라북도	170.4	170.5	182.2	179.2	175.5	184.9	193.5
전라남도	148.0	151.4	166.7	177.3	185.4	194.2	203.3
경상북도	186.2	169.4	173.5	166.8	161.8	201.8	198.0
경상남도	245.1	232.9	240.5	228.4	222.0	240.5	267.7
제주특별자치도	263.1	328.5	357.5	350.1	333.6	336.0	388.9

자료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각년도

- 전국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역시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에는 매매보다 전세 중위가격이 낮았으나 2020년 이후 전세 중위가격이 매매 중위가

격을 상회함. 전국 평균 2015년 5월 260.5만원/m<sup>2</sup>로 매매 가격의 86.4% 수준이었던 전세 중위가격은 2021년 5월 388.8만원/m<sup>2</sup>로 매매 가격의 107.4% 수준에 달함

-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서울로 2021년 5월 기준 전국 평균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679.7만원/m<sup>2</sup>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매매 중위가격을 상회하지 않았음. 서울에 이어 경기 404.1만원/m<sup>2</sup>, 세종이 371.7만원/m<sup>2</sup>으로 뒤를 이었으나 역시 매매 중위가격을 상회하지 않음
- 반면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208.5만원/m<sup>2</sup>)으로 나타났으며 전남(212.3만원/m<sup>2</sup>)과 전북(219.4만원/m<sup>2</sup>)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뒤를 이었음. 전북의 경우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매매 중위가격을 상회하여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를 보임

〈표 2-33〉 전국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단위 : 만원/m<sup>2</sup>)

	2015.05	2016.05	2017.05	2018.05	2019.05	2020.05	2021.05
전국	260.5	288.7	308.4	299.5	296.4	335.5	388.8
서울특별시	413.4	454.9	485.8	523.5	536.5	588.9	679.7
부산광역시	223.9	250.4	268.8	261.0	267.0	282.3	321.2
대구광역시	250.8	237.7	236.5	262.5	259.0	300.5	334.2
인천광역시	216.9	250.4	275.5	267.5	258.9	299.1	344.9
광주광역시	180.5	212.0	212.8	233.6	235.5	250.5	275.6
대전광역시	200.2	215.3	231.3	233.7	248.6	283.9	306.1
울산광역시	212.1	217.3	233.4	200.1	188.4	235.5	294.9
세종특별자치시	141.7	235.7	165.4	176.5	200.2	270.6	371.7
경기도	271.0	307.4	331.6	317.7	311.1	350.1	404.1
강원도	125.5	150.4	171.1	182.4	153.1	171.3	208.5
충청북도	164.9	173.2	181.2	176.9	168.3	216.8	247.2
충청남도	176.1	176.6	177.4	179.7	179.6	215.3	241.5
전라북도	134.6	152.7	177.8	189.2	188.4	212.6	219.4
전라남도	126.7	129.5	150.7	163.1	175.3	184.4	212.3
경상북도	164.8	158.9	167.0	164.7	166.8	181.8	241.8
경상남도	200.5	218.0	200.0	188.3	180.6	201.0	255.8
제주특별자치도	200.9	249.2	247.6	235.9	260.7	265.6	271.7

자료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각년도

# 3 장

## 저출산 정책 분석

- 
1. 중앙의 저출산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특성
  2.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성과 및 추진방향 분석
  3. 2021년도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분석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제3장 저출산 정책 분석

## 1. 중앙의 저출산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특성

### 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개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8.12)」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하여 과제 설정
  -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을 강조
- **(정책방향)**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발전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함
  -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 저출산이 '사회·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임을 인식하고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고자 함
-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함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③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출함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4대 추진전략 하에 20개 대과제, 180여개의 중과제로 구성
- **(과제영역)**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①아동·2040·은퇴세대 삶의 질 향상 ②평등한 일터·가정의 성평등 구현 ③인구변화 대비라는 목표를 유지하며 관련 과

제를 중심으로 구성

- 저출산·고령화 두 축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역량제고와 사회혁신에 관한 영역을 별도로 설정
- 정책목표와 관련되나 그간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과제들도 포함하되 이 중 중요한 영역은 대과제 수준으로 부각하여 제시 ※예시) 워라밸 등 노동시장 개선, 아동기본권, 성·재생산권, 다양한 가족, 연령통합, 사회안전망 등

## ○ 주요 핵심 정책

㉠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투자('22~)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 300만원을 의료비·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 명에서 '25년 20만 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 (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년 53만 명까지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 나.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 1) 주요 정책 방향

-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2021년도 72.7조원 투자
- 양육·돌봄 등 '가족지원' 강화 및 2022년 핵심과제 이행 준비
- 성평등, 가족 다양성, 세대 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 유도
-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 제고

### 2)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함
  -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등 '22년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도 준비
  - \* 영아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21.3월, 고영인 의원 등),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21.3월 서영석 의원 등) 국회 발의
- **(영유아·아동)**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1. 550개소, '25. 공보육 이용률 50%목표), 온종일 돌봄 확대(21. 초등돌봄교실 700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등, '22. 53만 명 목표)
- **(양육부모)**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20. 만 18세→'21. 만 19세),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최대 월10만원)
-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확대(365천명)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21. 1.7만 명, '21~'25. 누적 18만 명)

○ (주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 및 고령자 대상 행복주택,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1. 11.1만호, '21~'25. 67.3만호)

<표 3-1> 2021년 정책대상별 주요 과제

현금성 지원	대상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수당, 첫 만남 꾸러미(II) '22년 신규 도입 위한 차질 없는 준비(법령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수당: '22년 단계적 도입, '25년 월50만원</li> <li>· 첫 만남 꾸러미(II): 아동 출생시 200만원 바우처</li> </ul> </li> </ul>	영유아·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대</li> <li>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돌봄교실 700실,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3.1만 가구)</li> <li>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지원 확대 (365천명)</li> </ul>	청소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 ('21. 1.7만 명, '21~'25년 18만 명)</li> <li>청년 행복주택 1.0만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0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4만호 공급</li> <li>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연400→500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연령 상향 (18→19세)</li> <li>저소득 출산가정 '산모 회복, 신생아 건강 지원사업' 확대(중위소득 120→150%)</li> </ul>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한 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추진</li> <li>· 노동위원회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 신설</li> </ul> </li> <li>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 확대 (60→75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 만남 꾸러미(I) 도입 준비(임신시,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60→100만원)</li> </ul> </li> <li>육아휴직 지원 신설·확대('22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고,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li> <li>·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80%, 150만원)</li> <li>·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지원</li> <li>·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200만원)</li> </ul> </li> <li>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최대 월 10만원)</li> </ul>	아동양육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0.5만호 공급</li> <li>· 중형주택(전용60-85m2) 신규도입</li> </ul> </li> <li>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건설) 1.6만호 공급</li> <li>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활성화</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li> </ul> </li> </ul>

자료 : 저출산시행계획 보도자료, 2021.03.30. 보도

## 2.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성과 및 추진방향 분석

### 1)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예산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해당하는 2020년 전라북도 시행계획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해당하는 2021년 전라북도 시행계획의 저출산 사업은 2020년 311건에서 2021년 331건으로 20건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8,085백만원이 증가함
  - 사업비가 국비가 포함되는 공통사업은 2020년 63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증가하였고, 지자체의 자체사업은 2020년 248건에서 2021년 264건으로 증가함
  - 2020년 기준 전체 저출산 사업 총예산에서 공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0%,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0%로 나타났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해당하는 2021년 시행계획에서는 공통사업 72.4%, 자체사업 27.6%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약간 증가함
  - 비예산사업의 경우 공통사업은 2020년과 2021년이 동일하였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2020년 25건에서 2021년 26건으로 1건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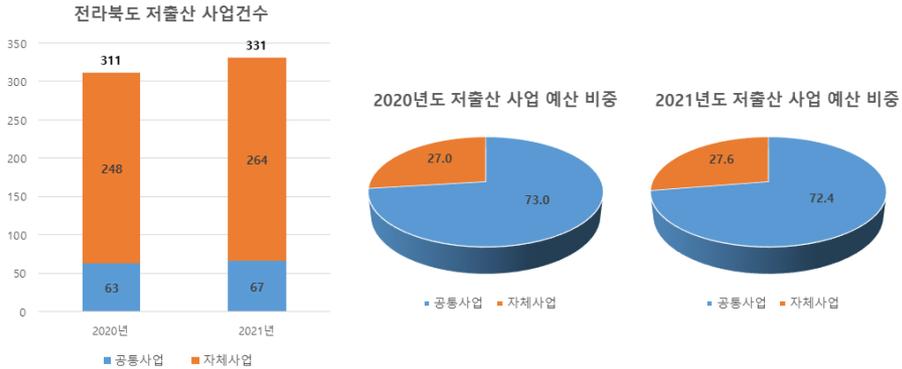
〈표 3-2〉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개요

(단위 : 건, 백만원)

	2020년(제3차)		2021년(제4차)		
	사업건수	예산	사업건수	예산	
저출산 사업 수	311	700,791	331	708,876	
공통사업	63	511,554	67	513,204	
자체사업	248	189,237	264	195,672	
예산	공통사업	62	511,554	66	513,204
	자체사업	223	189,237	238	195,672
비예산	공통사업	1	-	1	-
	자체사업	25	-	26	-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단위 : 건, %)



〈그림 3-1〉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수 및 예산 비중 비교

## 2) 생애주기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생애주기에 맞는 전라북도 자체사업을 분류해 본 결과, 육아지원 사업이 5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출산지원 사업이 50건, 임신지원 30건, 가족지원 15건, 결혼지원 7건 순으로 나타남
- 2020년과 2021년의 사업건수는 동일하나 2021년의 사업예산(129,972백만원)이 2020년(132,181백만원)보다 약 2,209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결혼과 임신, 출산 사업의 예산은 증가한 반면 육아지원 사업의 예산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결혼지원 사업의 예산이 2020년 339백만원에서 2021년 625백만원으로 약 84% 증가하였음
- 전체 생애주기별 전라북도 자체사업에서 육아지원 사업의 예산이 8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출산지원 사업 15.1%, 임신지원 사업 0.8%, 결혼지원 사업 0.5%, 가족지원 사업 0.2% 순으로 나타남

〈표 3-3〉 생애주기별 전라북도 자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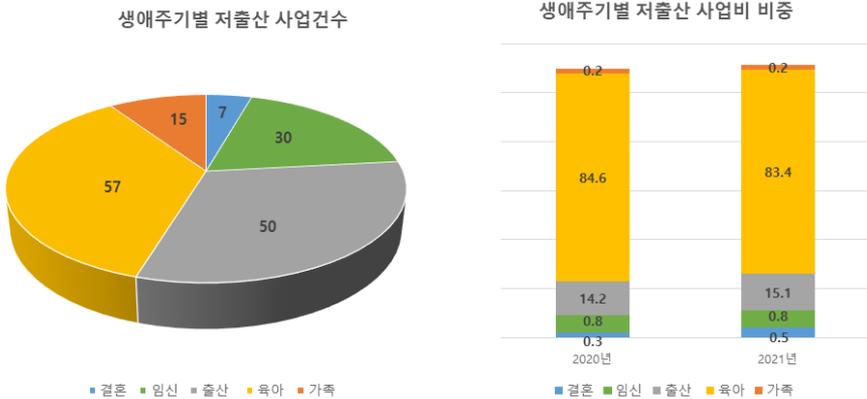
(단위 : 건, 백만원)

	2020년(제3차)		2021년(제4차)	
	사업건수	예산	사업건수	예산
계	159	132,181	159	129,972
결혼	7	339	7	625

	2020년(제3차)		2021년(제4차)	
	사업건수	예산	사업건수	예산
임신	30	1012	30	1,076
출산	50	18,722	50	19,670
육아	57	111,882	57	108,375
가족	15	226	15	226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단위 : 건, %)



<그림 3-2> 생애주기별 전라북도 자체사업 수 및 예산 비중 비교

### 3) 대상 특성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 사업의 대상특성별 전라북도의 저출산 사업은 일반이 가장 많고, 기타, 여성, 소득기준이하, 예비부부/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순으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공통사업은 일반대상이 36건, 소득기준이하 대상이 16건, 기타가 10건, 여성 4건, 예비부부/신혼부부가 1건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는 일반이 148건으로 가장 많고, 기타 42건, 여성 24건, 예비부부/신혼부부 19건, 다자녀가정 13건, 다문화가정과 소득기준이하 대상이 각 9건으로 나타남
-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공통사업의 경우 일반 대상 사업이 4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일반 대상이 11건, 소득기준이하 대상 사업과 기타 대상 사업이 각 2건, 다문화가정 대상 사업이 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사업비는 일반 대상 사업의 예상이 전체 총예산의 77.2% 수준으로 사업 수의 비중인 55.6%보다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소득기준 이하 대상 8.9%, 기타 대상 7.0%, 예비/신혼부부 대상 4.6%, 여성 대상 1.7%, 다자녀 가정 대상 0.6%, 다문화 가정 대상 0.2% 순으로 사업비 비중이 나타남
- 2020년과 비교할 때 사업비 비중에 큰 변화는 없으나 일반과 예비/신혼부부 대상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고, 소득기준 이하, 기타 대상 비중은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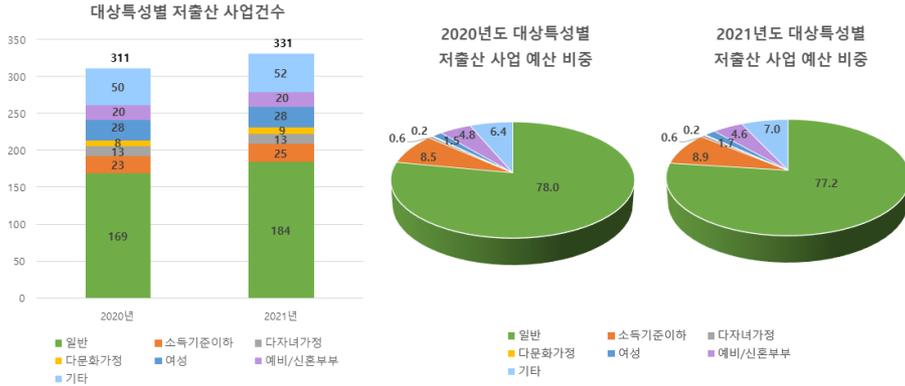
〈표 3-4〉 대상특성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단위 : 건, 백만원)

		2020년(제3차)		2021년(제4차)	
		공통사업	자체사업	공통사업	자체사업
계	건수	63	248	67	264
	예산	511,556	189,237	513,204	195,672
일반	건수	32	137	36	148
	예산	405,257	141,320	407,379	139,687
소득기준이하	건수	16	7	16	9
	예산	57,615	1,909	56,324	6,817
다자녀가정	건수	0	13	0	13
	예산	0	3,950	0	3,979
다문화가정	건수	0	8	0	9
	예산	0	1,159	0	1,154
여성	건수	4	24	4	24
	예산	7,909	2847	9,033	2,719
예비부부 /신혼부부	건수	1	19	1	19
	예산	32,185	1,647	30,617	1,792
기타	건수	10	40	10	42
	예산	8,590	36,405	9,851	39,524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단위 : 건, %)



〈그림 3-3〉 대상특성별 전라북도 자체사업 수 및 예산 비중 비교

#### 4) 지원방식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 지원방식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을 분류한 결과, 공통사업은 인프라구축, 서비스, 현금/현물, 바우처, 교육/홍보/정보제공 순으로 사업이 많고 자체사업은 현금/현물, 교육/홍보/정보제공, 서비스, 인프라구축, 기타 순으로 사업이 많음
  - 2021년 기준으로 공통사업은 인프라 구축이 21건으로 전체 공통사업 중 31.3%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15건(22.4%), 현금/현물 14건(20.9%), 바우처 8건(11.9%), 교육/홍보/정보제공 5건(7.5%), 기타 3건(4.5%), 감면/면제/대납 1건(1.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자체사업의 경우 현금/현물 지원 사업이 119건(4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홍보/정보제공 54건(20.5%), 서비스 33건(12.5%), 기타 23건(8.7%), 인프라구축 19건(7.2%), 감면/면제/대납 9건(3.4%), 바우처 7건(2.7%) 순으로 나타남
  - 2020년과 비교할 때 공통사업은 현금/현물 사업이 3건 증가하였고, 인프라구축 사업이 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체사업은 인프라구축 사업이 12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현금/현물 사업이 7건, 감면/면제/대납, 교육/홍보/정보제공, 기타 사업이 각 2건씩, 서비스 사업 1건이 증가함
  - 예산의 경우 2021년 기준 공통사업에서는 현금/현물 사업의 예산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바우처 32.7%, 인프라 구축 16.4%, 서비스 10.0% 순으로 나타남. 반면 자체사업에서는 감면/면제/대납 사업비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

금/현물 35.7%, 인프라 구축 13.5%, 교육/홍보/정보제공 6.1% 순으로 비중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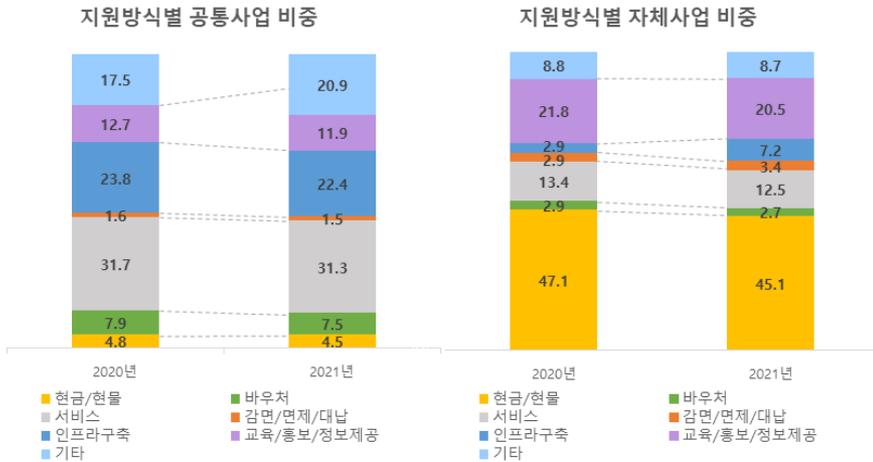
〈표 3-5〉 지원방식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단위 : 건, 백만원)

		2020년(제3차)		2021년(제4차)	
		공동사업	자체사업	공동사업	자체사업
계	건수	63	248	67	264
	예산	511,514	189,237	513,204	195,672
현금/현물	건수	11	112	14	119
	예산	178,731	62,340	186,031	69,845
바우처	건수	8	7	8	7
	예산	179,555	4,274	167,674	4,271
서비스	건수	15	32	15	33
	예산	50,745	4,325	51,296	4,278
감면/면제/대납	건수	1	7	1	9
	예산	403	75,981	416	74,475
인프라구축	건수	20	17	21	19
	예산	75,990	25,929	84,309	26,460
교육/홍보/정보제공	건수	5	52	5	54
	예산	4,520	12,804	4,521	11,889
기타	건수	3	21	3	23
	예산	21,610	3,584	18,957	4,454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단위 : 건)



〈그림 3-4〉 지원방식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비중

#### 4) 지원 혜택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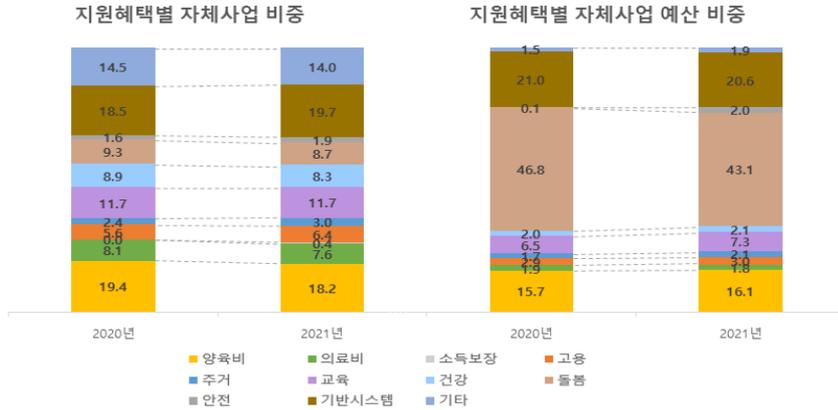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저출산 자체사업을 지원혜택별로 분류한 결과, 2021년 기준 기반시스템 지원 사업이 가장 많았고, 양육비 지원, 기타, 교육, 돌봄, 건강, 의료비 지원 순으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혜택별 저출산 자체사업은 기반시스템 지원 사업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육비 지원 48건, 기타 37건, 교육 지원 31건, 돌봄 지원 23건, 건강 지원 22건, 의료비 지원 20건, 고용지원 17건, 주거 지원 8건, 안전 지원 5건, 소득보장 1건 순으로 나타남
  - 2020년과 비교할 때 기반시스템 지원 사업이 6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 지원 3건, 주거와 교육 지원 각각 2건, 소득보장, 안전, 기타가 1건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전체 사업 중 돌봄 사업의 사업비가 43.1%로 가장 많았으며 기반 시스템 사업비 비중이 20.6%로 뒤를 이음. 이어서 양육비 지원 사업 16.1%, 교육 지원 7.3%, 고용 지원 3.0%, 주거 지원과 건강 지원이 각각 2.1% 등으로 나타남

〈표 3-6〉 지원혜택별 전라북도 자체사업

(단위 : 건, 백만원)

	2020년(제3차)		2021년(제4차)	
	사업건수	예산	사업건수	예산
계	248	189,237	264	195,672
양육비	48	29,744	48	31,409
의료비지원	20	3,544	20	3,526
소득보장	0	0	1	10
고용	14	5,452	17	5,804
주거	6	3,131	8	4,193
교육	29	12,372	31	14,187
건강	22	3,839	22	4,163
돌봄	23	88,589	23	84,327
안전	4	105	5	3,937
기반시스템	46	39,688	52	40,372
기타	36	2,773	37	3,744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그림 3-5> 지원혜택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및 예산 비중

### 5) 시행계획 영역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 제4차 저출산 시행계획은 1.창의적 인재육성 및 청년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조성, 2.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보장, 3.일·가정양립환경 조성, 4.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5. 포용적 가족문화조성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 기반 구축 등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짐

- 해당 영역에 따라 전라북도의 저출산 사업을 분류한 결과, 공통사업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의 사업이 32개로 가장 많고, 자체사업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보장' 영역의 사업이 82개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영역별 사업의 비중은 공통사업의 경우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 사업이 47.8%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 20.9%, '청년의 안정적 삶의 기반구축' 영역 17.9%,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구축' 영역 11.9%, '일·가정양립환경 조성' 영역 1.5% 순으로 사업이 많음. 반면 사업비는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이 77.9%에 달하여 해당 영역이 사업의 비중에 비해 사업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자체사업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영역의 사업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청년의 안정적 삶의 기반구축' 영역이 24.6%,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이 20.8%,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구축' 영역 16.3%, '일·가정양립환경 조성' 영역 7.2% 순으로 공통사업보다 영역별 사업의 비중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영역별 사업비는 공통사업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이 55.5%로 가장 높았으나 비중은 20%p 이상 낮았고, ‘청년의 안정적 삶의 기반구축’ 영역의 사업비가 29.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표 3-7〉 2021년 제4차 저출산 시행계획 영역별 사업

(단위 : 건, 백만원)

	공통사업		자체사업	
	사업건수	예산	사업건수	예산
창의적 인재육성 및 청년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조성	12	55,327	65	57,175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보장	14	19,560	82	17,692
일·가정양립환경 조성	1	-	19	3,815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32	399,866	55	108,564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 기반구축	8	38,450	43	8,426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단위 : %)

2021 저출산 시행계획 영역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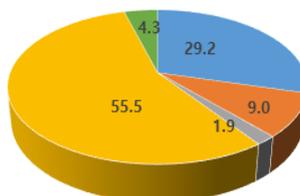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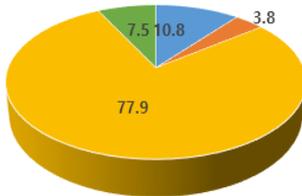


〈그림 3-6〉 2021년 제4차 저출산 시행계획 영역별 사업 비중

(단위 : %)

시행계획 영역별 공통사업 사업비 비중

시행계획 영역별 자체사업 사업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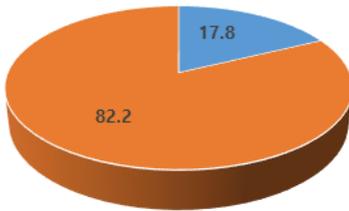
〈그림 3-7〉 2021년 제4차 저출산 시행계획 영역별 사업비 비중

## 6) 국비제외 전라북도 저출산 자체사업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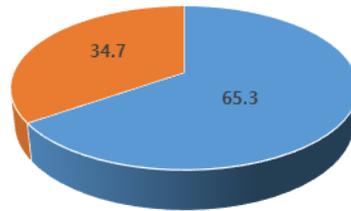
- 국비 사업을 제외한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 자체사업 중 소관기관이 전라북도인 광역사업과 각 시군인 시군사업을 나눠 살펴본 결과, 사업 비중은 광역사업보다 시군사업이 높은 반면 사업 예산 비중은 시군사업보다 광역사업이 높게 나타남
  - 국비를 제외한 2021년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중 광역사업은 전체 264건 중 47건에 불과하여 17.8%를 차지하였으며 시군사업은 217건으로 전체 전라북도의 자체사업 중 82.2%를 차지함
  - 반면 사업비의 경우 광역사업 예산이 전체 저출산 사업 예산의 과반이 넘는 65.3%를 차지하였고, 시군사업 예산은 34.7%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 건수 대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 광역사업은 사업 1건 당 약 2,718백만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사업은 313백만원 수준이었음.

(단위 : %)

2021년도 국비 제외 저출산 사업 비중



2021년도 국비 제외 저출산 사업 예산 비중



■ 광역사업 ■ 시군사업

■ 광역사업 ■ 시군사업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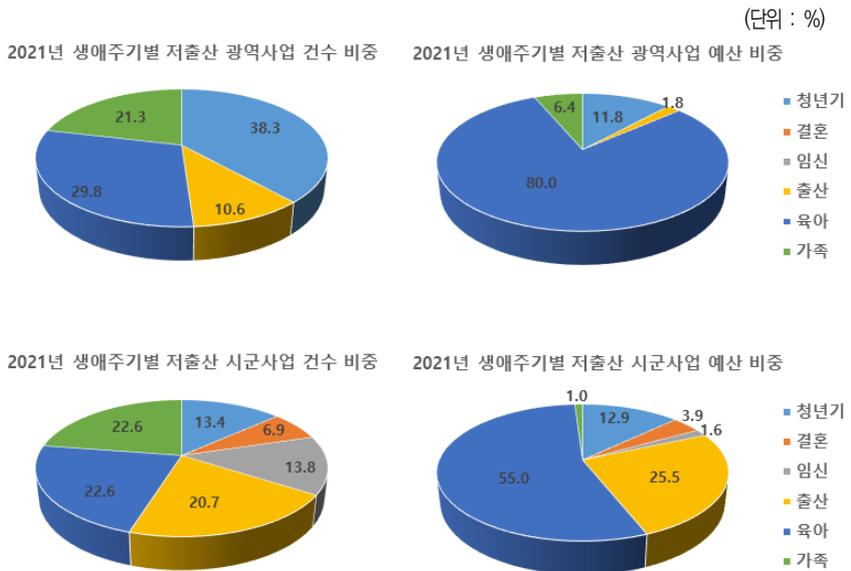
〈그림 3-8〉 국비 제외 저출산 사업 수 및 예산 비중 비교

- 생애주기별 광역사업은 청년기, 육아, 가족, 출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소관의 광역사업 중 결혼과 임신에 대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47건의 광역사업 중 청년기 사업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기 사업이 29.8%, 가족 사업이 21.3%, 출산 사업이 10.6% 순으로 나타남. 다만, 광역사업에서는 생애주기 중 결혼과 임신 관련 사업이 없었음
  - 사업비는 육아 사업이 80.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청년기 11.8%, 가족 6.4%, 출산 1.8% 순으로 나타남

○ 시군의 생애주기별 저출산사업은 상대적으로 광역사업보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육아와 가족 사업이 가장 많으며 출산, 임신, 청년기, 결혼 순으로 사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체 217건의 시군사업 중 육아와 가족 사업이 각각 22.6%를 차지하였으며 출산 사업 20.7%, 임신 사업 13.8%, 청년기 사업 13.4%, 결혼 사업 6.9%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시군사업비 67,924백만원 중 육아기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37,37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55.0%로 나타남. 출산기를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25.5%로 뒤를 이었으며, 청년기 12.9%, 결혼 3.9%, 임신 1.6%, 가족 1.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9〉 생애주기별 전라북도 국비제외 저출산 사업수 및 예산 비중 비교

### 3. 2021년도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분석

#### 가. 2021년도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개요

##### 1) 정책 추진방향

##### ○ 청년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

- 취업, 고용불안, 주택마련, 결혼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결혼을 유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일자리(취업·창업) 창출을 위한 정책 확대 및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자격제한 완화로 현재 직면해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

##### ○ 모든 산모의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지원

-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확대 및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마련
-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 대다수임. 대상을 모든 임산부로 확대 시행 필요
- 각 시군에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예산과 지원 대상의 규모를 체계화함으로써 정책 체감도 제고
- 전북에는 의료·보건인프라가 취약\*한 6개 군이 있으며, 취약지역 산모들의 건강 문제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야기함. 적절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분배와 확충을 통한 기반 조성 마련 필요
- \* 6개 군에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음. 또한 산후조리원 시설 부족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확보 및 정책 사각지대 발생이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등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정책을 마련

##### ○ 성 평등한 육아와 돌봄 문화 보장 및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 청년들의 생애전망 인식이 '개인 단위의 생존과 노동중심적 생애'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는 여건 조성에 집중
- 직장에서 출산·양육자에 대한 인식개선 전환 및 출산·육아제도 확립하여 일·생활 균형을 확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보육시설 인프라와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에 비해 미흡한 돌봄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기반 형성.

\* 국공립 시설(44.2%) 부족 및 맞벌이 가정에 대한 돌봄 공백 발생 등

→ 모든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 수요(주말, 야간, 출퇴근 시간대, 병아 보육 등) 관련 서비스 마련 및 국공립 시설 확충으로 돌봄체계의 기반 마련



<그림 3-10>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개요

2) 2021년도 역점시책 : 5개 분야 265개 사업

- 2021년도 전북의 저출산 시행계획 가운데 역점시책은 5개 분야 265개 사업임
  - 1) 창의적 인재육성 및 청년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및 일자리지원을 위한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및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14개 시군), 청년수당 및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7개 시군)등임
  - 2)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취약지역 임신부 이송지원(7개 시군) 등 임
  - 3)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남성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실시 활성화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의 날 확대 운영,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등임
  - 4)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남원) 임신·출산축하용품(육아용품)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5개 시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3개 시군)
  - 5) 포용적 가족 문화 조성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 구축: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14개 시군),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교육지원, 다문화(글로벌) 마을 학당 운영(14개 시군),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 등임

〈표 3-8〉 2021년도 저출산 분야 역점시책

(단위: 건, 백만원)

	사업 수	예산
창의적 인재 육성 및 청년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67	65,477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47	4,514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20	4,216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86	111,527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 구축	44	9,935
계	265	196,669

- 이상 전북의 2021년 저출산 시행계획 역시 기존의 제3차 저출산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주택가격, 성차별과 돌봄 공백에 대한 변화와 선제적 대응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전북지역의 고용, 주거, 돌봄, 보육 등의 영역에서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한 지역으로 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함. 특히 2040세대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청년의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를 연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나. 2021년도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내용 및 특성

- 본 장에서는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중앙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토대로 수립 된 2021년도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사업내용에 관하여 전북의 출산정책 방향과 특성,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함
  - 2021년도 전북의 저출산 시행계획은 중앙의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최초의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책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속에서 지역 차원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요구됨
  - 따라서 2021년도 전북의 저출산 정책은 각 영역별로 중앙의 제 4차 정책과의 연계성, 주요정책 및 핵심과제의 반영 정도, 전년도 과제와의 연속성, 지역특성 및 도민 욕구와의 부합성 등에 기초하여 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 2021년 전북의 저출산 시행계획의 분석은 정책수혜자의 관점에서 지원혜택에 해당하는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총 범주는 8개 분야로 고용 및 소득보장, 양육 및 돌봄, 건강 및 의료, 주거, 교육, 안전, 기반시스템, 기타 등임
  - 본 사업은 국비사업을 제외한 전라북도와 시군 자체가 추진하는 총 265개 사업에 대한 내용분석임

## 1) 고용 및 소득보장

- 고용 및 소득보장 관련 정책은 총 17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시군자체 사업은 13개이며 2021년 시행계획 가운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2개임
  - 혼인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청년일자리와 주거정책으로 판단하고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고용 지원을 위해 장기근속 등 단계별 부문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 전라북도 시행계획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신규 사업은 총 2건으로 전라북도 자체사업 1건, 시군자체사업 1건 등으로 4차 시행계획에 부합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는 미미한 수준이며 제3차 시행계획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임
  
- 전북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취업으로 인한 청년들의 지역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지역에서 일하고 결혼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취·창업 지원과 고용안정, 청년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취업지원 정책 등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제조업에 대한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한 전북형 취업지원 정책추진이 강화되어야 함. 현재 추진 중인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재도전청년일자리매칭사업' 등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청년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해당함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를 위한 청년취업지원 사업 강화가 추진됨. 전북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2.7%에 해당하고 있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어야 하나 현행 추진 중인 2개의 사업(전북형 청년취업지원 및 재도전청년일자리매칭사업)은 대상인원이 소수에 불과하여 향후 확대 필요
  - 청년실업 예방과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시군주체로 현재 8개가 추진 중임. 블라인드채용 등으로 청년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경력지원 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2021년 신규 사업은 '대학생단기인턴' 사업 1개에 그침

〈표 3-9〉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고용 및 소득보장 시책

유형	주체	정책대상	해당시책
고용 (17)	전북 자체 (4)	일반(1)	출산여성농가도우미
		구직자 및 창업지원자 (3)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재도전청년일자리매칭사업(신규)
		전북일자리종합센터운영	
	시군 자체 (13)	일반(2)	공정한채용환경조성, 청년거점공간조성(신규)
구직자 및 창업지원자(8)		청년취업드림카드, 대학생행정연수, 대학생단기인턴(신규), 청년인턴사원제, 방학중대학생일자리사업, 행정인턴사업(2), 청년공공근로사업,	
		기타(3)	다자녀공무원실적가점부여, 친환경농산물급식, 청년대상인구교육
소득(1)	시군 자체(1)	일반(1)	청년동아리지원사업

## 2) 양육 및 돌봄사업

- 양육 및 돌봄 사업은 총 61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 가운데 양육관련 사업은 48개, 돌봄 지원 사업은 23개에 해당하며 제4차 시행계획에서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으며 기존의 사업예산 및 사업량을 확대하여 추진함
- 양육관련 도 자체사업은 4개와 시군 44개이며 돌봄은 도 자체사업이 11개이고 시군자체 사업은 13개에 해당함

〈표 3-10〉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양육 및 돌봄사업 시책

유형	주체	정책대상	해당시책
양육 (48)	전북 자체 (4)	기타(2)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입양축하금지원
		다자녀가정(2)	다자녀가정육아용품지원, 다자녀가정아이조아카드
	시군 자체 (44)	일반(26)	어린이집운영지원,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지원, 아기주민증발급
		기타(5)	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 영유아급간식비, 입양축하금, 초등생 가방구입
		다자녀(4)	다자녀양육비지원, 육아용품, 아이조아카드,
		예비/신혼부부(3)	임신축하금, 결혼장려금
여성(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전주시프로엄마되기, 출생아의료비 지원사업		

유형	주체	정책대상	해당시책
돌봄 (23)	전북 자체 (11)	일정연령이상(1)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
		기존소득이하(1)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지원
		일반(3)	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지원,
		기타(6)	어린이집보육도우미, 보육교직원차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행사지원, 도청어린이집운영, 취약지역 어린이집운영비지원
	시군 자체 (12)	일반(6)	우리마을돌봄공동체운영, 둘째아이이상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 보육아동급간식비지원, 엄마애간식지원사업, 장난감도서관운영, 진안군아동놀이터설치및운영
		다자녀(2)	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운영, 육아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기존소득이하(1)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일정연령이상(1)	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
		기타(2)	직장어린이집확대,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비 지원

- 제3차 계획에 이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마련과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함께하여 아동기본권의 사회적 보장 등을 세부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 전북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는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 전북의 양육과 돌봄지원 사업은 그간의 양육지원 사업인 ‘보육사업’ 등의 개별 정책에 한정되어 있으며, 시설지원과 다자녀 중심의 사업인 한계로 모든 부모의 양육부담경감을 위한 현금과 서비스 지원 사업은 제한적임
  - 여성 독박육아나 여성전담육아에 따르는 양육자 스트레스나 양육경험 부족 등에서 오는 돌봄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 사업은 부족함
  - 최근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인식하고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환경 등을 조성하려는 흐름을 반영하여 시군 단위의 아동놀이터설치 및 운영(진안군) 사업이 반영됨
- 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필요

- 지역사회 돌봄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와 틈새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 필요
- 인구감소에 따른 인프라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시간과 서비스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발굴과 확대 필요

### 3) 의료 및 건강

- 의료 및 건강지원 사업은 총 42개로 이 가운데 의료지원 사업은 20개, 건강지원 사업은 22개로 제4차 저출산 시행계획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으며 기존 사업의 사업량 및 예산을 확대하여 추진함
  - 의료관련 도 자체사업은 총 2개에 불과하며 시군자체 추진은 18개이고 건강지원 사업 중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무하며 시군자체 추진사업은 22개임
-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모의 모성보호 및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사업 등을 추진
  - 전라북도는 임신출산 인프라의 감소와 맞물리면서 분만취약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비(인건)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년 2개소에서 21년 3개소로 확대할 예정임
  - 특히, 관내 출산모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치료와 관련된 산모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산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은 일반적이지만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북 고유의 사업에 해당함
  - 이외에 시군자체 사업으로는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산모들의 수요가 높은 산후조리비지원 사업은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고연령 산모와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임신·출산 양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안심체계 구축과 다양한 가정의 임신부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확대 필요
  -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고연령산모 및 고위험 산모의 증가, 다태아 출산 등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제한적인 산모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수요자의 변화를 반영

- 하기 위한 임신모의 임신출산 안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건강지원 사업으로는 전라북도 자체사업이 없는 가운데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임신모의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이 있음
  -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이 대부분으로 소득기준과 난임 특성에 따른 횟수 제한 등이 있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난임부부 지원 등을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임신출산비용 지원 실효성 강화

〈표 3-11〉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의료 및 건강 시책

유형	주체	정책대상	해당시책
의료 (20)	전북 자체(2)	여성(2)	출산취약지역임산부이송지원, 전라북도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시군자체 (18)	여성(9)	임산부영양제지원, 산모기형아검사, 임산부119안심콜서비스, 임산부건강교실, 분만진료비지원
		일반(2)	임산부건강관리지원,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예비/신혼 부부(6)	난임치료 및 진단지원, 예비맘 건강검진, 임산부산전검사, 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
		소득기준 이하(1)	산후조리비용지원
건강 (22)	시군자체 (22)	일반 (13)	친환경쌀사립유치원급식지원, 학교급식우수농산물지원, 학교급식지역가공품지원, 친환경쌀조식식차역지원, 지역아동센터친환경급식보전비지원, 출산장려금지원(4), 임산부건강관리지원사업, 맘편한임신지원원스톱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지원
		여성(7)	산모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우울증검사, 임신출산육아교실, 임산부건강교실, 모유수유임신육아프로그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3)
		예비부부/ 신혼부부 (2)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예비신혼부부건강검진

#### 4) 주거

- 주거지원 정책은 총 8개에 불과하며 전라북도 자체사업이 없는 가운데 시군차원에서의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지원 대출이자사업, 주거수당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전세가격의 상승,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과 조건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

- 국비지원의 청년층 행복주택 등의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자체 사업이 부재한 상황임.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부담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타 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투입해 청년층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시군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이 일부 추진 중에 있으나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가 요구됨

〈표 3-12〉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주거 시책

유형	주체	정책대상	해당시책
주거 (8)	시군자체 (8)	다자녀 가정(1)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감면
		예비/신혼 부부(3)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청년및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일정연령 이상(3)	청년주택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신규) 행복주택임대보증금지원사업(신규) 청년주택수당지원
		기타(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 5) 교육

- 교육지원 사업은 총 31개로 이 가운데 2021년 시행계획 중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2개이며 기존 사업의 사업량 및 예산 확대를 추진함. 전북이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은 12개이고 시군 자체추진은 19개임
- 교육지원 사업은 취·창업지원교육, 저출산 관련교육, 사교육비 경감 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취·창업지원교육은 주로 청년층 대상의 창업지원, 기술교육지원, 취업과 연계된 청년지원 창업 및 기술교육지원, 직업역량강화 교육 등이 주된 사업임. 이외에 대학생 직무인턴 및 공공기관대학생잡멘토링 사업 등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어 긍정적임. 단 사업량이 적고 공공기관만이 대상이어서 사업량 확대와 민간기업, 특히 우수 중소·중견기업 확대가 요구됨
- 산모대상의 임신부교육, 출산준비교실,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등의 인구교육이 추

진되고 있음. 이 가운데 인구교육은 전라북도는 인구교육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대상의 인구교육을 시군은 초·중·고 대상의 교육으로 교육대상이 이분화 되어 있으나 대상과 교육내용, 전문 강사양성 등의 체계적인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라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필요

- 사교육비 부담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와 더불어 출산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임. 현재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지원 사업이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다자녀 기준이 셋째아부터 적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다자녀의 지원을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전환 하고 교육취약계층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저소득 가정까지도 포함하는 교육비 부담경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함

〈표 3-13〉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교육 시책

유형	주체	정책대상	해당시책
교육 (31)	전북자체 (12)	일정연령 이상(5)	특성화고명장육성사업, 맞춤형기술인력교육지원사업, KT기업맞춤형전문인력양성, 대학산학협력, 지역특성화전문인력양성
		구직자/창업 지원자 (6)	대학생직무인턴, 공공기관대학생잡멘토링, 창업리턴패키지, 창업꿈나무사업화지원, 시군청년혁신기예비창업자지원, 지식서비스기반창업교육
		기타(1)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교육지원
	시군자체 (19)	일반(11)	스포츠와함께하는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지원, 해피맘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운영, 전북대학교남원캠퍼스설립및운영(신규), 지역인재육성, 고등학교학자금지원, 평생학습관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인구교육(2), 대학생과함께하는군산시탐방투어, 부안군인구정책지원사업홍보지제작
		일정연령 이상(2)	복스타트사업, 청년창업아카데미(신규)
		여성(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운영,
		기타(4)	교육복지프로그램운영, 교육단계별맞춤형교육지원사업, 직업역량강화,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
	다자녀 가정(1)	사교육부담경감(다자녀셋째아고등학교학자금지원)	

## 6) 안전

- 안전지원 사업은 총 5개로 이 가운데 2021년 시행계획 중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1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기존 사업의 사업량 및 예산 확대를 추진함. 전북

이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은 2개이고 시군 자체추진은 3개임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여성안전 지역 연대운영 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삶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러한 사업들을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인 '성 평등'과 '삶의 질'과 연계 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는 있으나 출산을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보기는 힘들
-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 환경, 아동의 인권, 여성 및 소외계층의 인권과 생활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이 추가적으로 개발, 확대되어야 함

〈표 3-14〉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안전 시책

유형	주체	정책대상	해당시책
안전 (5)	전북자체 (2)	기타(2)	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신규)
	시군자체 (3)	영유아(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지원
		청년(1)	자생단체회원 찾아가는 인구교육

## 7) 기반시스템

○ 기반시스템 사업은 총 52개로 양육 및 돌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임. 2021년 시행계획 중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5개이며 모두 지자체 주도 사업임. 전북이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은 8개이고 시군 자체추진은 44개이며 일·생활균형, 저출산 인식개선과 홍보 등의 사업으로 기존의 사업량 및 예산 확대 사업이 대부분임

- 전북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시스템은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식개선, 제도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다문화가정지원,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를 위한 이행기 지원에 관한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음.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활용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지원이 확대 될 필요 있음. 결혼과 가족구성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조성 관련 사업이 미흡함. 예를 들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자산형성통장, 익산형근로청년수당과 같이 청년의 경제적 자립·결혼·출산 등의 생애과정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확충이 요구됨

- 시군 자체적으로는 인구정책 및 저출산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들이 다수 추진 중에 있음. 이외에 시군에서는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안정된 삶의 여건을 조성하고 인생설계를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 자산형성에 관련된 지원 사업은 오랜 기간 취학이나 구직 준비로 인한 청년층의 누적 빈곤에 해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경제적 자립을 통한 결혼과 출산 이행을 돕는 긍정적 사업에 해당하므로 시군단위만이 아닌 전북 전역으로 확대될 필요 있음

〈표 3-15〉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기반시스템 시책

유형	주체	정책대상	해당시책
기반시스템(52)	전북 자체(8)	일반(4)	유연근무제활성화, 일·가정양립을위한가정의날 운영, 청년네트워크공간청년마루조성, 전북청년허브센터운영
		다자녀 가정(1)	다자녀공무원실적가점부여
		다문화(2)	다문화(글로벌)마을학당운영, 다문화청소년진로지원
		기타(1)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시군자체(44)	일반(31)	유연근무제(2), 가족의날(2), 가족친화기업문화 확산(1), 파트타임제운영(1), 다양한근무형태활성화(1), 다자녀가정복지포인트운영, 직장어린이집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년감도서관운영(2), 임신부불편신고센터, 공무원시험준비반운영, 장학기금조성및운영(2), 청년창업지원드림카구입지원(신규), 청년(예비)창업자인프라구축지원(신규), 인식개선을 위한교육및홍보강화, 인구정책원탁토론회, 인구정책참여단구성 및 운영, 저출산대응시민아이디어 공모(2), 인구정책홍보물제작배포(4), 인구정책핵심과제실무토론회 개최, 청년정책위원회및협의체운영, 저출산극복실무협의회운영, 저출산극복 국민인식개선기관단체협약
		기타(8)	남성의육아휴직출산후가활성화, 청소년범죄예방, 청년자산형성통장(신규), 익산형근로청년수당(신규), 청년지원센터운영,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다문화가족국내문화체험
		다자녀 가정(1)	다자녀직원복지포인트확대
		기준소득 이하(2)	출산가정건강관리사지원, 무주청년키움두배통장지원사업(신규)
		예비/신혼 부부(2)	결혼축하금지원(3)

8) 기타

- 기타 사업은 총 37개로 2021년 시행계획 중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음. 전 북이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은 5개이고 시군 자체추진은 32개이며 청년창업지원 사업, 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한 일자리 및 교육사업, 출생축하 지원사업, 인구정책 홍보사업, 결혼축하금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사업 등 대부분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보기에는 미흡함

〈표 3-16〉 2021 전라북도 저출산 시행계획 기타 시책

유형	주체	정책대상	해당시책
기타(37)	전북 자체(5)	기타(3)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찾아가는도민인구교육, 도민인구인식개선홍보
		기준소득 이하(1)	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금
		구직자/창업 지원자(1)	창업자사후관리지원
	시군자체 (32)	일반(14)	아빠랑행복캠프(2), 모든출생아종량제봉투지원, 아기주민등록증발급(2),출생축하카드발송, 정읍시장남감대여점운영(2),모자보건사업, 미혼남녀만남행사, 가족사랑사진공모전, 시민맞춤형인구정책홍보강화, 인구누리기아이디어제안공모사업, 순창군아이디어제안공모운영
		기타(2)	신생아탄생기념사업, 세대공감눈높이인구교육,
		다자녀 가정(2)	다둥이가족행복축제, 임신부다자녀혈인가맹점운영,
		기준소득 이하(1)	청년심포프로젝트,
		예비/신혼부부(3)	결혼축하금지원(3)
		구직자/창업 지원자 (3)	전주형창업기반조성,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더하기지원사업,
		다문화 가정(7)	결혼이민자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 다문화가정국적취득수수료지원(2), 국적취득자정착지원, 다문화자녀인성정체성교육및스피치아카데미, 다문화가족희망찾기지원정책, 결혼이민자한국어능력향상마일리지제도

####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3차 기본계획의 연장과 답습)** 전북의 2021년 저출산 시행계획은 기존의 제3차 저출산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주택가격, 성차별과 돌봄 공백에 대한 변화와 선제적 대응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은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문제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대안은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전북도 동일한 상황
  -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방향을 세웠으나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층이 직면한 결혼과 출산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은 미흡
  -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으로 인한 청년들의 지역이탈을 최소화 하여 지역에서 일하고 결혼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취·창업과 주거지원이 확대 강화되어야 함에도 2021년 시행계획 중 청년일자리 신규정책은 2개(전라북도1, 시군1)에 불과하고 주거지원은 전북 자체사업이 없는 가운데 시군 6개 정책에 그침
  
- **(도 자체사업비 부족)**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공통사업을 제외하고 전라북도와 시군이 자체적 추진하는 사업 중 도 자체사업 건수와 예산 비중이 매우 낮으며 특히 임신출산 지원 사업의 예산 비중은 가장 저조하여 대응마련 시급
  - 국비를 제외한 2021년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중 광역사업은 전체 264건 중 47건에 불과하여 17.8%를 차지하였으며 시군사업은 217건으로 전체 전라북도의 자체사업 중 82.2%를 차지함
  - 2021년 저출산 사업예산 총 4,516억 중 순 도비사업 예산은 1,058억으로 23.4%에 불과함. 이 가운데 임신·출산관련 예산은 149억(14%)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생애주기별로는 육아관련 사업이 83.4%이고 가임기와 출산 전후 지원 사업은 15.9%로 극히 저조함(전라북도 내부자료, 2021.8)
  -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임신부의 안심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전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단위 사업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청년층 자립지원 강화)** 청년이 자립·결혼·출산 등의 중요한 생의 이행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생활지원 등의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전북의 신규과제 발굴 등의 대응은 미흡함
  -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의 삶의 질 제고에 관한 그간의 정책은 청년 삶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협의의 지원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존재함(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청년의 실업증가와 취업준비 장기화로 인한 첫 직장의 입직과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이로 인한 출산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의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삶의 여건 개선, 자립도모를 위한 자산형성(청년내일채움공제공제, 청년저축계좌)등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나 전북은 시군 정책(근로청년수당지원, 청년자산 형성 통장 지원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은 부재하여 대응마련 필요
  
- **(임신·출산의료비 확대)** 고연령 산모와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임신·출산 양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안심체계 구축과 다양한 가정의 임신부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확대 필요
  -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고위험 산모의 증가, 난임, 다태아 출산 등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임신·출산 안심체계 구축 필요.
  - 특히 전북은 인구감소에 따른 임신출산 인프라 감소 현상이 맞물리면서 분만취약 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지역 간의 서비스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이 요구됨(21년 전북의 저출산 자체 사업예산 총1,058억 원 가운데 임신·출산 관련 예산은 149억(14%)에 불과)
  -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이 대부분으로 소득기준과 난임 특성에 따른 횟수 제한 등이 있음.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혜택 중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특히 전북은 남성 불임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고 난임으로 인한 부부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국가예산 사업) 설립 추진 필요
  
- **(틈새돌봄 수요 대응)**전북의 양육과 돌봄지원 사업은 공적 영역의 ‘보육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돌봄수요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코로나19로 인한 맞벌이의 육아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틈새돌봄과 초등 돌봄을 위해서는 아동의 놀이와 쉼 등을 지원하는 정책 확대가 필요함

- 공적 아동 돌봄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백은 지속적으로 발생. 공적 아동돌봄 정책 혜택을 지원 받는 아동은 전체아동의 약 14%에 불과함
- 인구감소 등으로 돌봄인프라가 취약한 소도시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마을단위의 민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해 맞벌이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이 육아공백을 경험함
- 전북의 양육과 돌봄 사업은 보육시설과 다자녀 대상의 사업 한계로 모든 부모의 양육부담과 여성 독박육아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성 평등한 육아와 돌봄을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사회 돌봄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와 틈새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필요함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대응)**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변화의 진행으로 출산 전후휴가, (남성)육아휴직 등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전북은 점진적 변화를 보이고 있어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함

- 전북의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은 '양육과 돌봄' 사업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육아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유연근무 활용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제도는 고용보험 가입과 임금근로자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책사각지대가 존재. 특히 전북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2.7%를 차지하고 있어 일·가정양립제도 구현을 위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 청년층은 일자리 선택에 있어 워라밸을 최우선 조건으로 추구하고 청년여성의 경우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이 용이한 안정된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전북 청년층의 인구유출은 취업으로 인한 사유가 높음을 고려할 때, 일·가정양립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함

○ **(정책균형과 연계, 협업체계 부족)** 저출산 원인은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 다차원에 걸쳐 나타나므로 일자리-결혼-주거-돌

봄·일·생활균형 관련 정책이 유기적 연관성을 가져야 하나 정책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협업체계도 미흡함

- 저출산 청년층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거·교육 등의 정책 간에 연계성을 갖추어야 하나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청년층의 일자리 정책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주거지원 정책은 미흡하고 도 자체 사업이 부재하는 등 정책간의 균형과 통합적 관점이 부족함
-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이에 대한 대응도 지역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미흡하였음
-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인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므로 민·관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함



# 4

장

##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 수요분석

Jeonbuk Institute

- 
1.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평가 및 수요 : 전문가 의견조사
  2. 저출산 인식 및 정책욕구 : 심층면접조사
  3.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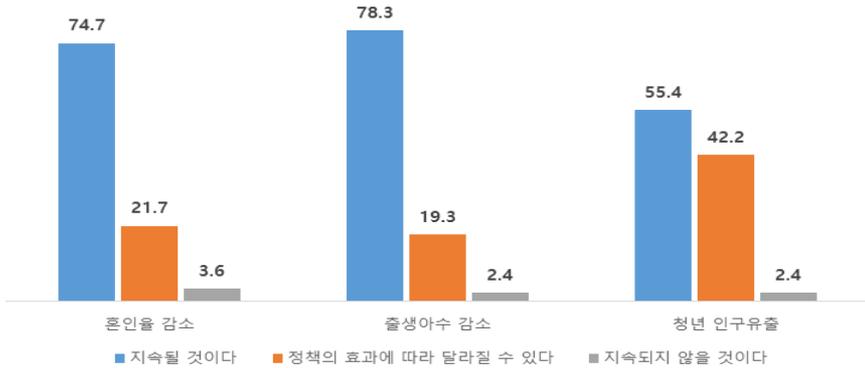


## 제 4 장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 수요분석

### 1.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평가 및 수요 : 전문가 의견조사

-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하고자 저출산 관련 공무원과 교수 및 연구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총 응답자는 83명이었으며 공무원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23명, 교수 및 연구자 12명이 조사에 참여함. 조사기간은 6월 29일~7월 15일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함
- 향후 전라북도의 혼인율, 출생아수, 청년인구 유출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감소와 유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청년인구 유출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효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혼인율에 대해서는 혼인율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74.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의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률이 21.7%였고, 혼인율 감소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3.6%에 불과함
  - 출생아수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출생아수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78.3%로 나타났고, 정책의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률은 19.3%, 출생아수 감소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2.4%로 나타남
  - 반면 청년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55.4%로, 정책의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률이 42.2%로 높게 나타남. 다만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2.4%에 불과하여 청년인구를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단위 : %)



〈그림 4-1〉 전라북도 향후 혼인율, 출생아수, 청년 인구유출 예상

○ 전라북도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충분하다는 의견보다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특히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정책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절반이 넘는 59.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59.5%) > ‘결혼 장려·만남 프로그램’(51.3%) >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강화’(41.8%) > ‘결혼축하금 지원’(35.9%)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강화’(34.2%) 순으로 나타남. ‘결혼 축하금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강화’ 정책은 충분하다는 응답률이 각각 28.2%, 22.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충분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두 정책 모두 충분하다는 응답보다는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표 4-1〉 전라북도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 평가

(단위 : %)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
결혼 장려·만남 프로그램	15.4	35.9	41.0	6.4	1.3	100.0
결혼축하금 지원	10.3	25.6	35.9	19.2	9.0	100.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강화	7.6	26.6	43.0	17.7	5.1	100.0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강화	11.4	30.4	45.6	8.9	3.8	100.0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16.5	43.0	30.4	7.6	2.5	100.0

○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각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의 정

책에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결혼 장려·만남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과반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정책은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75.9%),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강화'(75.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강화'(74.7%) 등이었으며 '결혼축하금 지급' 정책도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7.7%로 과반으로 나타남. 반면 '결혼 장려·만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38.0%에 불과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도 31.7%로 높게 나타나 설문 참여한 전문가 응답자들은 다른 정책들보다 '결혼 장려·만남 프로그램' 정책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표 4-2〉 전라북도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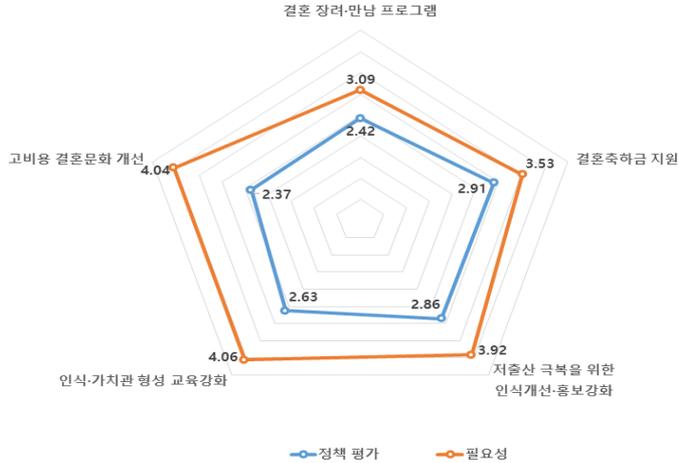
(단위 : %)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결혼 장려·만남 프로그램	11.4	20.3	30.4	24.1	13.9	100.0
결혼축하금 지원	3.8	11.5	26.9	43.6	14.1	100.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강화	0.0	5.1	20.3	51.9	22.8	100.0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강화	0.0	3.8	20.5	41.0	34.6	100.0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0.0	3.8	20.3	44.3	31.6	100.0

○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의 정책평가와 필요성의 평점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정책이 필요성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은 필요성 평점이 4.04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책 평가는 2.37점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정책 평가와 필요성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강화'도 정책 평가는 2.63점에 불과한 반면, 필요성은 4.06점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반면 '결혼장려·만남 프로그램'과 '결혼축하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나 현재 정책의 충분도와 필요성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단위 : 점)



〈그림 4-2〉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전라북도의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모든 정책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남. 특히 ‘학생·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현재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학생·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 각각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취·창업 지원 및 기반조성’ 57.0%, ‘산업수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및 공급’ 55.7%,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50.7% 순으로 나타남

〈표 4-3〉 전라북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정책 평가

(단위 : %)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
학생·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	12.7	50.6	30.4	6.3	0.0	100.0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13.9	49.4	31.6	2.5	2.5	100.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8.9	41.8	39.2	8.9	1.3	100.0
청년 취·창업 지원 및 기반조성	15.2	41.8	32.9	8.9	1.3	100.0
산업수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및 공급	16.5	39.2	38.0	3.8	2.5	100.0

○ 전문가들은 전라북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정책은 ‘청년 취·창업 지원 및 기반조성’이었음

- 가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정책은 ‘청년 취·창업 지원 및 기반조성’으로 응답자의 97.5%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94.9%로 뒤를 이었음. ‘산업수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및 공급’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3.7%가 동의하였으며, ‘학생·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는 92.4%,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8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라북도의 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 정책은 모든 정책에서 그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전라북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정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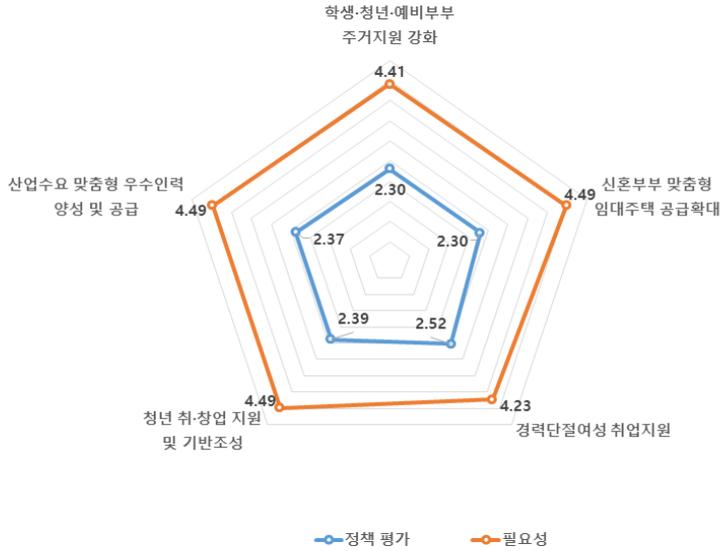
(단위 : %)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학생·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	0.0	1.3	6.3	43.0	49.4	100.0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0.0	0.0	5.1	40.5	54.4	100.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0.0	0.0	13.9	49.4	36.7	100.0
청년 취·창업 지원 및 기반조성	0.0	1.3	1.3	44.3	53.2	100.0
산업수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및 공급	0.0	0.0	6.3	38.0	55.7	100.0

○ 전라북도의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의 평점을 비교해 본 결과, 전라북도의 일자리·주거 관련 정책은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되나 현재 정책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음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학생·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 같은 주거 정책의 현재 평가와 필요성에 대한 간극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의 간극이 가장 적었으나 이 역시 1.71점의 차이가 나타남

(단위 : 점)



〈그림 4-3〉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전라북도 보육·돌봄지원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정책은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 돌봄여건 확충’이었음
- 전라북도의 보육·돌봄지원 강화 정책으로 가장 부족한 것은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 돌봄여건 확충’으로 각각 42.5%의 응답자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음

〈표 4-5〉 전라북도 보육·돌봄지원 강화 정책 평가

(단위 : %)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8.8	25.0	53.8	11.3	1.3	100.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3	18.8	58.8	12.5	3.8	100.0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12.5	30.0	46.3	7.5	3.8	100.0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 돌봄여건 확충	7.5	35.0	45.0	11.3	1.3	100.0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10.0	23.8	42.5	21.3	2.5	100.0

○ 보육·돌봄지원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과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각각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86.1%,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 돌봄여건 확충' 84.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이 77.2%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임

〈표 4-6〉 전라북도 보육·돌봄지원 강화 정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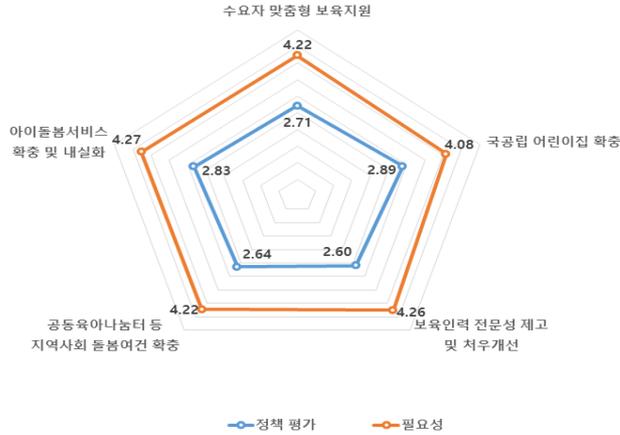
(단위 : %)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0.0	0.0	12.8	52.6	34.6	100.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0.0	5.1	17.7	41.8	35.4	100.0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0.0	0.0	12.8	48.7	38.5	100.0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 돌봄여건 확충	0.0	1.3	13.9	46.8	38.0	100.0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0.0	1.3	12.7	44.3	41.8	100.0

○ 전라북도의 보육·돌봄지원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에 대한 평점을 살펴본 결과,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이 정책평가 2.60점으로 가장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필요성은 4.26점으로 높게 나타나 현재 정책의 평가와 필요성 간의 간극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모든 보육·돌봄지원 강화 관련 정책평가는 5점 만점 중 2점 중후반대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 돌봄여건 확충'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이 5점 만점 중 4점을 넘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정책의 필요성이 4.0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가 4.27점,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4.26점,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 돌봄여건 확충'이 각각 4.22점으로 나타남

(단위 : 점)



〈그림 4-4〉 보육·돌봄지원 강화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른 영역의 정책평가 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남. 충분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정책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전체 응답자의 34.6%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반면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는 10.2%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38.0%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관련 정책 중 가장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임

- 각 정책 중 현재 수준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들은 ‘출산장려금 지원’(34.6%) >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34.2%)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30.4%),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정착 및 지원 강화’(30.3%) 등이었으며 부족하다는 평가가 높은 정책들은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38.0%) >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여성(모성) 건강 증진 강화’ (각 35.0%) >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30.4%) 등으로 나타남

〈표 4-7〉 전라북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 평가

(단위 : %)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3.8	17.7	48.1	22.8	7.6	100.0
난임부부 지원	5.0	22.5	45.0	22.5	5.0	100.0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3.8	21.5	40.5	24.1	10.1	100.0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10.0	25.0	41.3	17.5	6.3	100.0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
여성(모성)건강 증진 강화	2.5	32.5	42.5	18.8	3.8	100.0
출산장려금 지원	3.8	19.2	42.3	28.2	6.4	100.0
출산용품 지원	1.3	17.9	53.8	19.2	7.7	100.0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	3.8	26.6	53.2	12.7	3.8	100.0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정착 및 지원 강화	0.0	20.3	49.4	27.8	2.5	100.0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3.8	34.2	51.9	8.9	1.3	100.0

○ 각 정책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출산용품 지원’ 과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응답자 대다수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정책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6.2%가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난임부부 지원’(89.8%) >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85.9%)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84.6%) >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84.4%)에 대한 필요성도 높은 응답률을 보임. 반면 ‘출산용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7.7%에 불과하여 과반 이상이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역시 응답률이 66.7%로 다른 정책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임

〈표 4-8〉 전라북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 필요성

(단위 : %)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0.0	0.0	15.4	51.3	33.3	100.0
난임부부 지원	0.0	0.0	10.1	46.8	43.0	100.0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0.0	1.3	12.8	41.0	44.9	100.0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0.0	0.0	3.8	35.4	60.8	100.0
여성(모성)건강 증진 강화	0.0	0.0	19.0	45.6	35.4	100.0
출산장려금 지원	1.3	2.6	29.5	42.3	24.4	100.0
출산용품 지원	1.3	0.0	41.0	37.2	20.5	100.0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	0.0	0.0	19.2	47.4	33.3	100.0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정착 및 지원 강화	0.0	3.8	19.2	50.0	26.9	100.0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0.0	0.0	15.6	54.5	29.9	100.0

○ 전라북도의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에 대한 현재 수준의 평가와 향후 필요성에 대해 비교해본 결과, 모든 정책평가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에 형성되어 있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은 대부분의 정책이 4점대를 넘어 정책의 필요성에 현재의 정책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용품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은 정책 평가가 5점 만점에 3.14점으로 현재의 정책이 보통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받았으며 필요성은 3.76점, 3.86점으로 나타나 정책평가와 필요성 간의 간극이 적게 나타남. 반면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정책의 경우 전문가들은 현재 정책의 수준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필요성은 5점 만점에 4.57점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정책평가와 필요성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단위 : 점)



<그림 4-5>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전라북도의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정책에 대한 평가는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시책 강화’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중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정책은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과반인 63.8%가 정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그 뒤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48.8%) >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45.1%) >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조성’(41.3%) >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시

책강화'(33.8%) 순으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경우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정책이 부족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4-9〉 전라북도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평가

(단위 : %)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시책강화	6.3	27.5	48.3	17.5	2.5	100.0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13.8	35.0	41.3	8.8	1.3	100.0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16.3	47.5	27.5	7.5	1.3	100.0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6.3	38.8	47.5	6.3	1.3	100.0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10.0	31.3	47.5	10.0	1.3	100.0

○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낮은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시책강화' 정책도 79.8%로 나타나 대부분의 정책에서 8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정책은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전체 응답자의 93.6%가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 뒤를 이어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92.4%) >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조성'(88.6%) >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83.6%) >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시책강화'(79.8%) 순으로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보임

〈표 4-10〉 전라북도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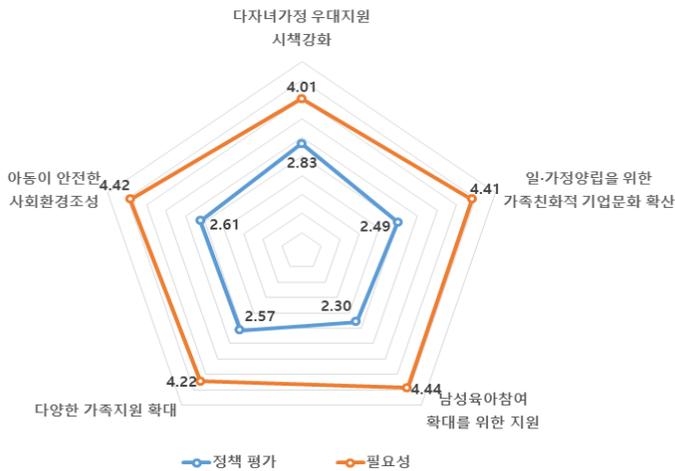
(단위 : %)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시책강화	0.0	2.5	17.7	55.7	24.1	100.0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0.0	0.0	7.6	44.3	48.1	100.0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0.0	0.0	6.4	43.6	50.0	100.0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0.0	0.0	16.5	45.6	38.0	100.0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0.0	1.3	10.1	34.2	54.4	100.0

○ 전라북도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정책에서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남. 특히 평가와 필요성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정책은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임

- 현재 정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는 평점이 5점 만점에 2점 초반에서 2점 후반 대로 나타나 대부분의 정책이 현재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으며 특히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은 평점이 2.30점에 불과하여 다른 정책보다도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각 정책들의 필요성은 4점 이상으로 모든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은 평점이 4.4점 이상으로 나타나 그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에 대한 간극이 큰 정책은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으로 전라북도의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은 매우 필요하나 현재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단위 : 점)



〈그림 4-6〉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출산친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시·군, 유관기관과의 정책연계 강화'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53.8%, '인구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55.0%로 나타남. 해

당 정책이 충분하다는 응답률은 두 정책 모두 7.6%에 불과함

〈표 4-11〉 전라북도 출산친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 평가

(단위 : %)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
시·군, 유관기관과의 정책연계 강화	12.5	41.3	38.8	6.3	1.3	100.0
인구정책 추진기반 강화	12.5	42.5	37.5	6.3	1.3	100.0

- 출산친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의 필요성은 ‘인구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 유관기관과의 정책연계 강화’가 82.1%, ‘출산장려기금 조성’이 66.4%로 뒤를 이음
  -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출산장려기금 조성’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출산친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들에 비해 그 필요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응답자의 11.8%는 해당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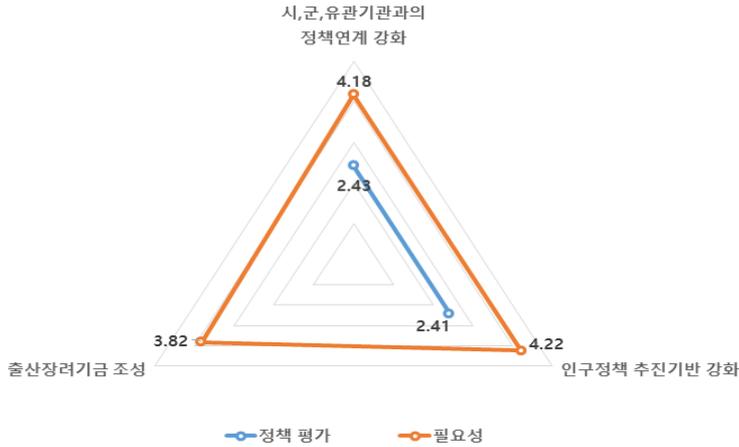
〈표 4-12〉 전라북도 출산친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 필요성

(단위 : %)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시·군, 유관기관과의 정책연계 강화	0.0	1.3	16.7	44.9	37.2	100.0
인구정책 추진기반 강화	0.0	1.3	15.4	43.6	39.7	100.0
출산장려기금 조성	3.9	7.9	19.7	37.5	28.9	100.0

- 전라북도의 출산친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에 대한 평점을 비교한 결과, 정책 평가와 필요성의 평점 차이가 1.5점 이상 나타남
  - ‘출산장려기금 조성’을 제외한 두 정책은 현재 정책평가에 대한 평점이 5점 만점에 2.4점대로 나타나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필요성은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출산장려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평점이 5점 만점에 3.82점으로 나타나 다른 정책보다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낮았음

(단위 : 점)



〈그림 4-7〉 출산친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관련 정책 평가 및 필요성

-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전라북도의 저출산 사업에 대한 효과는 공통사업과 자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률은 공통사업과 자체사업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가 있다는 응답률이 효과가 없다는 응답률보다는 높게 나타남
  - 공통사업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률이 36.1%, 효과가 없다는 응답률이 26.5%로 나타났으며 자체사업은 효과가 있다는 응답률이 35.4%, 효과가 없다는 응답률이 24.4%로 나타나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의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4-13〉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 효과 평가

(단위 : %)

	전혀 효과 없음	대체로 효과 없음	보통	다소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계
공통사업	1.2	25.3	37.3	31.3	4.8	100.0
자체사업	1.2	23.2	40.2	30.5	4.9	100.0

- 현재 저출산 시책의 수혜 대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소득기준의 제한이 없는 보편적인 저출산 시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소득기준 제한 없는 보편적 저출산 시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87.2%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동의하였으며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률은 6.0%,

보편적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응답률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저소득층 대상의 저출산 시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6.3%에 불과하였으며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8.7%, 저소득층 대상 저출산 시책 확대에 반대하는 응답률은 35.0%로 나타남

〈표 4-14〉 현재수준 대비 전라북도 저출산 시책의 대상

(단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유지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소득기준 제한 없는 보편적 저출산 시책을 확대해야 한다	2.4	2.4	6.0	36.6	50.6	100.0
저소득층 대상 저출산 시책을 확대해야 한다	12.5	22.5	28.7	16.3	20.0	100.0

- 현재 수준 대비 전라북도 저출산 시책 목표를 강화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시책에서 축소해야한다는 응답률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 수준 대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시책은 ‘주거지원’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인 96.4%가 현재보다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함. 또한 ‘의료비 절감’(92.8%) > ‘일·가정양립 지원’(92.6%) > ‘임산부 배려’(87.9%) > ‘자녀교육 지원’(84.3%) > ‘생활비 절감’(81.9%) > ‘소득보전’(81.7%) > ‘보육서비스 이용지원’(80.5%) 순으로 현재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출산 축하선물’(65.9%)과 ‘출산육아용품 지원’(61.4%)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캠페인’(41.0%)과 ‘결혼기회 제공’(40.2%)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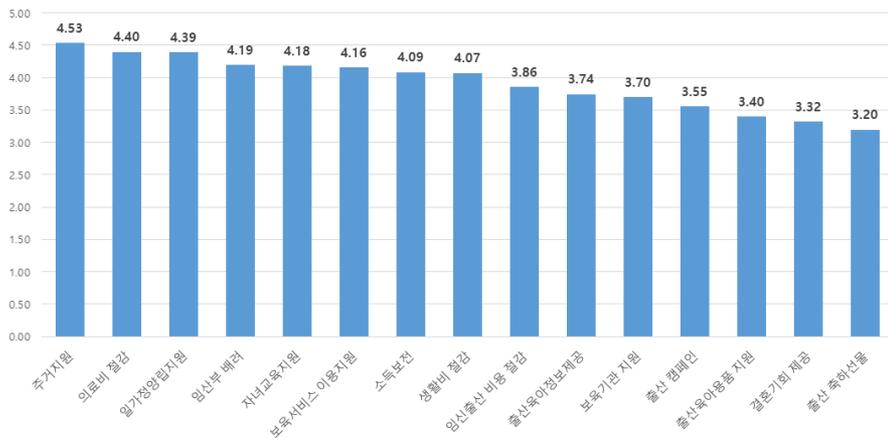
〈표 4-15〉 현재수준 대비 전라북도 저출산 시책 목표

(단위 : %)

	매우 축소	축소	유지	강화	매우 강화	계
소득보전 (출산,육아가정 대상)	0.0	1.2	17.1	53.7	28.0	100.0
생활비 절감 (다자녀 가정 대상)	0.0	1.2	16.9	55.4	26.5	100.0
자녀교육 지원	0.0	0.0	15.7	50.6	33.7	100.0
일·가정양립 지원	0.0	0.0	7.3	46.3	46.3	100.0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0.0	0.0	19.5	45.1	35.4	100.0
보육기관 지원	2.4	1.2	39.0	39.0	18.3	100.0

	매우 축소	축소	유지	강화	매우 강화	계
출산육아용품 지원	0.0	3.6	61.4	26.5	8.4	100.0
출산 축하선물	1.2	8.5	65.9	18.3	6.1	100.0
임신출산 비용 절감	0.0	1.2	32.5	45.8	20.5	100.0
출산육아 정보제공	1.2	0.0	39.0	42.7	17.1	100.0
임산부 배려	1.2	0.0	10.8	54.2	33.7	100.0
출산캠페인	2.4	4.8	41.0	38.6	13.3	100.0
결혼기회 제공	7.3	9.8	40.2	29.3	13.4	100.0
주거지원 (신혼부부, 다자녀 대상)	0.0	0.0	3.6	39.8	56.6	100.0
의료비 절감 (출산육아 가정대상)	0.0	0.0	7.2	45.8	47.0	100.0

(단위 : 점)



주 : 1점 : 매우 축소 ~ 5점 매우 강화의 평점임

〈그림 4-8〉 현재수준 대비 전라북도 저출산 시책 목표

- 전라북도의 저출산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재화/서비스를 시장에서 소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금지원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1.2%로 뒤를 이었으며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5.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16〉 현재 수준 대비 전라북도 저출산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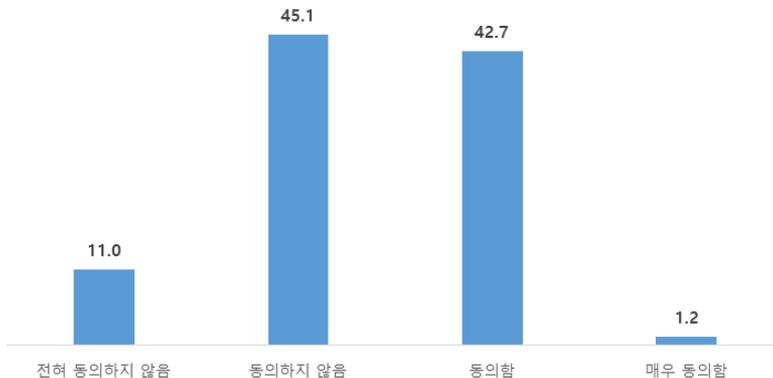
(단위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유지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현금지원 방식의 저출산 시책을 확대해야 한다	7.3	8.5	32.9	31.7	19.5	100.0
재화/서비스를 시장에서 소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저출산 시책을 확대해야 한다	1.2	3.7	26.8	40.2	28.0	100.0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저출산 시책을 확대해야 한다	8.6	18.5	27.2	34.6	11.1	100.0

○ 전라북도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동의하지 않았음

- 전라북도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은 43.9%,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6.1%로 나타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라북도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가 더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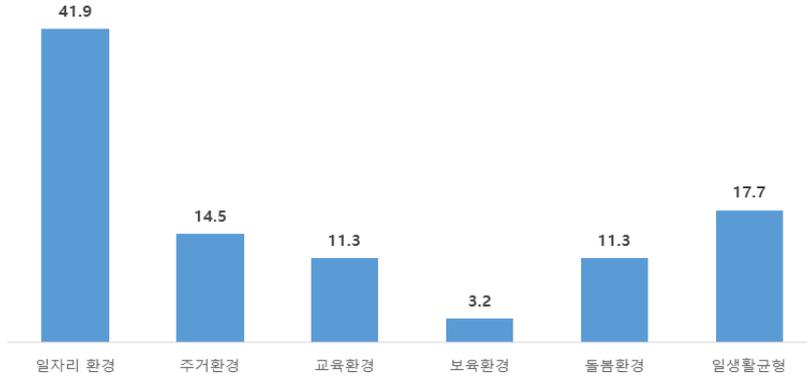
(단위 : %)



〈그림 4-9〉 전라북도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

○ 전라북도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일자리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생활균형’이 17.7%, ‘주거환경’이 14.5%, ‘교육환경’과 ‘돌봄환경’이 각각 11.3%로 나타났으며 보육환경은 ‘3.2%’로 가장 응답률이 적었음

(단위 : %)



〈그림 4-10〉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중단기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정책 영역 1순위와 2순위를 조사한 후, 다중응답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해야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24.8%로 가장 많았으며 ‘청년 고용지원 정책’ 19.3%,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일·가정양립 지원’ 17.6%, ‘청년 주거지원 정책’과 ‘보육시설 확충, 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이 각각 13.9%로 나타남

〈표 4-17〉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단기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정책 영역

(단위 : %)

	%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24.8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일·가정양립 지원	17.6
보육시설 확충, 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13.9
청년 고용지원 정책	19.4
청년 주거지원 정책	13.9
직장, 가족 내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	3.0
임신·출산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	1.2
인구,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정책	5.5
기타	0.6

주 :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를 조사한 후, 다중응답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저출산 관련 지원(수당 등) 강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전라북도의 개선사항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각 항목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출산 관련 지원(수당 등) 강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저출산 시책 관련 예산 증대’ 13.9%,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과 ‘중앙부처의 협력 강화’가 각각 10.8%, ‘자치단체장의 관심 제고’가 9.6%로 뒤를 이었음

〈표 4-18〉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전라북도 개선사항

(단위 : %)

	%
자치단체장의 관심 제고	9.6
담당 공무원의 저출산 시책 관련 전문성 향상	4.8
저출산 시책 관련 예산 증대	13.9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저출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 강화	5.4
저출산 시책 전담조직(부서) 신설 필요	9.0
저출산 시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조직(부서) 신설 필요	9.0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10.8
중앙부처(상급기관)의 협력 강화	10.8
저출산 시책 추진의 일관성 유지	7.8
저출산 관련 지원(수당 등) 강화	15.1
저출산 시책 관련 각종 조례 제·개정	3.0
기타	0.5

주 :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

## 2. 저출산 인식 및 정책욕구 : 심층면접조사

### 가.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및 방법

-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결혼 및 저출산 관련 실태에 관한 구조화된 양적분석 및 통계로 나타나는 이면에 내재해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양육기에 있는 기혼자들의 인식 및 태도, 정책욕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심층인터뷰는 2021년 6월 29일에서 7월 12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함.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크게 3그룹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즉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른 당면과제나 정책욕구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층, 신혼부부, 자녀 양육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총 18명임
- 심층인터뷰 내용은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형성, 일·가정양립 등에 대한 인식, 삶의 질과 가치기준에 대한 의견, 성평등 및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지역사회 출산 및 양육 환경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전북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요구, 결혼·출산·양육관련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심층면접은 사전 전화통화로 연구취지 및 인터뷰 내용 등의 안내를 실시하고 인터뷰 약속일과 장소를 정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단 인터뷰가 불가능 하여 상황에 따라 1:1, 1:2~3 명 등으로 인터뷰를 진행 함

#### 2)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심층면접에 참여한 총 18명 가운데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청년층 7명(A-1부터 A-8에 해당), 신혼부부(현재 임신 중 포함)는 4명(B-1부터 B-4에 해당), 결혼 후 자녀 출산과 육아기에 해당하는 6명(C-1부터 C-6에 해당)임

○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9〉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나이	성별	취업상태/고용형태	학력	주택소유형태	자녀
A-1	28	여	취업/비정규직	고졸	전세	
A-2	28	여	취업/정규직	대졸	부모님과 동거	
A-3	30	여	취업/정규직	대졸	전세	
A-4	34	남	취업/정규직	대학원졸	전세	
A-5	27	여	취업/비정규직	대졸	부모님과 동거	
A-6	31	남	비취업	대졸	부모님과 동거	
A-7	31	남	취업/정규직	대졸	전세	
A-8	32	남	취업/정규직	대졸	전세	
B-1	28	여	비취업	대졸	임대주택	임신 중
B-2	31	여	취업/무기계약직	대졸	전세	임신 중(다태아)
B-3	33	남	취업/정규직	대학원졸	자가	
B-4	27	남	취업/정규직	고졸	전세	
C-1	38	여	취업/무기계약직	대학원졸	자가	1명(3살)
C-2	36	여	취업/정규직	대학원졸	자가	1명(4살, 1살)
C-3	29	여	비취업	고졸	임대주택	자녀없음
C-4	34	여	자영업	대졸	자가	2명(7살, 5살)
C-5	36	여	비취업	대졸	자가	2명(8살, 5살)
C-6	36	여	취업/정규직	대졸	자가	2명(7살, 4살)

## 나. 조사결과

### 1) 노동과 출산

#### ■ 청년집단

- 인터뷰 참여자들의 공통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일’이 삶에서 차지하는 가치와 비중이 있어 우선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임
  -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중 결혼은 선택사항이지만 일은 필수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심지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면, 결혼은 지연하거나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함
  - 연구참여자 A-1의 경우는, 주변 친구 가운데 몇 년째 취준생(취업준비생)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등 청년에게 있어 취업은 연애와 결혼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 (사례 A-1)
- ‘일’은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소득활동으로 얻는 경제적 자유를 결혼이라는 ‘구속’과 ‘책임’으로 대치하고 싶지 않으며 이러한 견해는 청년여성에게서 더 나타남
  - 청년A-3의 사례는 초등교사 초기시절에는 적은 급여를 받았지만, 경력 5년째부터는 혼자 생활하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어 굳이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함 (사례 A-3)
  - 청년여성은 오히려 결혼을 하게 되면 주택 구입부터 자녀양육비까지 힘들게 벌어야 하므로 이제까지 독신으로 자유롭게 누렸던 기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비용을 줄여야 하므로 ‘결혼 = 삶의 질 하락’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음
- 청년여성은 결혼 이후 일·가정양립 가능한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어 지역 노동 환경과 미스매치 현상이 청년남성보다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년 여성의 결혼을 지연, 유보,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과 맞닿아 있음
  - 선행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족중심의 생애과정에서 노동중심의 생애과정을 수용하는 청년여성의 지향은 본 연구참여자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특히 청년여성의 경우, 취업의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직장문화였음(사례 A-1, A-2). 이는 결혼 이후에도 출산이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안정이나 불이익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의식이 강했고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일자리로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 그러나 전북의 취업환경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매우 한정적이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2.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일자리로의 취업은 제한적임
- 취업이 결혼과 연애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청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가정양립이 미흡하거나 취약한 전북의 노동환경은 가임기 여성인구에 해당하는 다수의 청년여성이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거나 결혼의 지연, 유보,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과 맞닿아 있어 전북의 저출산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 ■ 신혼부부

- ‘일 중심의 생애계획’은 신혼부부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식은 청년집단의 정체성이나 존재의식과는 달리 생활비와 주거비 등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개념이 강하게 반영됨
  -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비용이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생활비와 대출상환을 하려면 혼자만의 수입으로는 부족하며 맞벌이는 필수적인 상황으로 인식함 (사례 B-2, B-4)
  -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직장에서의 승진, 이직 등 더 많은 경력을 쌓고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으며, 자녀출산은 지금의 경제형편을 고려하여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 (사례 B-4)
- 여성참여자의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일 중심의 생애를 계획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결혼으로 인한 일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향후를 전망하고 있음
  - 여성참여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결혼을 한 후에도 일에 대한 계획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공통적으로 표현함. 자신의 일이나 직장에서의 경력추구와 결혼생활이 양립불가능 하다고 느끼지 않았음 (사례 B-2)
  - 결혼이후 자녀출산에 대한 압박이나 긴박감은 다소 있지만 그로 인한 자신의 일에 대한 영향이나 변화, 혹은 이직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은 개인으

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음

## ■ 기혼집단

- 기혼여성의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오래일하고 싶다는 욕구와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등이 공통된 경험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었음
  - 기혼여성은 자녀양육과 돌봄 등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여타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가급적 현재의 직장에서 오래 버티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음
  - 사례참여자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현재의 직장은 하향취업을 한 사례로 급여나 근무조건이 전 직장과 같지는 않지만 고용의 지속성만 보장된다면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음 (사례C-1, C-2)
  -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변수의 출현으로 인해 고용단절이나 휴직을 경험하는 주변 사례가 늘고 있어 자신도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사례C-1, C-6)
- 노동시장에서 모성에 대한 불이익,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로 인해 출산이나 추가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
  -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례자 C-1은 결혼 후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난임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인력이 소수인 시설에서 대체인력도 어려운 상황 등 자신의 임신 그 자체는 직장에 피해를 주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음
  - 이 과정에서 난임치료도 몹시 힘들었지만 주변의 시선과 직장분위기 등으로 심리적으로 더 힘든 과정을 경험하게 됨. 우울증이나 직장 적응 등의 문제로 아이를 갖는 과정이 힘들어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 같아 추가출산은 어렵다고 봄
  -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례자 C-3의 경우는 자신이 고졸이고 결혼을 한 기혼자여서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고 몇 번의 취업에 도전하였지만 기혼여성이어서 불리한 취업조건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회상함

## 2) 주거

### ■ 청년집단

- 청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정책은 주택마련 비용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소득기준은 너무 낮아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소수에 불과하여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정부의 LH행복주택 청약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도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나 이들에 관한 지원 정책은 부재한 상황임
  -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등은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소득기준이 사회초년생 연봉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기준에 부합하기도 어렵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은 오히려 전세를 얻을 목돈이 없는 게 현실임
- 장기화된 학교생활과 취업준비, 낮은 급여 등으로 부모의 도움이나 은행의 대출 없이는 주거마련은 꿈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정책은 다수의 청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청년들은 학자금대출 등의 부채뿐만 아니라 장기화 된 청년실업으로 취업준비와 생활자금 대출, 사회진출해도 낮은 임금 등으로 주택마련을 위한 '목돈'도 없는 형편임 (사례 A-3, B-2)
  - 목돈이 없는 빈곤한 청년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필요 없고,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정책의 혜택으로 보고자 하는 청년은 소득기준 제한을 넘어 정책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적은 급여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등의 문제 발생 (사례 A-7, A-8)
- 결혼준비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는 주거마련 비용이기 때문에 주거마련은 남녀가 같이 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여자는 혼수품을 남자는 집 마련이라는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을 수용하는 청년 남성도 있음
  -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매우 민감하였음. 어찌면 월급생활자의 자신은 평생 집을 마련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체념적인 생각도 있는 반면, 고비용의 주택마련은 남녀가 함께 반반씩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 일

반적이었음 (사례 A-4, A-7, A-8)

- 반면, 남자는 집 마련 여자는 혼수품 마련과 같은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하고 있거나 남녀가 비용을 같이 부담하기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함 (사례 B-4)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주거비 마련 자금원천은 대부분이 자기자금이 많았으며 부모로부터의 간접지원은 적은 액수에 불과하였고, 자가와 전세가구의 경우도 현재 부부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용 부담이 20%~30% 정도에 이르는 등 부담이 높은 편임
  -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액수는 전체 대출금액의 80% 정도를 자신들이 마련하였으며 부모로부터의 지원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비용 부담이 클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자녀출산이라는 생애주기의 이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 인터뷰 참여자들은 불안한 주거가격 때문에 주거마련이 출산보다 먼저 계획된 것으로 나타남(사례 B-3, B-4)
- 취업, 결혼, 출산 간의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현행의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정책이며 결혼 후 출산으로 연결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임
  - 신혼부부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같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호응도는 높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신이 혜택을 보기에 어렵다고 인식함 (사례 B-1, B-2)
  - 행복주택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 장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부모세대의 도움 없이 독립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신규아파트라 깔끔한 점도 신혼부부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주택이지만 기회가 자신들에게까지 오기는 쉽지 않아 로또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음 (사례 B-1, B-4)
  -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임대주택은 기준평형 수가 너무 작은 소규모 주택이거나, 지가가 낮은 외곽이나 특정지역에 짓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는 주변의 부정적 시선 등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기 때문임 (사례 B-2)

- 신혼부부 대부분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안정성을 가질 때 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이상림·이지혜, 2017)는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인해 주거점유 형태적 측면에서 월세나 임대 아파트이거나 주거규모도 대부분 소규모 등에 해당함. 심층인터뷰 참여한 신혼부부들은 이와 같은 주거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녀출산을 계획하기는 쉽지 않으며 출산을 유보하거나 지연하는 게 나올 수 있다고 봄 (사례B-1, B-4)
  - 즉 신혼초기의 주거마련을 위한 부채와 전세가격 상승, 자가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첫째아 출산과 추가출산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기혼집단

- 기혼집단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보다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주거정책에 대한 불만과 중요성을 강조함. 자녀양육 세대에게 주거는 단순히 사는 집이 아닌 자녀양육과 관련된 주변의 비교와 평가, 그로인한 상실감과 박탈감 등 복잡한 감정을 반영하고 있었음
  - LH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아이들 사이에서 저렴한 주택에 사는 스티그마를 보이고 있어 부모들은 자녀들이 비교당하거나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음. 차라리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끼리 모여 있는 게 비교의 비극을 불러오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피력함 (사례 B-1, C-3)
  -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학군과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주거공간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비례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을 때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도 봄 (사례 C-5)
- 주택구입은 1회로 끝나지 않고 자녀의 출산, 부부의 소득이나 저축의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더 큰 규모의 주택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녀의 출산과 추가출산 결정은 주거마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가에 거주하는 것이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에 의한 것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출산이나 추가출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봄
  -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충분한 자산이 축적 되지 않을 경우, 자녀출산을 연기하거나

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3) 자녀양육과 돌봄

#### ■ 청년집단

- 청년층의 자녀출산과 양육, 돌봄 등에 대한 가치관이나 견해는 일견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 등 이분화 되어있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청년집단은 출산과 자녀양육이 자신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물질적인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담과 희생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강함
  - 청년층의 자녀출산에 대한 의견은 연애나 결혼보다 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음. 이러한 견해는 청년남성보다 청년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녀출산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함 (사례 A-1, A-2)
  - 특히 자녀 돌봄은 과거에 비해 남성들의 육아참여가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여성에게 독박육아가 전담되고 있으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직장선배, 가족 중 출가한 형제자매의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 (사례 A-3, A-6)
  - 자녀출산과 양육, 돌봄 등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들의 어머니가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자녀양육을 위해 전업주부로 살아 온 희생적인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등 주변 지인들의 양육 경험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사례 A-2)
-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상을 가진 청년집단 역시도 육아휴직이나 모성보호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회사에 대한 불안이 크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돌봄 문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와 교육비, 자녀 돌봄을 의지할 수 있는 가족(부모)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불안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변 친구들 가운데는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는데 대한 로망이 있음. 그러나 자녀를 맡길 곳이 없고, 부모님은 연로하신데 아이까지 맡기는 것은 자식 된 도리가 아니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가운데는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 가족돌봄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청년집단은 공감을 포함 (사례 A-2, A-6)

- 청년남성과 여성은 결혼보다는 지금은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지만, 청년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에 이은 결혼, 그리고 자녀출산 등 순차적이고 정형화 된 생애 이행과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함 (사례 A-7, A-8, A-4)

## ■ 신혼부부

- 참여자들은 공평하게 돌봄을 분담하고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이 관건이라고 생각함. 일·가정양립을 잘 할 수 없다면 결혼도 자녀출산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등 일·가정양립은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음
  - 참여자들은 평등한 돌봄과 육아에 대한 민감성이 컸음. 남성도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육아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에서 일·가정양립에 우호적이지 않은 노동현실을 고려한다면 자녀출산을 인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임 (사례B-3, B-4)
  - 일에 집중하다보면 가정에 소홀해지고 가정에 집중하다 보면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임. 둘 다 챙기고 싶지만 선택을 해야 하는 분기점이 온다면 급여가 조금이라도 낮은 쪽이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대부분 여자라는 것이 노동시장의 현실임 (사례B-1)

## ■ 기혼집단

- 1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출산을 고려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는 아동성장환경의 안전문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육아 돌봄을 위한 지원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거론함
  - 자녀양육에 있어 인터뷰대상자들 사이에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조부모세대 양육지원이나 도움을 받기가 과거에 비해 쉽지 않다는 사실이 었음
  - 즉 고령화시대의 영향으로 인터뷰대상자들의 부모 가운데 대부분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응답자들 스스로도 부모에게까지 자녀양육의 부담을 드러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강했음 (사례C-1, C-2, C-6)

- 그동안 사적영역에서 자녀양육의 조력자였던 부모세대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 이상 육아 돌봄의 보조 인력이나 대체인력으로서의 활동이 축소해가고 있다는 점은 공적영역에서의 육아 돌봄 인프라 및 육아휴직이나 돌봄 정책 등 제도적 지원이 강화,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여초(女招)직장이라 할지라도 민간 사기업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활용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음. 모성보호와 권익에 취약한 민간 기업일수록 외부로부터의 강제력보다는 내부 여성근로자의 권리의식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임
  - 사례 C-6의 경우는 소규모의 생명보험회사로 여성근로자가 많은 직장이지만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에 해당. 그동안 구직급여나 출산전후 급여 등의 보장이 어려웠지만 내부적으로 여성근로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냄 (사례 C-6)
-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부담 이외에 자녀양육에 좋지 않은 사회환경, 교육관련 인프라의 부재 등도 추가출산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사유로 거론함.
  - 수시로 변하는 교육체계, 경쟁적 사회, 초과근무 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부족,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 환경 등 자녀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은 부모도 자녀도 둘 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양육 친화적이 아닌 사회 환경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사례 C-1, C-2)
  - 또한 전북은 아동들이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봄. 현재 관련 시설은 덕진구에 아동창의 체험관이 있어 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 등이 전주의 1곳 밖에 없고 각 시군에는 부재하기 때문에 교육시설에 대한 지역 간의 형평성도 문제라고 지적함 (사례 C-1, C-6)

#### 4) 의료 및 건강(임신과 출산)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참여자 가운데 여성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성인지적 감수성과 직장문화 환경 조성 등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평가함
  - 사례 B-1의 경우는 임신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된 사례로 딱히 드러내놓고 임신한 여성을 차별한 경우는 없으나 직장의 분위기가 편하지 않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됨 (사례 B-1)
  - 사례 B-2는 다태아로 임신 관련 여러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심정적으로 불편하였음을 호소함. 임신부가 편히 임신 중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이 아직은 어렵다고 봄 (사례 B-2)
  
-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접근이 어렵고 정책수혜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주변에서 정작 정책수혜경험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지자체에 따라서는 결혼지원을 위한 장려금에서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서비스와 주거지원까지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는 한 알 수 없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봄 (사례B-3)
  - 임신출산에 관한 여러 시책 가운데는 대상자 자격으로 소득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사업도 많음. 또한 출산지원 혜택도 다 자녀기준도 3명으로 하고 있어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지 않음. 따라서 모든 혜택과 기준을 선별적으로 정하는 것은 저출산 위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편적 복지의 접근과 첫째아부터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사례B-2, B-4)
  
- 결혼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시험관 임신, 다태아, 미숙아, 조산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어 모성보호와 안전분만, 출생 등을 위한 관련 지원정책 범위가 확대 되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욕구가 큼
  - 현재 임신 중인 신혼부부 가운데 사례 B-2는 다태아(쌍둥이)이지만, 국민행복카드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정책은 없는 상황임

- 또한 조산아의 경우, 의료비 이용 감면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생아 가족이 조산아 적격 조건을 확인하고 직접 등록해야만 지원받는 혜택을 알 수 있어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조산아에 해당할 경우 전문적인 의료시설과 건강보험공단과 연동이 되어 조산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신생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다태아 보험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입이 수월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함 (사례 B-2)
- 사례 B-2는 결혼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다태아(쌍둥이)와 조산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지원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임
  - 사례 B-2는 시험관에 의한 다태아가 아닌 자연 다태아에 해당하지만, 병원이나 주변에서 시험관 다태아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 주변에 다태아가 증가하고 있고 다태아에 대한 인식도 보편화 되어 있음을 실감하면서 저출산 사회인만큼 소수의 다태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필요에 대한 견해를 보임

## ■ 기혼집단

- 출산경험이 있는 기혼 참가자들은 임신출산 준비를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의 확대와 프로그램개발, 접근성 확대 등을 요구함
  - 출산의 경험을 오롯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남성들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회고함. 직장에서의 제도적 지원이나 문화조성이 선행되어야 남성들의 참여도 확대 될 수 있다고 봄 (사례 C-3, C-6)
  - 산모의 건강관리, 아기돌보기, 부부친밀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말강좌 등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등에서 개설하면 좋을 듯함 (사례 C-1)
  - 첫 임신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컸고, 출산이후에는 달라진 생활시간, 몸의 변화, 휴식시간이 없어 산후우울증 등을 경험하였으나 부모가 되어가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주변인식과 분위기 사이에서 힘들었음 (사례 C-2)
- 모자보건 사업과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신초기에 정보의 접근성이 낮으므로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임신진단 시 모든 지원정책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 저출산 사회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다고 들었지만, 정작 소득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지원정책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포기한 경험이 많음을 공통적으로 거론함 (사례 C-1, C-2, C-4)
  - 특히 임신초기에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임신진단 및 진료 시에 산모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나 모바일 연계 필요
  -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산모일수록 임신부의 보건소 등록률이 저조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 산모일수록 보건소 이용률이 떨어져 산모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정책홍보 방안 요구됨
- 초혼연령 상승과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고위험산모와 난임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지원정책은 소수에 불과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느낌
- 늦은 결혼과 난임, 시험관 등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었음. 난임검사와 시술, 태아 기형 선별검사 등 경제적 비용부담 컸음. 그러나 경제적 비용지원도 중요하지만 난임시술의 안정성,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정서적지지 등도 매우 필요하나 관련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 기관이 지역에 없어 불편을 겪음 (사례 C-1, B-2)
- 임신부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대한 문의와 상담, 사업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거점센터 필요
-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시랑 포털'이 운영 중에 있으나 일반 정보제공에 불과하여, 지역의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없음
  - 임신출산에 관한 어려움이 각 개인마다 다르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소득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다르므로 임신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에 관련된 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신청도 할 수 있는 센터가 절실하다고 제시함 (사례 C-2, C-3)

### 3. 요약 및 시사점

- 저출산 정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①보건복지부의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혼자·미혼자의 결혼·출산·양육 실태의 최근 경향과 특징들을 분석 ②지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평가 및 향후 수요에 대한 의견조사 ③청년, 신혼부부, 자녀양육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결혼출산 양육 관련 의식 및 태도, 애로사항, 정책 욕구 등을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주요결과 및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함

〈표 4-20〉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 실태 및 수요, 정책욕구 요약 및 시사점

구분	주요결과 및 특성 요약
1. 기혼자 및 미혼자의 결혼·출산·양육실태 및 특징	<p>(미혼남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북의 남녀가 전국평균보다 높음</li> <li>-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고 이상적인 여성의 삶은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응답률이 높아 여성은 가족중심 &lt;노동중심의 생애 경향이 큼</li> <li>- 신혼집 마련은 남녀 모두 장만해야한다는 평등의식이 전북)전국</li> <li>- 자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자)남자 부정적이지만 이상 자녀수와 희망자녀 수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gap이 크게 나타나 여성은 자녀출산에 대한 외부적 요인이 더 큼</li> <li>- 가장 필요한 결혼지원정책에 대해 전국과 전북의 남성 모두 "신혼집 마련"을 여성은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으로 응답</li> <li>- 특히 중요한 저출산 정책으로 전국 남녀보다 전북남녀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 주거부담이 큰 편임</li> </ul> <p>(기혼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북의 기혼여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li> <li>- 결혼당시 주택마련은 전북여성이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함 (자가 비율 낮고 반전세와 월세비율이 높음). 전세대출 비율도 전국평균보다 낮음</li> <li>- 가장 필요한 결혼지원 정책으로는 '신혼집 마련 지원' 이 전북이 전국보다 높음</li> <li>-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에서 했다는 응답률 73%로 높은 비율을 보임</li> <li>- 기혼여성의 계획자녀 수와 출산 자녀수의 gap은 전국)전북</li> <li>- 육아시간은 전북여성)남성보다 돌보는 시간이 많아 육아공평성 어긋남</li> <li>- 실제 돌봄유형과 희망돌봄유형의 일치도는 32.2%로 낮은 수준이어서 돌봄시설 및 서비스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li> <li>- 기혼여성이 일을 그만 둔 이유로는 직장문제와 육아 때문이라는 응답율이 가장 높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큼</li> <li>- 저출산 대응정책 중 우선순위는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을 꼽음</li> <li>- 저출산 정책 중 '일·가정양립 정책'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함</li> </ul>

구분	주요결과 및 특성 요약
<p>2.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평가 및 수요 (전문가 의견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의 혼인율, 출생아 수, 청년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감소와 유출이 지속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음</li> <li>- 청년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정책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봄</li> <li>- 전북의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 이 많음. 그러나 결혼축하금 지원과 결혼만남프로그램은 필요성 낮음</li> <li>- 일자리와 주거대책 강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과반 이상으로 특히 '학생·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은 매우 부족하 다고 평가한 반면 필요성은 높게 나타남</li> <li>- 전북의 일자리·주거 관련 정책은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되나 현재 정책 은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함</li> <li>- 보육돌봄지원정책은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를 가장 부족한것으로 평가</li> <li>- 출산양육정책중에는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와 '여성모성 건강 증진강화'를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 각 정책 중 '난임부부 지원'산모신생아 지원 확대)일·가정양육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높게 판단</li> <li>-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남성육아참여 확대' 정책이 가장 부족하 지만 향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함</li> <li>- 출산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과의 정책연계 강화와 인구정 책추진기반 강화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li> <li>- 저출산 정책은 소득기준없는 시책확대가 필요하다는 대다수가 동의함</li> <li>- 저출산 시책 중 '주거지원'시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음</li> <li>- 전북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는 과반이상이 부정적</li> <li>- 저출산정책개선으로는 예산 증대와 저출산관련 지원(수당) 강화를 꼽음</li> </ul>
<p>3. 심층면접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에게 '일'은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에 해당. 노동중심의 생애전망</li> <li>- 결혼은 주택구입과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삶의 질 하락으로 생각</li> <li>- 청년여성의 취업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직장 으로 주변의 선배나 가족의 경력단절 경험을 내면화 한 경향이 있어 결혼 과 출산에 대해 더 부정적임</li> <li>- 신혼부부는 주택대출에 대한 부담이 생활자금 부담으로까지 확대되어 자녀 계획이나 추가출산이 어렵다고 봄(자녀계획0명~1명)</li> <li>- 기혼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모성에 대한 불이익,여성차별이 여전하다고봄</li> <li>- 주거지원은 소득기준 제한으로 실제 혜택을 볼 수 없는 무늬만 정책임. 주 거소득기준 완화 필요</li> <li>- 결혼과 주택자금대출과 상환 등의 부담은 결혼과 출산시기를 지연하거나 추가출산의 직접적 원인→중소기업 청년에게 주택지원 강화</li> <li>- 기혼여성에게 주거는 자녀의 학령기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부담이 큼</li> <li>- 사교육비 부담은 추가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1자녀에게 집중적으로 교육비 투입(2자녀 출산 부정적)</li> <li>- 국기예방접종 이외 부모들사이에서 보편적이고 필수화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필요(ex:로타바이러스)→영유아 의료비부담 경감지원책 요구</li> <li>- 난임치료 지원정책 등 출산을 원하는 모든 부모를 위해 소득기준 완화</li> <li>- 난임우울증, 산후우울증등 임신부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정책부재</li> <li>- 고령화시대, 일하시는부모님들이많아 자녀돌봄을 부탁하거나지원불가능</li> <li>-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시설부족 등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삶에 대한 걱정도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li> </ul>



# 5

장

##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

Jeonbuk Institute

- 
1. 정책 추진 방향
  2. 정책추진 체계
  3. 분야별 추진과제



# 제 5 장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

## 1. 정책 추진 방향

### 가. 결혼과 출산 등 생의 이행기 지원을 위한 청년지원 사업 확대

- 전북 남녀의 조혼인율은 3.4건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인 4.2건을 밑돌고 있고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이 결혼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
- 청년층 실업증가와 취업준비 장기화로 인한 첫 직장의 입직과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상황. 더욱이 코로나 19 등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 일자리 및 주거현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세
- 중앙의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삶의 여건 개선, 자립도모를 위한 자산형성 등의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 전북도 중앙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의 정책을 확대 필요
- 전북은 청년층 인구유입과 유출억제를 위해 일자리 정책을 강화, 확대하고 있으나 주거지원 정책과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전북도 자체사업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자립·결혼·출산 등 생의 원활한 이행을 돕고 삶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출산지원 정책을 제안함【정책목표Ⅰ.출발지원】

### 나. 임신·출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임신모 안심체계 구축

- 만혼화,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고연령산모 및 고위험산모 증가하고 있고 난임으로 인한 보조생식술에 따른 다태아, 임신·산전관리 미흡 등으로 선천성이상아/미숙아 등이 증가일로에 있어 산모와 영유아 건강, 의료지원 확대 필요

- 전북은 남성불임환자가 2010년 대비 2020년 63.1% 증가하고 있고, 산후우울 증 고위험 판정을 받은 비율은 전국 최고(인구 천 명당 전북 45.3명 vs 광주 5.1명) 등으로 나타나 임신출산지원 정책의 성인지 관점과 결혼과 출산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추진이 요구됨
- 2021년 저출산 사업 중 임신·출산 분야 사업 건수는 15개(국비 10, 도 5)에 불과하며, 저출산 사업예산 총 4,516억 중 순 도비사업 예산은 23.4%(1,058억)인데 그 중 임신·출산 관련 예산은 14%(149억)에 불과함
- 정부는 청년의 생애기획 변화, 생식건강 악화, 환경적 변화 등으로 가임기 중심의 임신·출산 건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생애주기와 다양한 가정의 임신·출산과 남녀 모두의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
- 전북은 고연령 산모와 고위험 산모, 난임 증가에 따른 임신·출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안심체계 구축과 다양한 가정의 임신출산의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도 자체사업 확대 필요【정책목표Ⅱ.안심출산】

#### 다. 성 평등한 육아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 결혼 직전 취업상태(79.1%)에 있던 전북여성 가운데 임신·육아·가사 때문에 일을 그만 둔 여성의 비율(49.1%)이 여전히 높아 자녀양육을 위한 대체자원으로서 지역 인프라와 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66개소, 1.8%)과 직장 어린이집(25개소), 협동 어린이집(1개), 공동육아시설 등이 부족한 가운데 보육인프라의 도·농 지역 간 편중이 크고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미흡한 상황
- 공적 아동 돌봄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정책혜택을 받는 전체 아동은 14%에 불과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맞벌이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육

아공백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돌봄수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이 절실

- 전북의 양육과 돌봄지원 사업은 공적 영역의 ‘보육사업’과 ‘시설지원 및 다자녀 대상’ 중심의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돌봄수요와 인구감소로 인한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모든 부모의 양육부담과 여성 독박육아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성 평등한 육아와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균형 있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기본권리인 놀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정책목표Ⅲ. 함께돌봄】

## 라.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와 가족친화문화 조성

- 저출산 위기에 대한 해법이나 근로자의 복지, 코로나 19 대응차원의 근로자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변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기업 분위기나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제한적 사용과 사각지대 존재
- 전북의 남성육아휴직은 2010년 1.4%에서 2020년 1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전국 평균(19.4%)에 못 미치고 있으며, 육아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유연근무, 정시퇴근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등의 행사도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정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제도는 고용보험 가입과 임금근로자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책사각지대가 존재. 특히 전북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2.7%를 차지하고 있어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 일·생활균형 사각지대인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족친화 경영과 문화조성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발굴을 통해 청년 취업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인식 제고와 고

## 마. 대응기반 강화 : 도 자체사업 확대/지역 불균형 대응/협업체계강화

- 2021년도 전라북도 저출산 사업은 국비를 제외한 전체 264건 중 광역사업은 47건에 불과(17.8%)하며 나머지 217건(82.2%)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라북도의 예산과 사업량이 저조함. 또한 생애주기별 사업을 보면 청년대상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미미하여 정책 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도 자체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고위험임산모와 위험·위기출산(난임/조숙아/미숙아/다태아/선천성기형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임신·출산 안심체계 구축을 강화하도록 함
- 지역 인구감소와 저출산 현상은 임신·출산·양육 등의 인프라 축소와 부재 등으로 이어져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지역 불균형과 서비스의 격차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전라북도는 산부인과 전문의 비중이 낮고(전국 17개 시도 중 5위), 소아과 병원의 비중이 낮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7위) 분만취약지역도 6개군(무주, 부안, 진안, 임실, 순창, 완주)으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함. 적절한 인프라와 서비스 분배·확충을 위해서는 시설 부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거점시설 등을 설치·운영 하도록 함 **【세부추진과제 Ⅱ-1-1,Ⅱ-3-1,Ⅲ-3-1,Ⅳ-1-1】**
- 저출산의 원인은 일자리-결혼-주거-돌봄-일·생활균형-가치관의 변화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지만 이에 대한 해결은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간의 연계성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정책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배정 추진**【세부추진과제 V-1-1】**, 또한 지역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도민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통채널 등도 필요**【세부추진과제 V-2-1】**

## 2. 정책추진 체계<sup>1)</sup>



〈그림 5-1〉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추진 체계

1) 비전은 전라북도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년 전라북도 시행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을 반영함

### 3. 분야별 추진과제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과제구분 <sup>2)</sup>
I. 출발지원	1. 결혼 가능한 여건조성	● 중소기업 청년취업 멘토링 사업	신규
		● 신혼부부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 제안
		● 청년 취업 드림카드지원 사업	확대
	2. 청년의 자립지원	● 청년 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신규
● 청년 자산형성 통장지원 사업		확대	
II. 안심출산	1. 안심체계 구축	● 전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신규
		● 난임종합지원 사업·난임지원플러스사업	신규
	2. 영유아건강지원	● 신생아건강보험지원 (조숙아·미숙아·다태아 등 위험출산)	신규
		● 영유아예방접종 추가지원(로타바이러스)	신규
	3. 서비스 격차 해소	● 산(産)-휴(休)건강증진거점센터	신규
III. 함께돌봄	1. 촘촘한 돌봄체계구축	● 농어촌 맞춤형육: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신규
		● 초등저학년 아파트 안심 돌봄센터	신규
	2. 아동행복권 보장	● 어린이 전통놀이 융복합 체험관	신규
	3. 포용적 가족문화	● 미혼모·부자 가족통합 시설	확대
IV. 일·살 균형	1. 가족친화문화조성	● 전북 일·생활균형센터 설립 및 운영	신규
	2. 가족친화제도정착	● 중소기업 워라벨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신규
V. 대응기반 구축	1. 행정체계 개선	● 저출산 대응 총괄기구 설치	신규
		● 저출산 조례개정 : 다자녀기준 개선	신규
	2. 거버넌스 구축	● 저출산 극복 공감 토크콘서트	신규
	3. 정책체감 제고	● 저출산 정책홍보 플랫폼 구축	신규

2) 과제구분에 있어 “기 제안”은 2020년 정책연구과제「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환경 조성방안」을 통해 본 연구자가 제안 한 사업이며, “확대”는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자체 사업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 “신규”는 본 연구과제에서 제안사업

## 가. 출발지원 : 청년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 1) 결혼 가능한 여건 조성

#### I-1-1 중소기업 청년취업 멘토링

##### □ 필요성 및 목적

-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이 2016년부터 추진 중에 있음
-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에 있어 청년희망 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2021년 총 1,222개소 중 전북은 17개소에 불과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
- 지방대학 출신 청년여성의 지역 취업경향 강화는 최근의 인구이동 패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고(고용우 외, 2018) 수도권의 높은 주택가격과 생활비 부담 등으로 지역에서의 취업을 선호하지만, 지역 중소기업 매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음
-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지역 우량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선배(멘토)가 구직이나 진로설계를 고민하는 후배(멘티)에게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정보 제공, 상담, 조언 등 취업준비를 도와 지역 청년들에게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 고용안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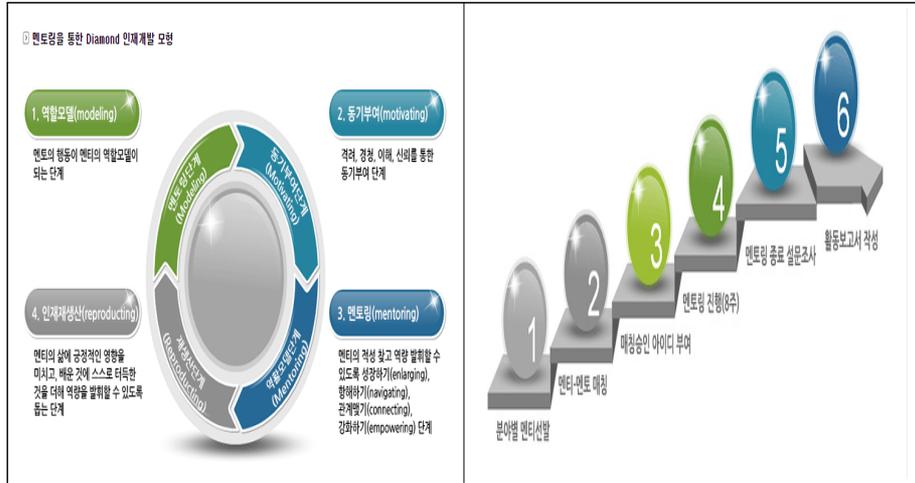
##### □ 사업내용

- 참여대상 : (멘티)전북 거주 만 19~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멘토)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북 소재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 목표인원 200명
- 사업내용 : 전북지역 중소·중견기업 취업연계를 위한 멘토-멘티활동
  - 기업별 채용 노하우, 조직문화, 직무적응 등 선배(멘토)의 경험과 지식전수 및 직무별 경력개발 모델제시
  - 진로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경력설계를 위한 방법 및 지지, 네트

워크 만들기 등 노하우 전수

- 수행기관 :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
- 추진방법 : 인력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 미취업청년을 매칭, 멘토-멘티프로 그램 운영(8주 운영)

□ 타 지자체 사례



<그림 5-2> 서울시 청년취업멘토링 사업 : 서울일자리플러스 센터

### □ 필요성 및 목적

-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증가함. 주거에 대한 불안은 결혼과 출산, 추가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 필요
- 현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은 정읍, 남원, 김제시가 추진 중이나 주택마련 비용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도시를 포함하는 등 전북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함
- 또한 본 사업은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부부합산 5천~7천만원 이하 등) 정작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제한적이므로, 소득기준 상향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라북도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예정 3개월 이내 또는 혼인 신고 5년 이내
- 사업시기 : 2022년~
- 지원내용 : 주택임차보증금대출 이자 3.0% 지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최대 1.5억원 한도)
- 대출기간 : 기본2년, 대출연장시 최장 10년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특례사항 : 자녀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 □ 타 지자체 사례

〈표 5-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타 지자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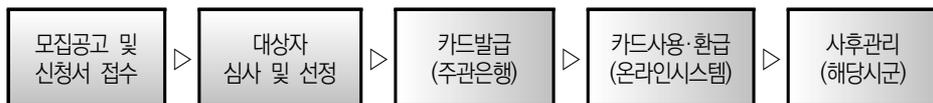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지원대상	• 혼인 신고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	•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직장인 - 본인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1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최대 5,000만원(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지원금리	• 연 2.8%	• 연 3.0%
대출기간	• 기본 2년 • 대출연장시 최장 10년	• 기본 2년 • 대출연장가능
취급은행	• 부산은행	• 농협은행

### □ 필요성 및 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미취업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감 없이 취·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취업준비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크므로 청년의 사기를 진작하고 취업 성공을 독려하여 사회진입 촉진을 유도
- 타 지역 사례로는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청년 디딤돌카드), 제주 등이 있고 전라북도 관내에서는 익산시가 유일하게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사업을 전라북도 관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 가구별 인정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인 만18~39세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35~39세 이하
- 지원내용 : 취·창업 활동비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50만원×6개월)
-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필요한 항목 등으로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 직접적인 활동비 외에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 포함
- 지급방법 : 청년취업 드림카드(체크카드) 발급 → 포인트 차감
- 추진절차 :



## 2) 청년의 자립지원

I-2-1

### 청년자산형성 통장 지원 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구직기간의 장기화, 생활비 대출의 증가, 전세의 월세화 등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중장기 자산축적이 곤란한 상태이며 소득의 불균형보다는 자산의 불균형으로 인한 청년층의 부의 양극화 심화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도록 함
- 본 사업은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전북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농·축산업을 반영하고 있어 전북의 전체 공통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필요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라북도 거주하는 만 18~39세 근로 중인 청년으로 연령·거주·근로·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청년사업자 :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공공일 기준 3개월 계속 운영 중인 자
  - 농·축산업 소득자 : 전라북도 관내에서 공공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농·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사업비 : 도 50%, 시군 50%
- 수행기관 :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
- 사업내용 : 근로청년이 매월 일정금액(10/15만원)을 적립하면 동일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청년자립 자금으로 활용

### □ 필요성 및 목적

-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의 취업준비로 인한 청년부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로 인한 청년들의 삶의 질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취업준비생의 경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미 928만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며, 대출이나 카드빚 연체경험 등도 42.4%나 됨)
- 청년들의 부채가 줄지 않는 원인은 소비문화보다는 부족한 청년복지정책, 청년들의 적은 소득, 부족한 금융정책에 더 큰 비중이 있음 (김양중, 2018)
- 청년들이 채무예방과 경제적 안정지원을 통해 안전함을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기에 선제적인 대출 및 지출 관리 습관과 올바른 자산형성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필요함
- 청년의 금융역량과 근로생활 역량, 저축과 자산형성 등 재무생활에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 청년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이 필요함

###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현재 전북 청년허브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 사업내용 : 온라인 금융멘토링, 근로역량 및 생활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부채관리와 대출, 저축과 신용관리, 자산관리와 재무설계 컨설팅

## □ 타 지자체 사례



01 온라인 금융연동링	02 선택프로그램	03 저축 사용 계획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니 Step.1 저축 생략 계획 (4주/월)</li> <li>• 소니 Step.2 저축계산 계획 (4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니 Step.3 근로·생활·양육 지원 / 생활·의료·양육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니 Step.4 저축 사용 계획 컨설팅: 저축 잔고 후 200만원 사용 계획 수립</li> </ul>



〈그림 5-3〉 광주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 나. 안심출산 :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 1) 안심체계 구축

#### II-1-1 전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 필요성 및 목적

-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 진단으로 인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다수가 정서적 어려움, 부부관계 및 사회관계에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난임 관련 스트레스나 임신부의 산·전후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이에 난임 및 임신, 출산 관련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돕기 위해 전국에는 5개소의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
- 산후우울증의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비율이 지역별로 최대 9배의 차이(전북 45.3명 VS 광주 5.1명)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2019년 기준, 출생아 대비 고위험판정 산모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인 것으로 나타남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의원실, 21.7.14)
-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북에 유치하여 산후우울증 등 산모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을 통해 전북의 출산율 및 출산여성의 삶의 질 제고 등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함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모든 임산부 및 난임부부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내용 :
  - 난임부부 및 임산부, 산모, 양육모 대상의 맞춤형 상담서비스
  - 심신안정, 정서적지지, 심리교육 등의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및 방문상담
  -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해당 진료기관 연계

- 사업수행 기관 : 도내 대형 병원 등의 의료기관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위탁사업

## □ 현황 및 중앙의 추진계획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1) : 국립중앙의료원('18.6월)
  -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4) : 인천(길병원), 대구(경북대병원), 전남(현대여성 아동병원), 경기도(인구보건복지협회경기지회)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확충을 위해 2020년 5차례에 걸쳐 공모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담센터 설치 대상인 의료기관 참여부진 및 시·도 공모사업 신청 저조로 센터 확충에 난항, 충청권, 강원권 및 영남지역 등 상담센터 부재한 지역 중심으로 21년 1개소 추가 개소 예정
- 향후 계획
  - '18년 4개소 → '20년 5개소(+1)→ '21년 6개소(+1)→ '23년 8개소(+2)

## □ 필요성 및 목적

- 만혼화로 인한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증가
  - 2020년 기준 불임치료 환자 수는 231,856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데이터)
  - 2020년 불임 환자는 2010년보다 47,354명 증가함
  - 2020년 30대의 불임진료비는 117,606,967천원으로 2010년 대비 약 8.5배 증가
- 의학적으로 불임원인 발생은 남녀 요인이 동일한 비율이어서 각각 40% 내외로 알려져 있으나, 남성 진단비율은 여성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어 현 사업에 대한 성 평등 관점에서의 정책 검토가 필요함(황나미 외, 2010)
  - 전라북도 불임치료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4,568명으로 2010년 (5,158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남성 불임환자 수는 2010년 810명에서 2020년 1,321명으로 63.1% 증가 함. 동 기간 여성 불임환자는 4,136명에서 3,035명으로 26.6%감소
- 난임은 배우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안녕을 위협하고 있지만, 의료적인 접근과 비용지원 등이 제한적(소득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 필요함
- 전라북도가 2022년부터 추진하려는 난임·임신·출산 3대 특별시책 『원스톱 맘스케어 패키지』 사업 중, ①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② 한방 난임치료비지원 사업 이외에 본 연구과제에서 제안하는 ③ 난임검사 진단비 지원 ④난임부부 자조모임을 추가하여 난임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함

## □ 사업내용

- ①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사업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난임여성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규모 : 1,600명
  - 사업비 : 190백만원(도비 30%, 시군비70%)

- 사업내용 : 난임시술정부지원 횡수 소진자 등에게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 연 최대 4회, 회당20만원
  - 150만원 소득별 차등지원

## ②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난임부부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규모 : 4,568명
- 사업비 : 2,284백만원(도비 30%, 시군비40%, 기타 30%)
- 사업내용 : 1인당 4개월 한약,침,뜸 등 한방 난임치료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③ 난임검사 진단비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난임부부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규모 : 4,568명
- 사업비 : (도비 30%, 시군비70%)
- 사업내용 : 난임검사를 받은 부부 대상으로 비급여에 해당하는 난임진단검진비 1회, 20만원 지원

## ④ 난임부부 자조모임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난임부부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규모 : 4,568명
- 사업비 : (도비 30%, 시군비70%)
- 사업내용 : 난임부부의 정서적지지, 상담, 정보공유(의료인, 사회복지사, 여성학자, 심리학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

## 2) 영유아건강지원

### II-2-1

### 신생아건강보험지원(조숙아·미숙아·다태아 등 위험출산)

#### □ 필요성 및 목적

- 만혼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의 증가, 난임으로 인한 보조생식술에 따른 다태아 임신, 산전관리의 미흡 등으로 선천성이상아/미숙아/다태아 출생률 대폭 증가
  - (선천성이상아) '09년 출생아 1만 명당 516명→'18년에는 1,538명으로 3배 이상 증가
  - (미숙아) '09년 출생아 1만 명당 247명→'18년 392명으로 160% 증가
  - (다태아) '09년 분만 1만 건당 143건→'18년 210건으로 46.8% 증가
- 저체중아·조산아·다태아 등과 같은 이상 출산 결과는 출생아의 영유아기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 만성질환 증가 등 전 생애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미침. 또한 해당 가족과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킴(이상림, 2014)
-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생의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for life)을 보장해주기 위해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을 보장, 보호해주기 위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추진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전라북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조숙아·미숙아·단태아를 둔 모든 가정→초기 시범단계를 두고 전 도민으로 확대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내용 : 질병과 상해발생 및 치료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5년간 1인 월 30,000원 이내 지원
- 사업비 : (도비 30%, 시군비 70%)

### □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총 16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 국가예방접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후 2개월 신생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라는 선택접종은 대부분의 부모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있음
  - 로타바이러스 장염은 대부분의 2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번 이상 걸리는 흔한 장염 중의 하나로 6개월 미만 10%, 6~24개월 사이 80~90% 감염
  - 한국은 6~24개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같은 집단생활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하여 감염위험이 더 높아 부모들 사이 접종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비용부담(20~30만원)을 느끼는 상황임 (\*접종률 : 2017년 기준 완전(1가 백신 2회, 5가 백신 3회)접종률 : 85.6%)
- 영유아의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for life)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내용 :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이외에 추가접종)
  - 국민행복카드에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추가
- 사업비 : (도비 30%, 시군비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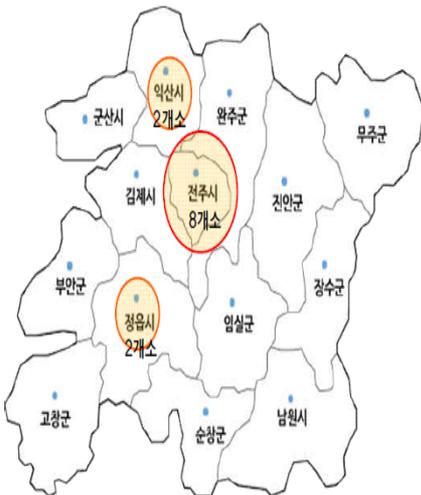
### 3) 지역불균형 및 서비스 격차 해소

#### II-3-1 산(産)-휴(休) 건강증진거점센터 설립<sup>3)</sup>

##### □ 필요성 및 목적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는 임신·출산·양육 인프라 붕괴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지역 간 불균형 및 계층 간 서비스 격차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임
  - 출생아 수 감소, 낮은 의료수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전국의 산부인과 및 의사 수 감소
  -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 없는 분만취약지는 6개 군(무주군, 부안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이고 산모의 수요가 높은 산후조리원은 14개소에 불과
- 임신·출산 및 양육인프라가 취약한 인접지역을 연계하는 공동인프라 구축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인프라 및 서비스 불균형 문제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2020년 상반기 전라북도 산후조리원 현황〉



〈산부인과 있으나 분만실 없는 지역 현황〉

구분	지역	시군구
부산	2	강서구, 기장군
울산	1	북구
경기	3	기평군, 과천시, 하남시
강원	3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5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남	5	태안군,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전북	6	무주군, 부안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전남	5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나주시, 장흥군
경북	3	의성군, 칠곡군, 문경시
경남	6	남해군, 창녕군, 함안군, 함창군, 하동군, 산청군
총계	40	37곳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17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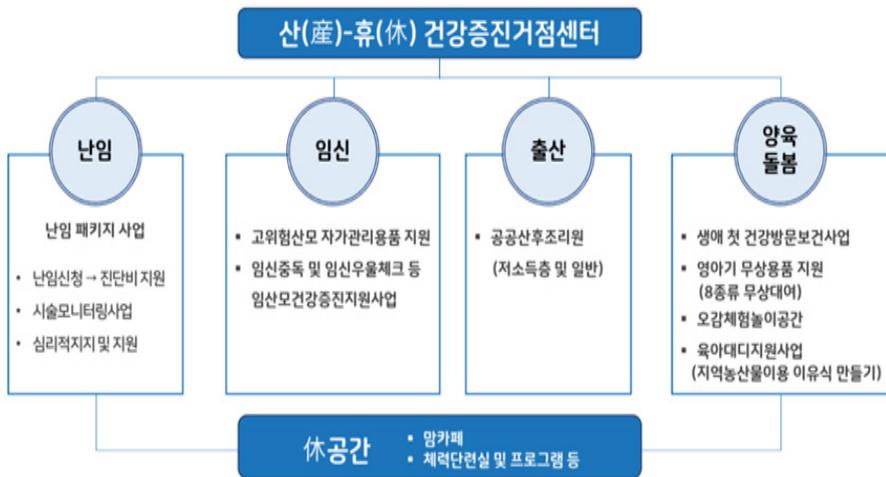
〈그림 5-4〉 전라북도 산후조리원 현황 및 분만취약지역

- 3) 본 사업은 연구자가 2021년 2월에 김제시에 제안 한 사업으로 현재 중앙의 인구감소지역특화 사업의 예비후보군으로 선정(전국의 5개지역), 공모사업 예산 확정 후 추진예정

## □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 : 전라북도 김제시
  - 분만취약지역인 부안군과 고창군 등을 연계하는 지역거점센터로 운영
- 사업시기 : 2022년~
- 사업내용 : 산(産)-휴(休) 건강증진센터 설립 및 운영
  - 난임지원센터 운영(모성휴식 지원, 시술모니터링 및 정신건강 사업)
  - 임신지원센터 운영(임산모건강증진사업, 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 출산지원센터 운영(공공산후조리원, 양육돌봄 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 휴공간(담 카페, 체력단련실)

## □ 산휴건강증진센터 설립(안)



<그림 5-5> 산(産) - 휴(休) 건강증진센터 설립안

## 다. 함께 돌봄 :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 1)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Ⅲ-1-1 농어촌 맞춤형 : 농번기 주말 돌봄방<sup>4)</sup>

##### □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르게 노동시간은 해 뜨는 시각부터 시작되어 해 지는 시각까지 일정하지 않고 일률적이지 않아서 보육시간 이외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봄철인 4월부터 가을 추수철인 11월까지 농사일의 대부분이 집중되는 농번기에 밤낮없이 농사일에 몰입해야하기 때문에 새벽, 야간, 주말, 공휴일 까지 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농사일로 성인 보호자 없이 아이들끼리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농사일을 해야만 하는 농어촌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춘 보육시간과 보육유형 마련이 시급함
- 농번기란 특정시기에 맞춘 농번기 주말 돌봄방과 같은 형태의 보육 유형과 보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연장보육, 야간돌봄 혹은 지역 거점별 24시간 보육 등을 지속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농번기 주말 보육 실시로 원아의 보육 공백과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 농어촌어린이집 5개소 선정 지원
- 지원내용 : 주2일(토,일) 원아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8시간 보육지원
- 지원기준 : 영유아 7인 이상 15인 이하, 시설장, 보육교사 또는 돌보미 2명
- 지원기간 ; 4개월(운영기간 자율결정) 1년간 시범사업 운영 이후 추진
- 총 사업비 : 약 5,760만원 (도 30%, 시군 70%)

※ 시설장 192만원(1명×1.5만원×4시간×8일×4개월), 돌보미 960만원(2명×1.5만원×10시간×8일×4개월)

4) 본 사업은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전북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2021)에서 이주연 박사가 제안한 사업을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반영함

□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맞벌이 가구 증가, 가족의 핵가족화 등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공적 아동돌봄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백은 지속적으로 발생
  - 공적 아동돌봄 정책의 혜택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14%에 불과
  -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동안 보호자 없이 혼자·형제자매 등 아동만 있는 경우도 10명 중 4명이나 되고(아동종합실태조사, 2018), 코로나19 상황 시 아동 혼자 집에서 5시간 이상 보내는 경우도 10명 중 약 3명으로 나타남(아동권리보장원, 2020)
- 인구감소 등으로 돌봄인프라가 취약한 소도시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돌봄 형태를 반영한 마을 단위의 민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적 아동돌봄 정책의 한계 극복과 돌봄의 틈새·사각지대 해소 필요
  - 아파트 유휴공간(어린이집 설치공간, 주민공동시설 등)을 지원받아 아파트 주민협의체 및 아파트 자치조직 등이 주축 되어 아파트 내 아동 대상 돌봄 수요 대응 및 다양한 형태의 돌봄 지원
  - 인구감소지역 대상,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후 확대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인구감소 지역 소재 아파트 거주 만 12세 아동
  - 아파트 거주 아동 10~15명, 가구소득 수준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내용 : 아파트 유휴공간(주민공동시설 등)을 활용하여 민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동 돌봄 지원
  -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전환하여 시설 조성, 돌봄공간의 리모델링

5) 본 사업은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읍시 인구정책 수립연구』(2021)에서 이주연 박사가 제안한 사업을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반영함

비용지원, 인건비(돌봄지원 주요활동가 2인)와 운영비(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등) 지원

- 학기 중에는 오후 2시~8시,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오후 7시 운영, 요구사항에 따라 간식과 점심 제공, 숙제 봐주기와 다양한 형태의 돌봄 지원

- 추진절차 : 아파트 내 돌봄 활동가와 아동 모집 → 입주자대표와 아파트주민 협의체, 관리사무소장, 아동 부모 등으로 구성된 돌봄 운영위원회 회 구성 → 사업신청 할 수 있는 절차로 사업 공모 추진

## 2) 아동행복권 보장

### Ⅲ-2-1 어린이 전통놀이 융복합 체험관 설치 및 운영<sup>6)</sup>

#### □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대책은 자녀를 낳은 당사자를 위한 사회정책뿐만이 아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좋은 도시환경과 도시공간 정책, 교육정책 등 사회전반의 모든 측면을 포괄해야 함(조경욱, 2021)
- 자녀의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의 욕구를 고려할 때, 현재 전라북도도 아동양육 관련 시설이 미흡하며 서비스지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정책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지역 아동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역량발달과 창의적인 아동 육성을 추구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에 대한 투자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으로 적극 수용되고 있음
  - ‘아동친화도시’는 2021년 1월 현재 전국의 47개 지자체가 지정된 가운데 전북은 전주, 완주, 군산 등에 이어 김제시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 자녀와 함께 온가족이 활동할 수 있는 아동중심의 다양한 놀이 체험관을 마련하여 아동의 잠재역량 발휘와 창의적인 아동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 전라북도 도농 특성을 반영하여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전통놀이 체험 및 전시 등을 토대로 4차 산업의 기술(AR, VR, ICT, Hologram)을 접목한 융복합 형태의 놀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회복하고 창의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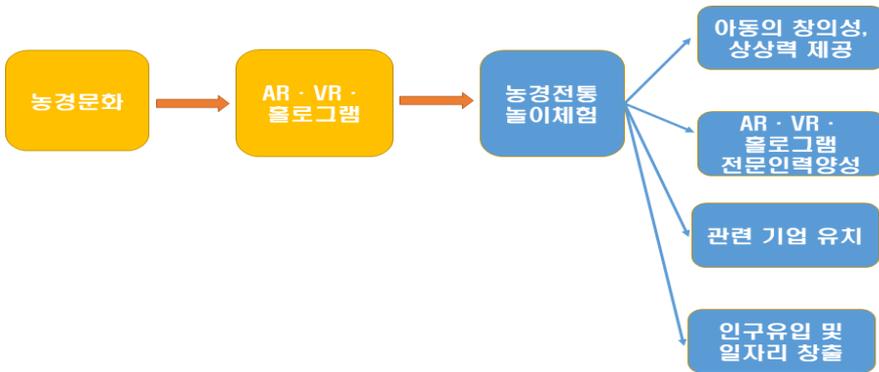
#### □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 : 김제 벽골제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6) 본 사업은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김제형 인구정책 선순위 모델개발』(2021)에서 본 연구자가 제안한 사업을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반영함

- 사업내용 : 전통놀이 융복합 체험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 농경문화 전통놀이발굴 및 목록화
  - 농경문화 전통놀이 전시관
  - 농경문화 전통놀이 AR·VR 체험관/ 홀로그램 체험관
  - AR·VR·홀로그램 전문교육실습실 -AR·VR·홀로그램 기업지원 제작실
- 사업비 : 75억 (국비60, 도비 5, 시비 10)



〈그림 5-6〉 어린이 전통놀이 융복합 체험관 사업내용

□ 타 지자체 사례 : 부산 AR·VR 융복합센터

- 사업내용 : 부산 VR/AR 산업 고도화 및 스타트업 발굴/VR/AR 체험실/로봇체험관/가상현실 시뮬리이터 체험실/교육장



자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3201824017034/>

〈그림 5-7〉 부산 AR·VR 융복합센터

### 3) 포용적 가족문화

#### Ⅲ-3-1 미혼모·부자 가족 통합지원 시설<sup>7)</sup>

##### □ 필요성 및 목적

- 아이를 낳아도 양육하지 못하는 미혼모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유기, 입양되는 아이들 중 미혼모 출산 아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전국 미혼모·부 현황 27,843명(미혼모 20,761명, 미혼부 7,082명)
  - 전북 미혼모·부 : 1,169명(4.2%) /모 846명, 부 323명
  - 유기아동 상당수는 미혼모 아동으로 추정, 입양 아동 83.3%(315명)가 미혼모 아동(보건복지부, 2018)
  
-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부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혼모·부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일상 속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출산·양육을 포기하는 등 지속적 문제 발생으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임
  - 최근 베이비박스 앞 신생아 사망(11.3), 중고물품 거래 앱에서 아이입양계시물(10.16)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마련 중
  
-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학업취업 등의 자립지원 강화, 사회적 차별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건립을 통해 미혼모부자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 전북은 2021년 현재 미혼모자 공동시설 2개소, 모자 자립시설 5개소 등 총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미혼부자도 증가 추세이나 이들을 마땅히 수용할 시설이 없음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을 광역 거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등을 포함하는 거점시설 운영

7) 본 사업은 김제시 내부에서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제안 한 사업임

- 현재 미혼모자 시설이 운영 중인 전주, 익산, 군산, 완주군을 제외한 지역에 시설 접근성을 고려한 미혼모·부자 가족 통합 시설 추가 설립 추진 및 운영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 총 사업 비 : 국비50%, 지방비50%
- 사업내용 :
  - 미혼모·부자 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주거지원)
  - 생활시설 입소 및 의료지원(산전·분만·산후검진지원)
  - 육아정보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임신 정보 제공, 자녀출산·양육시 응급지원 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체험학습, 자조모임 등
  - 자립을 위한 구직·취업 정보 제공
  - 부모 및 아동발달 상담 및 공동육아방 운영

## 라. 일·삶 균형 : 가족친화 문화 조성

### 1) 가족친화제도 정착

#### IV-1-1 전북 일·생활균형 센터 설립 및 운영

#### □ 필요성 및 목적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생활 균형 인식 및 요구가 확산되고 있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의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에 대한 중요성 및 사회적 요구가 증가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지원 조직의 설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일·생활균형 지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책추진 여건은 미흡한 상황이어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19년도 일·생활 균형지수(20년도 발표) 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일·생활균형지수는 전국 13위(47.4점)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전남(55.2점, 전국 3위)보다 낮은 수준임
  -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지수변화 : ('18) 50.2 → ('19) 47.4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이 지역사회와 근로현장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역 거점센터의 설립과 운영 필요
  - 일·생활 균형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 대구, 광주, 제주, 부산, 전남 등 전국의 6개 지역임
  - 전북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및 서비스가 취약한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이 92.7%나 되고 있어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정착을 지원 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이 시급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내용 :

- 일·생활균형 기반조성 :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및 연구, 일·생활균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일·생활균형 지표관리, 센터 운영 중장기 계획수립 등
- 일·생활균형 직장환경 조성 지원 : 기업컨설팅 및 직장교육, 종합상담
- 일·생활균형 사회환경 조성 지원 : 인식확산, 홍보, 커뮤니티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포럼 운영

## □ 타 지자체 사례

〈표 5-2〉 일·생활균형센터 운영 타 지자체 사례

지자체 운영센터	사업내용
서울 일·생활균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및 교육</li> <li>- 진단 및 컨설팅</li> <li>- 사회문화조성</li> <li>- 인식개선캠페인</li> </ul>
대구 일·가정양립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친화기업문화조성</li> <li>- 시민공감문화정착</li> <li>- 가족친화네트워크</li> <li>- 일·가정양립기반구축</li> </ul>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스톱종합상담지원</li> <li>-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li> <li>- 소통커뮤니티 운영 및 네트워크구축</li> </ul>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생활균형직장문화확산</li> <li>- 사회적돌봄문화 지역사회 확산</li> <li>- 가족친화문화 지역사회 확산</li> </ul>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라벨 직장환경조성 지원: 기업 컨설팅, 직장교육</li> <li>- 워라벨 사회환경조성 지원: 인식확산, 홍보 및 통합정보제공</li> </ul>
전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지원: 현안 연구 및 정책개발, 일·생활균형협의회 운영</li> <li>- 기업지원: 성 평등 노동환경조성을 위한 컨설팅, 교육, 상담, 포럼</li> <li>- 시민지원: 캠페인, 자조모임, 교육, 포털사이트운영, 전시공연</li> </ul>

## 2) 가족친화문화 조성

### IV-2-1 중소기업 워라벨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 □ 필요성 및 목적

- 일·생활균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개선 등의 실질적 변화 필요
- 전북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및 서비스가 취약한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이 92.7%나 되고 업종별·규모별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과 기업에 일·생활균형 고용문화 정착 지원과 활성화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라북도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신청 예비기업, 그 외 도내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내용 :
  - 일·생활균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공간 활용, 근로자의 복지지원 등에 관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 컨설팅을 받은 기업 가운데 일·생활균형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 활동,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
  - 사업협력기관 : 현재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경영자총협회'와 전북연구원 일·생활균형센터(TFT)가 협력하여 추진

## V.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

### 1) 행정체계 개선

#### V-1-1 저출산 대응 총괄기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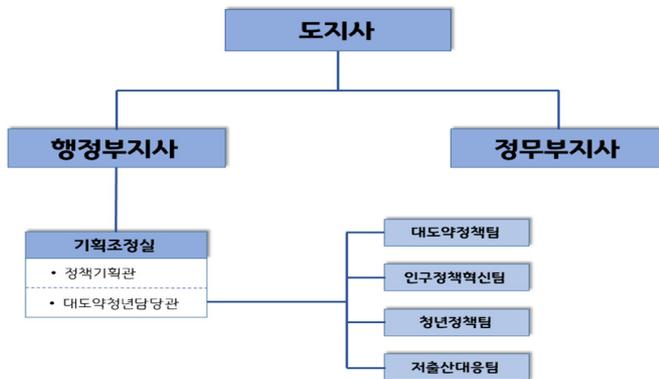
##### □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현상은 일자리, 주거, 교육, 양육 및 돌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
- 저출산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획, 조정 및 총괄 할 수 있는 기구와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배정 추진

##### □ 사업내용

- 현재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내 대도약청년과를 대도약청년담당관으로 승격하여 대도약정책팀, 인구정책혁신, 청년정책팀, 저출산 대응팀으로 업무분장 추진
  - 지자체의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이 청년의 미혼화, 만혼화, 청년인구의 유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저출산 정책은 청년정책 및 인구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필요
  - 현재 기획조정실 내 '대도약청년과'를 '대도약청년담당관'으로 승격하여 저출산 및 인구정책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및 총괄 하도록 위상과 권한 부여

##### □ 행정조직도



<그림 5-8>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도

**□ 필요성 및 목적**

-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 사회구조적인 저출생에 관한 변화된 가치관과 인식을 반영하여 조례에 포함된 여성 차별적 용어(문정희, 2020) 및 정책 수혜 기준과 범위 등의 개정 필요

**□ 사업내용**

- 용어 및 정의 변경 : 조례에 사용된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
  -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신부가 아이를 낳는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차별적인 인식 발생, 일정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적다는 중립적 의미의 ‘저출생’으로 변경(\*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2020.7.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함)
- 정책대상 기준 변경
  -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수혜자의 체감도 높은 지원 사업 추진 필요

## 2)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V-2-1 저출산 극복 공감 토크 콘서트

---

#### □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청년의 인구유출 등 지역 인구감소 현실을 짚어보고 도민이 바라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들어보고 함께 고민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 개최
- 각계각층의 다양한 패널들이 제기한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바라는 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신규과제 발굴 및 기존 정책의 보완·개선에 활용

#### □ 사업내용

- 저출산 극복 공감 콘서트
  - 연 1회 개최(1회 개최하고, 도출된 의견에 대한 정책반영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인구의 날에 공표)
  - 저출산 및 인구정책 이해제고를 위한 정책소개, 도민 공감콘서트, 도민의 목소리를 듣다 등으로 구성

### 3) 정책체감 제고

V-3-1

#### 저출산 정책홍보 플랫폼 구축

##### □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현상은 일자리, 주거, 교육, 양육 및 돌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체계 필요
- 전라북도는 출산을 제고를 위해 임신 및 출산, 일자리, 주거, 교육, 양육 및 돌봄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추진 부처와 지원 기관이 다양한 관계로 일반인들의 정책 인지도와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 정책이 보편적 정책으로 수혜자의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일부 정책에 따라서는 소득, 연령, 지역 등의 제한 기준이 있고 때로는 신청방법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FGI 결과)
- 지역에서 시행하는 저출산 정책을 한 공간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수혜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저출산 정책 효과제고 및 도민의 체감도를 향상 시키도록 함

##### □ 사업내용

- 저출산 정책 홍보 플랫폼 구축
  -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 인구정책, 저출산 정책, 일자리 및 주거지원 정책, 임신출산 건강증진 정책 등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정책이 한 번에 제공되는 환경 제공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민지·박영주(2019), 대구지역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연구, 대구여성가족재단
- 김수연(2018), 경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양중(2018), 충남 청년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김은지 외(2019),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 :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지 외(2020), 중장기 저출산 대책 수립 연구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문정희·김성순(2020),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2021~2025) 수립,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미선(2017),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혜경·민소담(2016), 강원도 비혼 2030 세대의 결혼관 및 정주의식 실태조사
- 선민정(2020), 제주지역 2030 미혼청년의 결혼·출산의향과 정책 대응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양정선 외(2015), 제3차 경기도 저출산대책 기본계획(2016~2020)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양정선 외(2018), 지역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출산친화 환경 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양정선·최금순(2018), 경기도 신혼부부의 주거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 모색,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원미라(2017),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2018~2022),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
- 유재언 외(2019),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이지혜(2017),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경욱(2021), 김제형 인구정책 선순위 모델 개발, 김제시  
조경욱·전아람(2020), 전북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방안, 전북연구원  
최은희 외(2017), 충청남도 맞춤형 출산정책 5개년 계획,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하정화·이은지(2019),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지원 개선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허미영·허목화(2016), 강원도 출산 지원 정책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홍승아 외(2018),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나미·황정혜·김지은(20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도자료

서울신문(21.7.14), '통계부터 관리까지, 우울한 엄마는 정책에 빠졌다'

정책연구 2021-22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

---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351-3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